

인권정보자료실

R1.1.6

인권하루소식

합본 VI 호
(501호 ~ 674호)



1996. 9.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합본 VI 호 (501호 ~ 674호)

인권정보자료실
R1.1.6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96년 4월

(제614호 - 제632호)

시위도중 사망한
연세대 노수석씨의
명복을 빕니다.
- 인권운동사랑방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일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목격자, 노수석씨 구타 증언

언론, '노씨 사인 심장이상'이라고 단정 보도

"시위진압경찰에 쫓겨 동대문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형을 만났을 때 수석이 형은 '나 맞았어'라고 2-3차례 말했다. 수석이 형은 계속 시위대열과 함께 달렸지만 다리가 휘청거리는 등 매우 힘겨워 보였다."

지난달 29일 '대신자금공개'와 '교육재정확보'를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다가 경찰의 과도한 폭력진압과정에서 숨진 노수석(연대 2년)씨의 후배 남기돈(연대

법학 1년)씨의 증언이다.

되풀이 되는 경찰 폭력

91년 강경대(당시 명지대생)씨가 경찰의 방패에 맞아 사망한 후 모두는 입을 모았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없어야 한다"고. 김영삼씨가 대통령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역사를 모았다.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섰으니 군사정권 시절의 폭압과 독재는 사라질 것"이라고.

그러나, 만 5년이 지난 96년 봄, 또다시 꽃다운 나이의 한 대학생이 시위도중 경찰의 폭력진압 과정에서 사망하고 말았다. 모두의 기대가 무참히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언론, 부검 소견 단정 보도

31일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노씨의 부검이 진행됐다. 부검의들은 "심장이상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라는 소견을 밝혔고, "정확한 시인규명은 조직검사가 끝나는 이번주중이나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는 사인을 추정할 수 있을 뿐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그런데, 1일 오전 대부분의 언론보도는 이를 확정된 결론인 듯 보도했다. '노군 사인은 심장이상' 부검소견이 최종결론으로 둔갑되는 명백한 오보였다.

그러나, 언론보도의 문제점은 단지 오보 여부에 있는 것은 아니다. 실사 노군의 직접사인이 심장이

상에 있다 하더라도 심장에 이상을 가져다 준 여러 정황을 설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이번 사건의 진실과 그 책임을 덮어버림으로써 또다른 노수석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열어 주는 것이다.

노씨의 부모님들은 평소 건강했던 노군이 갑자기 심장 이상을 일으키게 된 것에 강한 의혹을 품고 있으며 목격자들도 당시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압에 나섰음을 증언하고 있다. 사인이 무엇이었던 간에 젊은 대학생생을 죽음으로 몰고간 근본적 원인에 접근해 들어가는 것만이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언론의 자세일 것이다.

한총련 3일 총궐기

노씨의 사망이후 구성된 '애국학생 노수석 추모 및 김영삼정권 살인폭력진압 대책위원회'는 자체 진상규명대책위 (위원장 이덕인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 정황조사에 나섰으며, 2일 국무총리와 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3일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고소고발할 계획이다.

한총련도 3일 전국동시다발의 학생총궐기와 9, 10일 양일에 걸쳐 2차 동맹휴업을 벌일 예정이다.

현장목격자 증언

· 김용해(19, 연대 인문학부 1년)

"종로에서 집결 하자마자 사전에 배치된 전경과 백골단은 무자비하게 진압하기 시작했다. 동대문 운동장까지 계속 쫓겨 다녔다. 숨이 차서 환승 돌리려고 뒤돌아 보면 바로 뒤에서 학우들이 백골단의 곤봉에 맞으며 연행되는 모습이 보였다. 다시 울지로 5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다. 울지로 5가에서 퇴계로로 가는 길에서 전경들의 곤봉에 머리와 입술을 맞아 정신을 잃었다."

· 하모군(20, 연대 사회학 2년)

"인도 바로 옆 주차장을 가로질러 골목길로 접어들었는데 기다리고 있던 전경에게 목덜미를 붙잡혔다. 전경을 뿌리치려 하다가 전경의 팔이 목에 휘감긴 채 바로 앞에 있던 대현문화사로 들어갔다. 인쇄소 주인아저씨가 나를 붙잡았던 전경과 말다툼을 하는 사이에 인쇄소 안쪽으로 들어갔다. 인쇄소 안쪽의 사무실로 들어가는 도중에 대형 인쇄기 뒷편에 기대고 앉아서 "아아 어지러워, 아파"하는 노수석학우를 발견했고 주위에는 3명의 학우들이 더 있었다. 사무실에 숨어 있는데 밖에서 "빨리 나와, 이번들 다 잡아가야 돼"하는 전경들의 욕지거리가 들렸고 학생들이 구타당하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후 밖으로 나와보니 3명의 학우는 없고 노수석학우만 침을 입에 머금은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주요 공판 안내

- 4월3일(수)
김영근외 2명, 국보법, 2시, 서울지법 합의2부 311호
- 4월4일(목)
김형덕, 국보법, 10시, 서울지법 단독3부 317호
박충렬, 선고, 국보법, 10시, 서울지법 단독9부 318호
강중수, 국보법, 2시, 서울지법 단독4부 418호

중대재해로 인한 죽음 없어야

2일-4일 한라중공업 노조 본사 앞 상경투쟁

한라중공업 노조(위원장 백윤신)는 오늘 오후 2시 대치동 소재 한라중공업(대표이사 강경호)본사 앞 집회를 시작으로 4일까지 '한라중공업 경영진 구속 촉구'를 위한 상경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노조와 유가족들은 이날 집회에서 사고원인의 철저한 규명, 책임자 구속과 경영진 퇴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목포지방 노동사무소장 해임 등을 요구한다.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한라중공업 상호조선소(본부장 최병권)에서는 2월12일 서영상(35, 설계부 대리)씨와 3월8일 문형복(25, 가공부)씨 등 한달 사이에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며, 지난해 6월 이후 총 42건의 크고 작은 재해가 발생한 곳이다.

한라중공업은 3월23일자 참조. 하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마련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 한번호 사업주가 처벌받은 적이 없다.

노조 조직부장 박경우(30)씨는 "경찰의 수사도 편파적이었다"며 "함께 일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밤샘 수사를 전개하면서 경영진측에는 단순 질문만 했다. 그리고 수사결과도 작업자의 잘못이라고 종결했다"고 말했다.

또한 "경영진들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기는 커녕 유가족들을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고소하는 등 현재의 경영진을 상대로 사대해결을 바랄 수 없다"고 한탄했다.

또한 박씨는 "노조와 유가족들은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전제하며 "더이상 동료 노동자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해 사태의 심각성을 나타냈다.

상경투쟁을 전개하는 노조와 유가족들은 4일 노동부 앞 집회를 마치고 대우조선 유가족회 피해노동자들과 함께 중대재해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주요 투쟁 일정
· 2일 오후4시30분- 대검찰청 앞에서 경영진 구속 촉구 집회

· 3일 오전10시- 신한국당과 국회의원회 당사 집회 및 구속 촉구문 전달

· 오후5시- 명동성당 앞 집회 및 선전전

· 4일 오전10시- 과천 노동부 앞 집회 및 산업안전국장 면담

홍콩정부 항의서한 답변 비무영씨사건 공정재판 약속

홍콩정부는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등 14개 노동·인권단체가 지난 26일 보낸 박무영(38, 구리노동상담소 소장)씨등 6명의 노동운동가들에 대해 기소 취소를 요구하는 항의 성명서에 대한 답변을 28일 보내왔다.

홍콩정부는 답변서에서 "홍콩 권리법에도 평화시위가 보장되어 있다"고 전제하며 "6명에 대해 기소를 한 것은 시위 참가때문이 아니라 공공질서 문란과 폭행죄로 기소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측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홍콩 '안전한 원구 생산에 관한 현장을 위한 연합' 소속 단체에 따르면 폭행죄가 추가되어 3월27일 별도 재판을 받은 Lemun King-chuen씨가 승소해 고소가 취하되었으며 판사가 경찰과 경비원의 행동을 비판했다고 한다.

주/간/인/권/호/름

(96년3월25일부터 3월31일까지)

<25일(월)>

일본 도쿄지법, 일제 식민지 지배때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적 근거 없다"며 기각/성남 여성 의 전화, '가정폭력방지법(가칭)' 제정 촉구 서명운동 전개/제주도 신규범 지사, 43사건 정부에 진상규명 요청/박종철기념비 모금을 위한 서화전 개막

<26일(화)>

전국연합, 미국 광주학살 개입 사죄를 촉구하며 미대사관 앞에서 매주 화요일집회 열기로/인권운동사랑방등 14개 인권단체, 박무영씨등을 기소한데 항의하는 공동성명서를 홍콩정부에 발송/국제인권위원회 총회서 정보요원을 언론인으로 위장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결의안 채택

<27일(수)>

환경기술개발원 환경문제 국민의식조사 결과, 85.2%가 경제발전보다 환경문제가 우선/서울지법 민사22부(재판장 조건호)는 주한미군에게 불법 체포된 김금순, 설은주 모녀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 승소판결

<28일(목)>

서울시경, 사회주의학생연합활동과 관련 학생 16명 국보법으로 연행/조사/민주노총, 국제노동기구 통제연감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중대재해율이 터키에 이어 4위라고 발표/서울고법 형사1부, 성폭행범 살해에 대해 무죄 선고

<29일(금)>

등록금 인상을 조정과 대신자금 공개를 요구하는 시위 도중 노수석(연대 법학 2년)씨 숨져/SOS-Torture, 고에순씨 사건에 대해 김영삼대통령과 안우만법무장관에게 항의서한 보내기 캠페인전개/제4회 아시아연대회의, '중군위안부'에 대한 범죄 다를 특별국제재판소 창설 촉구

<30일(토)>

조계사 승려와 신도 1천여명, '김영삼 정권의 편향적 종교정책 규탄대회' 가제/한전, 영광원전 건축허가취소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심사청구서 내기로

<31일(일)>

국과수 강신몽 법의학과장, 시위 도중 숨진 연대생 노수석씨의 사인이 '심장마비'라고 밝혀/일본 가와사키도, 일반 사무직시험의 수험자격에서 국적조항 철폐키로

<해설>

시위 도중 한 명의 청년이 숨졌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이 또 발생한 것이다.

노수석(20, 연대 법학과 2년)씨는 지난 29일 등록금 인상을 반대와 김영삼 대통령의 대신자금 공개를 촉구하며 시위에 참여했다. 노씨가 속한 시위대열이 경찰저지선에 막혀 골목길로 접어드는데 갑자기 전경들이 뒤에서 덮쳤고, 노씨가 피해들러간 대한문화사 안까지 전경들이 쫓아와 학생들과 격투가 벌어졌다. 그리고 노씨는 숨졌다. 빠르게 진행된 부검에서 사인이 심장마비라고 발표되었다. 심장과 관련해 병원 한 번 가보지 않았던 젊은이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니...

그래 직접 사인이 심장마비라고 하자, 그렇다고 과잉진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이 전과 같이 명확한 사인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 그저 그렇게 엉렁뚱땅 사태 해결을 할 생각은 갖지 말기를 바란다.

시위도중 사망한
연세대 노수석씨의
명복을 빕니다.
- 인권운동사랑방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경찰, 노수석씨 죽음속에 방치

'노씨사인은 경찰폭력' 대책위 결론

노수석씨는 경찰의 과잉 폭력진압 과정에서, 최루탄이 난무하는 속에 10-20분간을 달리던 끝에 인쇄소 안에서 쓰러졌다. 그리고, 경찰의 무시와 외면속에 방치된 채로 죽음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책위, "노씨사인은 폭력진압"

2일 오후 연세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에국학생고 노수석 추모 및 김영삼 정권 살인폭력진압 대책위원회]는 진상조사 2차 결과를 통해 "노수석군은 경찰의 폭력진압 과정에서 경찰의 구타와 최루탄 피폭, 강압적이고 공포적인 검거위협 속에서 심폐기능의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켜 사망했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현장에 같이 있었던 차동호(한양대 경영 1년)씨는 "경련을 일으키던 노수석씨가 '풀어 달라'고 호소하며 고통에 겨워하고 있었다. 노씨를 살리기 위해 우리가 몸을 주무르고 있었는데 잠시후, 인쇄소 안까지 쫓아 들어온 전경이 '하라는 공부는 왜 안하고 데모전이야'라며 심한 욕설을 퍼붓고 우리를 때리며 끌고 갔다. 우리는 노수석씨가 위독함을 호소했지만 전경은 이를 무시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노씨를 발견한 인쇄소 주인 아주머니는 "진압대장에게 '사람이 죽어간다.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라'고 말했다지만, '왜 내게 말하냐'며 외면했다"고 증언했다. 이렇게 노수석씨는 숨져갔다. 경찰은 그를 살리려던 동료들을 끌고 간데 이

의한 손상을 입었음이 인정된다. 무난히 일상생활을 해온 노군이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심장 이상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구타와 최루탄 피폭, 강압적이고 공포적인 검거과정에서 심폐기능의 손상을 강화시켰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노군의 경우 근본적인 사인 못지않게 당시의 상황과 조건이 중요한 사인이라 할 수 있다"고 대책위에 보고했다.

경찰, 검거위주 폭력진압

대책위는 시위진압작전에 참가한 현직 경찰이 전화를 걸어와 "이날은 평소와 달리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직접 일선 중대장들에게 시위 학생을 전원검거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CCTV를 보며 경찰청 차장이 직접 검거를 독려했다"는 제보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시위진압에 경찰 수뇌부가 사전에 조직적으로 폭력진압을 계획·지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학생들도 경찰이 시위현장에 서툰 아니라 골목과 점포 안으로 피한 학생까지 쫓아와 연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폭력을 가했다고 증언

을 명백히 드러내 주었다. 김건국(한양대 3년)씨는 "학생들은 평화선봉대를 구성하여 비폭력 평화시위를 했으나, 경찰은 무자비하게 곤봉을 휘두르며 끝까지 쫓아 오는 등 종전에 볼 수 없던 과격한 진압 양상을 보였다"고 증언함으로써 경찰의 진압작전이 이미 검거와 폭력을 계획하고 있음을 드러내 주었다.

한편, 4일 오전8시 연세대 교정에서 노씨의 영결식이 거행된다. 장지는 광주 망월동 묘역으로 정해졌다.

언론, 아암도사건 외면 이덕인유족, 언론에 항의

2일 연세대에서 있었던 노수석대책위(약칭)의 기자회견장에서는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

예정된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장애인 노점상 고 이덕인씨의 유족과 아암도 주민들이 기자회견장에 나타나 언론의 편파보도에 강력한 항의를 표시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이덕인씨와 아암도 문제는 사건발생 4달째를 맞았음에도 아무런 해결을 보지 못해, 현재 국회의원회 당사에서 유족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으나 언론에서는 아무런 보도를 내보내지 않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덕인씨의 어머니 김정자(53)씨는 "내 아들이 냉장고에서 4달이 지나도록 썩어가고 있다"며 절규했지만, 기자들은 불이 이 끝났다는 듯 속속 자리를 떠났다.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②

김정권은 노동쟁의 처리에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5부 상벌·종교·인어 또는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

a. 여성

여성에 대한 폭력은 계속되고 있으며 몇몇 여성단체들은 지난 수년간 여성폭력이 심화되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강간은 94년 6천1백73건이 보고되었다. 여성단체들은 강간과 성적학대 등에 대한 고소·고발의 인식을 높여왔다. 여성단체에 의하면, 대부분 성적학대나 강간에 관련된 사건들은 기소되지 않으며, 기소되어도 가벼운 형을 선고 받는다.

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문제는 계속 증가해 왔다. 이혼은 여전히 사회적 금기로서 이혼한 여성에 대해 정부나 개인적 지원은 거의 없다. 이혼여성의 취업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재혼이 어렵다는 사실은 여성을 학대받는 상황에 머물게 한다. 정부는 구타당한 여성을 위한 보호소를 조성하고, 몇 개의 보육시설을 증설하여 폭력 하에 있는 여성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었으나, 여성단체들은 아직도 문제 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b. 아동

정부가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공약을 선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인권과 복지는 중요한 사회정책 이슈가 되지 못했다. 정부는 총예산에서 아동 복지에 관련된 예산을 늘려 왔다. 아동학대에 대한 연구된 바 없으며 통계자료도 거의 없다. 서울시 정부는 청소년 상담소를 운영하며 학대 사례를 조사하고, 가족 상담, 가출소년 보호를 하고 있다. 아동학대에 관해 보고된 사건들은 한해 총 50여건이 못된다. 또한 아동학대에 관한 특별법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덜하지만 남아 선호의 전통은 여전히 계속된다. 법은 태아의 성별 감식과 여아 낙태를 금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다고 믿어진다. 이 결론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불가능하다.

c. 장애인

지역 및 사회단체들은 신체·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와 처우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장애인을 위한 TV 다큐멘터리 등 장애인들을 위한 공연과 전시는 있지만 그들의 생활을 위한 공공시설은 부족하다.

91년부터 3백명 이상을 고용하는 한국 기업들은 법적으로 장애인 노동자를 일부 고용하거나 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89%의 기업들이 부담금을 내거나 탈법을 했다. 노동부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장려금을 늘리겠다고 했다. 95년 이후 새로 지은 공공건물에는 장애인을 위한 입구 경사로와 휠체어 승강기, 주차공간 등의 시설이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d. 소수 민족·인종·종족

남한은 단일 민족 국가로 영향력이 있는 규모의 소수민족은 없다.

70년대부터 화교들은 법적·사회적 차별로 인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다. 미국인과의 혼혈아동들은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법적 차별은 없으나 비공식적인 차별이 일반적이며 학문·사업에서 성공하기는 어렵다.

6부 노동자의 권리

a. 결사의 권리

헌법은 공무원과 교사를 제외한 노동자의 결사 자유를 보장한다. 또한 철도·통신·우편등 공공부문 노조가 있다. 노동조합법은 각 사업장에 단일 노조만을 인정하며, 모든 노조는 결성이나 해체시,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약 10%의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고 있다. 과거, 정부는 법적으로 인정된 한국노총, 전문노련 등에 가입하지 않은 노조연맹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노동부는 병원·기자·정부연구소 등을 대표하는 독립적 사무연맹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제3자개입 활동을 이유로 이들 노조 소속 노조원들을 구속하고 있다. 제3자개입금지법으로 구속된 노동자는 지난해 연말까지 30명에 이르고 그 중 21명이 감옥에 있다. 이 통계는 노동분규 중 기타 법규위반으로 구속된 노동자는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전교조가 급진적인 목적을 가진 정치단체라고 주장하며 계속 공·사립학교 교사들의 노조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1천5백명의 해고 교사들 중 전교조 탈퇴를 한 교사들에게만 재임명의 기회를 주고 있다.

관공시나 국영기업체, 방위산업체에서 파업은 금지된다. 법적으로 공공교통·필수품·공공보건의 은행·방송·통신 등 '공익'기업 노조들은 파업을 하는 대신 정부의 중재를 받아들이도록 명령할 수 있다. 노동쟁의조정법은 노조가 노동부에 파업을 신고하고, 법적으로 파업이 시작되기 전 10일간을 냉각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법은 합법적 파업을 행한 노동자의 징계를 금지하며 노동자들이 고용인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할 수 있다. 김영삼 정부는 노동쟁의에서 더욱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노조위원장의 정책에 반대해 무모하게 조업을 중단하여 조립 라인을 마비시키자 울산현대자동차 공장에 경찰을 파견했다.

또한, 당국은 한국통신 노조원들을 중역회의 방해와 기타 도발행위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급·구속했다. 사용자가 고용한 자들(구사대)이 노동자를 폭행한 보고는 없다.

b. 단결 및 단체 협상의 권리

헌법과 노조법은 노동자에게 단체협상 및 단체행동권을 부여하고 있다.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노조와도 광범위한 단체협상이 행해진다. 노동법은 정부에 고용된 노동자들과 국영 또는 공기업·방위산업체 노동자들, 공·사립학교 교사들에게는 단결·단체 협상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3면 계속 ==>)

(2면에서 계속)

노조법은 노조 내지 노사분규에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연맹(의견을 달리하는 연맹인 민주노총과 같이)등의 제3자개입을 금지한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노동자연맹, 주로 한국노총등에 대해서는 소속된 노조원을 돕도록 허용한다. 한국 정부가 공익기업들로 기획한 수출자유지역 노동자들은 단결권이 규제되어 있다.

c. 강제되거나 의무적 노동의 금지

헌법은 누구도 법규정이나 법적 절차를 통하지 않는 한 처벌을 받거나 노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인정하지 않은 강제·의무노동은 행해지지 않는다.

d. 아동 고용의 최소 연령

노동기준법은 13세 미만의 자를 고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단, 노동부에서 특별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이다. 18세 미만의 아동들은 보호자의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들은 미성년자에게 제한된 횟수의 시간의 근무를 시킬 것이 요구되며, 노동부의 특별허가 없이 미성년자를 야간에 고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청소년노동법과 법규들의 규정은 위반이 발견되면 처벌받는다. 그러나 이런 위반 사실을 정규적인 감사를 하기에는 감사관이 매우 적다.

e. 만족할 만한 노동 조건

한국노총과 기타 노조들은 계속적으로 현재의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최저임금수준에 못미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사실상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자신과 가족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주로 중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지에서 오며, 열악한 노동조건에 직면한다. 정부는 불법노동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 5만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합법적으로 일하도록 허용하여 고정적인 임금을 받고 법적 보호를 받도록 계획했다. 3월 정부는 외국노동자에 관한 ILO규약을 비준할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6만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상담소를 개설하여 임금체불이나 산업체해 등의 문제에 대한 상담과 불만을 들어주려 하고 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89년 주당 44시간의 최대 근무시간을 정했다. 또한 시간의 근무는 임금보다 높은 보상을 하도록 하며, 한 주에 24시간의 휴식기간을 주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노동단체들은 정부가 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며, 소규모 기업에서 특히 그렇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보건과 안전기준을 마련하였으나 높은 사고율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율은 국제기준을 훨씬 넘는다. 노동부는 안전 기준의 강도를 높였으나 법을 완전히 강제하기에는 감사 요원의 수가 부족하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한 작업환경을 떠나는 노동자들에게 직업안정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번역>진보정치연합 국제국

<편집자주>-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은 이번으로 마칩니다. 북한편은 6일 하루소식에 기재될 것입니다.

“권력의 방송장악 맞서는 때를 각는 투쟁”

MBC 파업 20일째 맞아 사태해결 위한 대책위 결성

MBC파업 20일을 맞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 등 40여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2일 오전 11시 종로성당에서 「공정 방송 실현과 MBC 강성구 사장 퇴진 촉구 범국민 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상돈등)」를 결성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김중배(참여연대 공동대표)씨는 “MBC 조합원들의 투쟁은 권력의 잘못된 방송장악 기도에 맞서 국민의 진과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때를 각는 투쟁”이라고 전제하며 “대책위를 구성한 것은 방송국 사장으로서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한 강성구 사장의 퇴진을 본격적으로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대책위측은 총선이후 공권력이 동원될 의도가 짙다고 판단하고 전국 유세장에서 MBC사태의 진상과 현 정부의 방송장악 기도를 알리는 선전물을 배포하며 강성구 사장 퇴진을 촉구하는 1백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총선전 사태해결이 이루어 지지않을 경우 MBC노조와 연대하여 규탄 집회 등 범국민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MBC노조는 지난 3월28일 기자회견을 통해 강성구 사장의 추문을 폭로하고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당국에 이사실을 알리고도 연임을 결정했다며 비난한 바 있다.

이에 강사장은 노조 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표 최문순등) 18명 전원을 ‘불법쟁의’로 남부지검에 고소·고발했으며 노조는 소환에 불응하기로 한 상황이다.

한편 방송사노조들은 문화방송의 전면파업과 관련 KBS노조는 ‘방송장악 분쇄 및 MBC투쟁 연대’를 위한 파업찬반투표를 1일부터 3일동안 실시하고 있으며, EBS노조는 1일과 2일 양일에 걸쳐 투표를 실시한다.

또한 CBS노조의 허욱(35, 사무국장)씨는 “CBS의 경우 노조원이 많지 않아서 비상대책위에 전권을 위임했다”며 “MBC노조에 공권력을 투입하는등 비상상황이 전개 되면 즉각 동조파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인선 대책마련 촉구 참여연대, 서울역 앞 낮12시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등, 참여연대)는 오늘 낮12시 서울역 앞에서 경인선의 지연·불통·삿은 사고에 대한 근본 대책 촉구를 요구하는 항의 시위와 오후7시 ‘지옥전전 해결책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지난 3월28일 참여연대는 경인선 지연운행과 잦은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강제투입률 중앙일보 1위

바른언론을 위한 시민연합(위원장 이영우)은 2일 일간신문의 강제투입률을 발표한 결과 1위가 중앙일보로 나타났다. 시민연합이 지난 3월18일부터 5일간 의 정부 일대 아파트 1천여 가구를 상대로 한 결과 저발견수는 전체 가구의 12.1%에 해당하는 1백70여건이 있었다. 2위는 적반건수 31건의 동아일보가 그리고 국민, 조선일보 순으로 나타났다.

시위도중 사망한
연세대 노수석씨의
명복을 빕니다.
- 인권운동사랑방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책임자 처벌·폭력진압방지 대책 마련” 촉구

6일 오후2시 종묘공원, 제2차 국민대회

사망 7일째를 맞아 고 노수석씨의 장례는 치러지지 않, 경찰의 폭력살인진압에 대한 규탄의 파고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3일 오후 연세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에국학생 고 노수석 추모 및 김영삼 정권 폭력살인진압 대책위」는 4일 노씨의 장례를 치르는데 따른 대책위의 해소여부와 향후 계획을 묻는 기

자들의 질문에, “현재로선 장례준비에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대책위는 장례 후에도 폭력살인진압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계속 활동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책위는 3일 연세대에서 열린 1차 국민대회에 이어, 6일 오후 2시 종묘공원에서 김영삼정권의 살인폭력진압을 규탄하는 2

차 국민대회를 열고 △김영삼 정권의 심판 △경찰 책임자의 처벌 △평화 시위에 대한 살인폭력진압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김영삼 대통령의 공개적인 사과를 촉구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 92년 대선자금 공개와 교육재정 확보를 요구할 예정이다.

차 국민대회를 열고 △김영삼 정권의 심판 △경찰 책임자의 처벌 △평화 시위에 대한 살인폭력진압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김영삼 대통령의 공개적인 사과를 촉구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 92년 대선자금 공개와 교육재정 확보를 요구할 예정이다.

중대재해로 또 사망 현중 외주노동자 압착사

현대중공업(사장 김정국)의 외주노동자 이형우(30, 열전사업부)씨가 지난 2일 오전 11시16분경 주조공장에서 작업 중 천장크레인에 끼어 압착사 했다. 이씨는 현중의 하청업체인 중앙방재(주)소속으로 임신중인 아내와 1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현중에서는 올해에만 3명의 외주노동자와 2명의 현중노동자가 사망하는등 작업장의 안전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회사측은 작업자의 안전 소홀로 인한 사고라며 아무런 잘못도 인정하지 않은채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문영일(32, 중장비분소장)씨는 “외주노동자는 근속년수가 적고, 생산위주의 노동을 하여 안전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위원장 김일식)측은 외주노동자 중대재해 현황을 받은 이후라면 조금이나마 편안한 마음으로 고인을 보내드릴 수 있었을 텐데”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유가족 입장 전달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노씨의 아버지 노봉규씨의 참석이 기대됐으나, 노씨의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는 마당에 기자들을 대하기가 괴롭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장례에 임하는 유가족의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장례를 마친다해도 그동안 애써 준 분들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가족의 입장>을 대독한 대책위 윤정모 대변인은 “지난 2일 국무총리에게 사건해결을 위한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면서 “정부로부터 살상무기의 사용중지와 진상규명 및 책임자의 처벌에 대한 약속을 받은 이후라면 조금이나마 편안한 마음으로 고인을 보내드릴 수 있었을 텐데”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망월동 안장, 12시 종묘 노제

“수석이는 과잉진압으로 인해 희생...”

<장례에 임하는 유가족의 입장>

우리 가족은 사랑하는 수석이의 죽음 앞에서 너무도 깊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것처럼 건강했고 그리도 맑은 심성을 지닌 수석이가 갑자기 쓰러졌더니 믿기지 않을 뿐입니다. ... 일주일이 지나가도록 사실이 밝혀지기는 커녕, 오히려 사건을 묻어버려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만 커지고 있습니다. ... 현장에 같이 있었던 동료들의 여러 증언에 나타난 정황을 볼때 수석이가 과잉진압으로 인해 희생되었음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당국은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규명해야하며, 관련된 책임자를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수석이가 같은 불행한 젊은이가 더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 우리 가족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이상 젊은이들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지 못하게 희생되지 않기를, 하루빨리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가 도래하기를 비통한 심정으로 기원합니다. ... 노고를 마다하지 않은 수많은 학생, 학교당국, 사회단체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은 슬픔에 잠겨 있는 저희 가족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으며, 수석이의 뜻을 되새기게 해주었습니다. 장례를 마친다해도 저희 가족은 이분들과 함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1996년 4월 3일
유가족 일동

제네바 소식 ②

개발권, 인권 증진과 함께 추진돼야 국제법률가위원회, '사회권조약에 선택의정서 추가'

제52차 유엔 인권위 2주 차 회의에서는 의제5와 6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개발권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외에도 의제12와 13, 14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1.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실현 및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문제(의제 5)

3월25일부터 시작한 의제5에 대한 토론에서 주로 개발도상국들이 발언했으며 1 세계국가들은 전혀 발언을 하지 않았다.

개발권실무위원회는 보고서에서 “개발의 권리는 모든 나라가 갖고 있는 고유한 권리이고 개발의 의지는 국가의 책임이다. 개발은 다른 기본적인 인권의 증진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외채문제 대해 갈리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체계 내에서 외채문제에 대해 평등하고 효과적인 대책이 구상되도록 채권국과 채무국간의 정치적 대화가 진행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E/CN.4/1996/22)”고 밝혔다.

대부분의 아프리카국가들은 아프리카의 외채가 지난 해 40%나 증가했다며 외채 부담을 감소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또한 쿠바대표는 미 행정부의 쿠바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며 “미국은 쿠바의 인권과 개발을 방해하고 있고 그로 인해 쿠바 인들은 빈곤과 질병으로 죽어 간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법률가위원회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동등하다”며 “판사·변호사들

에게 이 권리에 대한 이해를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그리고 “보통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권리는 적당한 주거와 음식·교육·고용과 환경 계획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이 계획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선택의정서를 추가하는 것으로 개인 또는 민간단체들이 직접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사실을 유엔에 보고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 계획은 권리 침해를 증가시키는 무기수입, 부패와 비리를 철폐하는 정책을 요청하고 있다.

다른 민간단체인 중남미 인권보호를 위한 협의회는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에서 강요하는 경제 개혁이 발표됐다.

특히 외채문제 대해 갈리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체계 내에서 외채문제에 대해 평등하고 효과적인 대책이 구상되도록 채권국과 채무국간의 정치적 대화가 진행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E/CN.4/1996/22)”고 밝혔다.

대부분의 아프리카국가들은 아프리카의 외채가 지난 해 40%나 증가했다며 외채 부담을 감소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또한 쿠바대표는 미 행정부의 쿠바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며 “미국은 쿠바의 인권과 개발을 방해하고 있고 그로 인해 쿠바 인들은 빈곤과 질병으로 죽어 간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법률가위원회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동등하다”며 “판사·변호사들

에게 이 권리에 대한 이해를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그리고 “보통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권리는 적당한 주거와 음식·교육·고용과 환경 계획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이 계획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선택의정서를 추가하는 것으로 개인 또는 민간단체들이 직접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사실을 유엔에 보고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 계획은 권리 침해를 증가시키는 무기수입, 부패와 비리를 철폐하는 정책을 요청하고 있다.

“남한이 1990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가입한 이후부터 국내법에 적용되어 왔다”며 “작년 5월에 남한의 최초보고서가 제출된 것은 인권에 위한 중요한 노력이었다”고 자평했다. 또한 이씨는 급속한 개발이 도시, 환경문제를 유발시켰으나 경제성장으로 인한 높은 생활수준을 향유하게 되었다”고 말해 민간단체의 발표와 대조를 이루었다.

3.인종주의 및 인종차별과 의 투쟁을 위한 행동강령(의제 12)

94년 열린 유럽정상회담과 지중해회담에서는 인종주의와 외국인 배척에 관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유엔기구에 제반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르완다와 구고연방에서는 인종청소(ethnic cleansing)에 의한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에 대해 팔레스타인 대표는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인종주의가 폐지된 것은 아니다. 보스니아 문제와 증가하는 반이슬람주의, 흑인에 대한 차별정책은 인종주의가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국 의 박창일 대사는 “민족주의가 재등장하면서 집단간의 혐오와 불관용을 부추기고 있다. 경제적인 요소들이 이민노동자와 소수민족에 대한 혐오를 증가시키고 있다”며 새로이 나타나는 인종주의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쿠바와 베트남 대표는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라고 비판

했다. 의제12에 대해 민간단체들은 개발국에서 벌어지는 인종차별은 이민, 보호수용소, 이민노동자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시민권 획득의 어려움도 인종차별과 관련되어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이민 2세대들은 단지 피부, 언어, 문화,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계속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문반대국제연합은 미국에서 인종주의가 계속 증가되며, 흑인과 다른 소수 집단은 미국 사법당국과 수형제도에 따라 엄청난 차별을 받는다고 밝히고 이민 통제법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대한 폭행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4.종교나 신념에 의한 모든 형태의 불관용과 차별의 종식에 관한 선언(의제 18)

29일 의제18에 대한 심의가 시작되었다. 이날 세계평화를 위한 교육자 국제협의회는 종교의 자유에 대해 언급하면서 “북한은 기독교 공동체를 파괴하고 기밀성과 김정일 중심의 이단적 성격을 갖는 괴상한 국가종교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처럼 국가종교와 관련된 단체·기구를 통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성경은 검열되고 있으며 몇몇 종교지도자들은 신념 때문에 정신병원에 수감된다. 북한은 실제로 가짜 기독교 공동체를 구성시키고 이러한 공동체는 특수훈련을 받은 정부요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결국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북한 대표는 반박권을 신청해 “김일성과 김정일은 민중을 위해 모든 희생과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주장하며 “국가원수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을 하는 이런 민간단체는 모든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네바=장혜선】

【제네바=장혜선】

시위도중 사망한 연세대 노수석씨의 명복을 빕니다. - 인권운동사랑방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현중, 연이어 노동자 사망

노동자 하루 6명 사망, 3백30명 부상

현대중공업(사장 김정국)에서 2일 이형우(30, 엔진 사업부)씨가 숨진데 이어 3일 또 다시 외주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숨진 이주락(54, 항운노조 소속)씨는 철관하역 노동자로 오후 4시30분경 조선사업1부 안벽에서 동료 노동자 4명과 함께 크레인으로 철관을 들어올리는 순간 4개의 철관 크래프중 하나가

빠지면서 달려있던 H빔이 이씨의 머리를 때려 그 자리에서 숨졌다. 현중노조(위원장 김임식) 문대성(34, 편집실)씨는 "계속적인 중대재해로 노조측은 현재 적극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매주 하루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회사가 위대한 중대한 사상에 대해 경찰에 고발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대책은 회사가 절대 만들어 주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의 하나된 투쟁속에서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중강(한울노동상담소 소장)씨는 "외주노동자건 아니건간에 안전보장의 총괄 책임은 현중에 있다. 조합원들이 힘을 실어 투쟁을 한다면 재해보상을 받는 것은 어려운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하씨는 "가장 중요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유족들이라며 유족이 회사측과 적당한 선에서 사태 해결 결정을 한다면 노조는 결정권이 없다"고 말했다.

"이대로 보낼 수는 없다"

노수석대책위, 장례연기

노수석씨의 장례가 무기한 연기됐다.

4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가진 학생대책위는 "노씨의 아버지가 장례문제를 학생들에게 맡기겠다는 뜻을 전했다"며,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장례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학생대책위는 노씨의 장례일이 결정되었어도 정부와 학교당국이 사과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 장례를 연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장례대책위는 한총련의 제안에 따라 "장례에 대해서는 유족과 학생들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고 향후 진로와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6일 오후 2시에 예정되었던 국민대회는 예정대로 종묘공원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연세대 빙대 교수들을 성명서를 통해 △등록금 고지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 △경찰 과잉진압이 노군의 사인과 인과관계가 있다 △총장을 비롯 학교당국의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한다 △언론에 정확한 사실보도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위원회에서는 4월8일부터 13일까지 산재직업병 추방 주관을 설정, 위험시설과 작업에 대해 노동부 위험사항신고센터에 신고해 대책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금속연맹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하루에 6명의

식목일휴일 관계로 5일자 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안기부, 간첩판들기 실패

박총렬씨 보석결정으로 4일 출감

박총렬(36, 전국연합 사무차장)씨가 4일 오후5시 서울 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출감했다. 또한 4일 있을 선고공판도 검사측(검사 조성숙)의 재판 제기신청으로 16일 오전11시에 재판이 다시 열릴 예정이다. 윤기원변호사는 "박총렬씨의 보석신청은 박씨가 구속된 후 바로 했는데 지금이야 결정이 됐다"며 "검찰의 재판 제기신청은 그 동안의 재판에서 뚜렷한 증거를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증거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석 결정은 김동식사건으로 안기부에 연행된 허인회(현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 김태년(성남미래준비위원회 대표)씨 등에 이어 결정된 것으로 안기부 수사가 전적으로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조작된 한진주의로 밝혀졌다. 전국연합은 박총렬씨 보석출감에 대한 논평을 통해 "민주인사의 탄압과 고문 등 반인권적인 행태가 없어져야 한다"며 안기부등 폭압적인 공안기관의 해체와 불법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국보법의 철폐를 주장했다. 지난 3월22일에 열린 공판에서 조성숙검사는 혐의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으면서도 국보법 7조(1항 교무·관양, 5항 이적표현물 소지·탐독) 규정으로는 전과가 없는 정역1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하루소식 3월26일자 참조>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북한편

<편집자주>이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이 북한과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북한 사회가 폐쇄적 사회이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상황을 평가하는 구체적 자료가 부족함을 시인하며 보고서 내용에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인권하루소식>은 북한 인권의 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의 인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소개하기 위해 요약 정리하며 실는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은 조선 노동당이 절대적 통치를 하는 독재 국가이다. 김일성 사망후 김정일이 주석과 조선 노동당 총비서를 맡지는 않았으나 지도자의 지위는 도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과 김정일 모두 계속적으로 개인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인민무력부는 대외적인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요 조직이다. 조선 인민군은 노동적위대, 인민경비대 등 거대한 군예비부대와 준군사부대의 지원을 받는다. 이들 조직들은 사회안전부와 조선 노동당 간부들의 대내적 안전 유지 업무에 노력한다. 보안 부대 구성원들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

몇몇 수치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원조 철회로 경제가 매년 퇴조되었다. 또한, △분배의 병목현상 △비효율적 자원배분 △의제에 대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국제적 신용거래 계통 △GNP의 4분의 1에 이르는 군비지출등은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95년 북한은 처음으로 여름의 전국적 흉수로 악화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는 국제적 식량 원조를 비롯하여 기타 형태의 원조를 목표로 한 것이었다. 식량, 의복, 에너지는 전국적으로 배급한다.

정부의 사상은 마스 레닌주의의 집단주의 개념에서 파생되었으며, 김일성이 세운 '주체사상'이다. '주체'는 일반적으로 '자립'으로 번역되나, 문헌적으로 보면 '외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을 뜻한다. 북한에서는 '마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이라고 묘사되는 '주체사상'은 정권의 필요가 변함에 따라 때때로 재해석된다.

제1부 자유를 포함하는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

a. 정치적, 기타 사법의 살인
탈주자들에 의하면, 북한은 정치범, 탈주했다가 송환된 자, 기타(보도에 의하면 김정일에 반대하여 음모를 꾸민 혐의가 있는 군 장교들을 포함하여) 사람들에게 대한 즉결 처형을 계속 집행했다. 형법에서는 "민중 해방 투쟁을 억압"하려는 목적으로 "제국주의와 공모하는" 활동에 대해 사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몇몇 죄수들은 "사상적 이탈", "사회주의 반대" 그리고 기타 "반혁명적 범죄" 등 모호하게 규정된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b. 사생활·가족·서신 등에 대한 임의 간섭
"시민들은 신체·주거·교신의 비밀의 불가침을 보장받는다"라는 헌법 규정은 실생활에 반영되지 않는다. 정부는 비판자들과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자들을 구별하

기 위해 광범위하고 다단계적 정보원 체계를 갖고 있다.

2부 시민적 자유에 대한 존중

a. 언론·출판의 자유
시민들이 "사회주의적 생활 규범"을 따르고, "집단지성"에 부종하도록 요구하는 헌법의 조항들은 개별적·정치적 혹은 시민적 자유에 우선한다. 헌법으로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었지만 이들 권리 행사를 실제적으로 금지한다.

b. 종교의 자유
92년 헌법에서는 종교 신앙의 자유를 규정했으나 같은 조항에서 "의세를 끌어들이거나" 혹은 "어지럽힐"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실제, 정권은 국가이익을 제공하는 종교 활동을 제외한 종교 활동을 거부한다. 북한의 주장으로는 1만 명의 기독교인들과 5백개의 교회가 있고 본래 민족 종교운동에 기초한 정부 지원 단체인 천도교청우당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개신교 신학교가 있으며, 3년마다 6~9명의 학생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한다.

제3부 정치권 권리의 존중: 시민의 정부를 교체할 권리

김일성 사후, 북한 정권 내부의 정치를 알 수 있는 정보는 거의 없다.

북한에서 자유 선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김정일은 자유 선거와 정당간 경쟁의 개념을 자본주의 부패의 산물로 치부했다.

제4부 성별·종교·언어 또는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

헌법은 모든 시민들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a. 여성
여성 폭력에 대해서 입수할 수 있는 정보는 없다. 헌법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한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남성들과 같이, 노동 연령의 여성들은 일을 하지 않을 선택권은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여성들은 미취학 자녀들을 나이가 많은 친척들이나 국가 운영의 타아소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헌법에 따르면 대가족의 여성들은 노동시간의 단축이 보장된다.

b. 아동
사회 규범은 아동들을 소중하게 키우는 전통적, 가족 중심의 가치를 반영한다. 국가는 모든 아동들에 대해 교육을 제공한다. 아동들의 사회적 학대의 형태에 관해 입수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일부 아동들에게는 교육의 기회를 박탈한다. 그리고 부모들의 범죄로 인한 기타 처벌이나 불이익의 대상이 되고 있다.

5부 노동자의 권리

a. 아동 고용의 최소 연령
헌법에 따르면 국가는 만 16살 이하의 아동들에 의한 노동을 금지한다. 15살까지 교육은 일반적이고 의무적이기 때문에 이 규정은 시행된다고 믿는다.

<번역:진보정치연합 국제부>

시위도중 사망한
연세대 노수석씨의
명복을 빕니다.
- 인권운동사랑방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학원정상화 요구, 경원대생 또다시 사망

학생회측, 전면 수업거부 돌입예정

학원의 파행적 운영을 둘러싸고 수년간 학생과 학교측이 갈등을 빚어오던 경원대에서 또다시 학생이 분신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학생들의 투쟁열기가 재확산될 조짐이다.

학교운영의 민주화를 놓고 지난 5년간 끊임없이 대립해오던 경원대사태는 학교측에서 관련 학생들에 대한 제적, 고발조치를 반복해 오면서 악화일로로 치달아 왔다.

그 과정에서 장원구씨가 작년 11월 분신사망했으며,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진철원(도시계획 2년)씨가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지난 6일 밤 9시반경 경원대 C동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불에 다 숨진채 발견된 진씨는 최근까지 학

내문제해결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오다, 노수석씨 사망을 접하며 더욱 많은 고민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아직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사무실 내부의 이불 등이 전혀 불타지 않았던 점 등과 주변학생들의 진술 및 진씨의 남긴 일기장들은 진씨의 죽음에 단순 화재사건이 아닌 분신사살이라는 판단에 더욱 신빙성을 부여하고 있다.

고 장원구씨 사망 1백일째던 지난 3월22일, 진철원씨는 "심장이 펄펄 끓어오를 때, 양심이 꿈틀거릴 때 우리는 움직여야 한다. 알면서도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 는 내용의 일기를 남겼으며, 사망하기 직전인 4월6일에는 "저 철원이는 생각합니다. 96년 새내기들이 모두 열심히하길 바랍

니다. 여러분들이 선배가 될 때에는 알 겁니다. 내마음을, 열심히 살기를 바랍니다" 라는 글을 남겼다.

7일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한 학생회 간부 1백여명은 이번 주를 고 진철원학우 추모기간으로 정하고, 다음 주초 전체학생투표를 통해 재단의 파행운영 중단을 요구하는 전면수업거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이날 학생들은 전면수업거부를 통해 △학원정상화를 약속하

는 학교측의 담화발표 △총장 및 학생처장의 사과 △강원군군을 경찰에 고소했던 문용식교수등 4인의 사과 △제적 및 고발조치 철회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진씨의 사망을 접해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유족과 함께 빈소를 차리고 있는 경원대 학부모들은 사태해결을 위해 김원섭 총장 및 이석규 학생처장과의 면담을 시도했으나 이들 모두 자리를 피해 아무런 대화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현재 진씨의 시신은 냉동처리된 상태로 C동 현관에 안치되어 있으며, 유족들은 장례를 비롯한 앞으로의 모든 문제를 학생들에게 위임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한다.

학자단식 뒤 성신여대생 사망

성신여대 권희정(국민윤리교육학과 졸, 총학생회 정책국장)씨가 학자 단식으로 인해 7일 오후11시30분경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 지난3월25일부터 4월3일까지 10일간 예결산안 공개, 등록금소위원회 결성, 교육환경개선 등을 요구하며 구혜영(총학생회장, 수학과 92)씨와 함께 단식농성에 들어간 권씨는 단식을 마치고 난 뒤 가슴이 답답하다는 등 통증을 호소해 왔고 급기야 7일 새벽 고대부속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그러나 치료를 받으며 건강상태는 좋아져 당일 오후에는 가족, 친구들과 이야기도 나눌 정도였다. 그러던 중 상황이 급작스레 악화되면서 밤 11시45분경 사망했다. 그간 단식기간 중 학교측은 교수와 학생사이에 협상이 있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오후2시 성신여대 총학생회는 2천5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규탄집회를 갖고 △권희정학우의 죽음에 대한 공개사과, 총장 및 보직교수 총사퇴 △예결산안 공개와 등록금 소위 개혁 △예결산안 전면 공개 의무화 및 등록금 협상기구를 학칙에 명시하여 제도화할 것 △교육부장관 사퇴 △김영삼정부는 국가교육재정을 확충하고 5·31교육개혁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과 사건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할 것 등을 요구했다.

현재 성신여대학생회측은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오후 집회를 마친 뒤 행정실의 모든 집기를 들어내고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주요 공판 안내

- 4월9일(화) 연성수,국보법,오후2시, 서울지법형사국 23부 속행 319호 강희석, 업무방해등, 오전10시, 서울형사 2부 선고 422호
- 4월10일(수) 강재우의 8명,국보법, 오후2시, 서울형사22부 속행 311호 박문형, 업무방해등, 오후3시, 서울형사3부 속행 319호
- 4월12일(금) 전창일의 2명,국보법, 오후2시, 서울형사23부 속행 311호 원용호의 1명,국보법,오전10시, 서울형사6단독 선고321호 김동국, 업무방해등, 오전10시, 서울형사1부 속행 422호 유현수, 국보법, 오전10시, 서울형사22부 속행 425호 장준호,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오전11시30분, 서울형사22부 속행 425호

경찰청장 상해치사 혐의로 고소 노수석씨 부친, 경찰관계자 처벌 요구

시위도중 경찰의 과잉진압과정에서 사망한 노수석씨 사건과 관련, 시위진압의 책임자인 박일룡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들이 일체히 검찰에 고소했다. 8일 오후 노씨의 아버지 노봉구(56)씨는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장, 시위진압 전 투경찰 및 사복체포조 등을 상해치사 및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노봉구씨는 고소장에서 "이한열, 강경대, 김귀정씨 사건같이 진상을 은폐하여 처벌을 않거나 말단경찰들에 대한 문책 또는 처벌이라는 미봉책을 사용한다면, 이런 불행한 사건이 언제라도 재발될 것"이라며 "평화적 시위에 대해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야만적 체포작전을 감행한 경찰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은 돈' 배격서약 총선후보 3백20명

15대총선 후보자 3백20명이 유권자에게 '검은돈 배격·부패방지법 제정'을 약속했다.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김창국)는 지난 3월 총선후보자 및 관계자 1천4백여명에게 정치관계법의 개정과 부패방지법의 제정을 내용으로 하는 대유권자 약속문을 발송했으며, 4월7일 현재까지 3백20여명이 이 서약에 참여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총선직후부터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서약에 참여한 국회의원단과 함께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원' 등 실질적인 법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사제보
전화:715-9185
팩스:715-9186

위안부 책임 회피 정대협 일본배상 촉구

8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 윤정옥)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정부의 민간기금에 반대 △국제사회 유엔 특별보고관의 권고대안 △일본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직접 배상할 것 △범죄책임자 처벌 등을 다기한 번 촉구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 8일자에는, 일본 정부가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측에서 모금한 기금으로 위안부 생존자들에게 2백만엔씩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정책 비판 성명

전국연합은 8일 오후 성명서를 발표, 성신여대 권희정양등 최근 잇따른 죽음에 대해 예도의 뜻을 표하며, 학생들의 죽음의 책임이 현정권의 잘못된 교육정책과 구조적으로 억압된 교육현실에 있다고 비판했다.

주/간/인/권/호/름

(96년4월1일부터 4월7일까지)

<1일(월)>
국과수, 시위도중 숨진 노수석씨 주검 부검결과 심장마비로 사망 밝혀/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발표, 최근 15개 시·도 지방교육비특별회계 분석결과 지난해 해외시찰이 운영비의 8.5%(3억3천8백여만원) 차지/대학생모임 '새시대 2020' 3월27일부터 선거연령 만18살로 확대 촉구 서명운동 /강원남부 폐광지역 주민대표자회의 폐광개발 촉진지구 지정과 지원 촉구/교육개발원 '95년도 한국의 교육지표' 발표, 초·고등학교 교육비 15년새 12배 증가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특별법 제정 촉구

<2일(화)>
정부 올해반기 노동법 개정/선진7개국 프랑스 릴에서 고용관련 각료회의 열고, 고용창출을 위한 노동시장의 개혁방안 집중논의/일본 가와사키 시당국 외국인 시민의견 시정 반영키 위한 시민대표자회의 설치 방침

<3일(수)>
연대생 노수석씨 추모집회와 거리시위 전국 곳곳에서

<4일(목)>
전북일보 노조 무기한 전면파업/광주지검 목표지정 한라중공업 상호조선소의 노동자 3명 사망사고와 관련 회사 선채생산담당 전무 구속,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진주부장 구속/노동부 '95년 산재분석' 발표, 작년 산재노동자 7만8천34명중 제조·건설 3/4 차지/서울지법 형사9단독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충렬(전국연합 사무차장)씨 보석신청 받아들여/노수석씨 장례식 무기한/서울지검 형사4부 강민조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전두환씨의 아들 재규, 재만씨 소환조사/전국고속노련 산재추방 공동투쟁 벌여나가기로/산재전문 제중병원 건립지연/삼호조선소 노동자 사망관련 해당부서 조장구속에 노조, 동료노동자 반발

<6일(토)>
문화방송 노조 업무복귀/부산시교육청 돈봉투 없애기 강력단속/환경부 발표 공사장 소음피해 급증/학생, 재야단체 2천5백여명 종묘공원에서 노수석씨 사망항의 집회, 시위진압 관련 책임자 처벌과 김대통령 사과 요구

<7일(일)>
보건복지부 해외입양아 지원대책 마련키로/경찰 노동정책에 대한 총선후보들의 견해 설문조사결과 나눠주던 노동자 무조건 연행, 뒤늦게 무형의 석방

<해설>
연세대 노수석군의 죽음으로 등록금 투쟁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7일 저녁 성신여대 권희정(국민윤리교육학과 92)씨의 죽음이 이어졌다. 10일간의 단식을 마치고 나서 4일이 채 지나지 않아 심근경색증으로 갑작스럽게 숨진 권희정양의 죽음에는 "등록금소위원회 개최, 예결산안 공개, 교육환경개선" 등의 요구가 따르고 있다. 마땅히 학교측의 책임과 사과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8일 빈소를 찾은 김학자학생처장은 "책임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미 등록금을 둘러싸고 지난 29-30일 동안 동맹휴업, 학내 집회가 계속되고 있고 그 요구사항도 성신여대측과 마찬가지로 △등록금 책정시 학생참여 △재단전입금 확충 △교육재정 확보등으로 꼽을 수 있다. 학교의 주체는 교수·학생·교직원이다.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순리대로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가야 할 것이다.

시위도중 사망한
연세대 노수석씨의
명복을 빕니다.
- 인권운동사랑방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매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장애인 폭행 의경, 버젓이 군 복무중

사건발생 석달만에 불구속 기소

지난 2월1일 서울지검 서부지청장 앞으로 폭행상해와 관련한 고소장 1통이 접수됐다. 고소인은 뇌성마비 4급 장애인 이동원(28)씨이며, 피고소인은 현직 의경인 김준태(22)씨였다.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 1

월11일 독립문 지하철에서 불편을 판내려던 이동원씨는 정복차림의 김 의경에게 불갑혀 흉계역구 내속소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소화기로 대어 씻차례 언어 맞는 등 심한 구타를 당해, 누굴 2대 골절과 뇌진탕 및

두피열상 등 전치4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소인 김씨는 이미 5백만원의 공탁함으로써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이씨의 가족들 앞에서 가해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검찰심문 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 일체의 가해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이에 이씨의 가족들은 전혀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김씨의 태도에 분노, 이씨의 억울함을 곳곳에 호소하며 김씨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나, 김씨는 석달간 불구속 수사 끝에 8일에 이르러 불구속 기소된 상황이다.

이와관련,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이종성(28)씨는 "이씨의 사건은 소송에 들어간 이상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으며, 결과가 부당하게 나올 경우 사회적 고발조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며, 뇌성마비복지회의 조남숙(31)씨도 "1월말 이씨의 사건을 전해 듣고 서울지방경찰청에 가해자의 의법처리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나, 현재 사건이 검찰에 계류중이므로 뚜렷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말 경 CBS방송을 통해 보도(담당기자 최승진)된 보도 있으나, 현재까지 가해자 처벌이나 피해보상 등에 아무런 진전이 없어 이씨와 그 가족들을 안타깝게 하

고 있다. 현재 이씨는 심한 두통과 흉부통증을 호소하며 중화동 박용신경과의과(308호)에서 입원치료중에 있다.

권회정씨 한중의 제로 노수석·권회정대책위 구성

학자단식으로 7일 밤11시 30분경 숨진 권회정(성신여대 국민윤리교육학과 92)씨의 장례가 9일 새벽 백계화 장터에서 치뤄졌다. 권씨가 숨진 이후 권씨의 아버지 권오석씨등 유가족들은 이번 사건이 조용히 마무리되기를 바랐다. 실제 권씨의 장례는 그가 숨진지 3일만에 치뤄졌지만 시간상으로 본다면 30시간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다. 더욱이 숨진 권씨는 7남매중 여섯째였는데 이미 위로 다섯 형제가 죽고 남동생만 남은 상태에서 주위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한편 권씨의 장례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예·결산 공개등 요구사항을 내세운 학자투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미 서총련은 노수석씨 장례식 이후 '노수석 열사 대책위'를 '노수석·권회정 열사 대책위'로 개편하고 싸워나갈 것을 밝혔다. 현재 성신여대 학생들은 8일부터 총장실을 비롯한 행정실 전체를 점거하고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9일에는 추도식과 함께 거리선전전을 가졌다<인권하루소식 4월9일자 참조>.

선거휴일관계로 11일자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노수석씨 망월동에 묻혀 학교측과 합의, 등록금문제등 해결 밝혀

시위도중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노수석씨의 장례식이 10일로 잡혀진 가운데 연세대측은 노수석씨 사망과 관련해 애도의 뜻을 표명하며 9일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연세대 총장총장, 이대운 교수평의회회장, 김광열 직원노조위원장 명의로 총학생회장에게 보낸 합의서는 노씨의 죽음에 '깊은' 교육적 책임감을 느낀다며 유가족과 학생측에 사죄의 뜻을 표명했다.

또한 학교측은 등록금등 현안문제를 학생들과 협의해 나가며, 노씨의 죽음과 관련한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입장을 언론매체에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노씨의 기금 및 추모사업에도 적극 나설 것을 결정했다. 한편 노씨의 장례운행렬은 오전9시30분 연세대를 출발, 오전10시 신촌로타리에서 노제를 지내고, 낮12시 종로공원에서 시민들과 함께 노제를 지내며 고향인 광주로 떠나게 된다. 오후6시 광주 도착 앞에서 노제를 지내고 오후11시 망월동 묘역에 묻히게 된다.

한총련은 노수석씨의 장례식에 앞서, 이후 김영삼대선 자금 공개, 교육재정 확보, '노수석 열사 대책위'를 '노수석·권회정 열사 대책위'로 개편하고 싸워나갈 것을 밝혔다. 현재 성신여대 학생들은 8일부터 총장실을 비롯한 행정실 전체를 점거하고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9일에는 추도식과 함께 거리선전전을 가졌다<인권하루소식 4월9일자 참조>.

선거휴일관계로 11일자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또한 한총련측은 노수석씨 사망보도와 관련해 언론의 보도가 축소와 왜곡으로 일쑤였다고 비판했다. <한겨레신문>을 제외한 모든 언론이 이런 사건의 배경이 된 김대통령의 대선자금 공개와 열악한 교육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 사인에 대해서도 국립과하수사연구소의 소견만을 소개할 뿐 현장을 목격한 학생들의 인터뷰는 무척 인색했다고 보았다. 심지어 KBS는 4일 장례식 보도에서 "일부 학생들과 재야단체의 반대로 장례가 연기되었다"고 왜곡보도까지 했다고 비난했다.

'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 민간위원회(공동대표 김진홍 등)는 모든 이들에게 적절한 주거보장과 21세기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모형개발을 주제로 개최되는 제2차 세계주거회의(HABITAT II) 3차 준비회의의 결과를 6월 있을 본회의에 앞서 개최된 3번의 준비회의중 마지막 회의로 지난 2월2일부터 11일까지 뉴욕에서 열렸다.

이번 준비회의에서는 특히 민간단체(NGO)의 역할에 대한 많은 토론이 벌어졌는데 주거회의의 사무총장 N'Dow 씨는 유엔회의의 규칙상 제안할 수 있는 NGO의 지위에 대해 △NGO의 참여 권장 △주거회의 의제의 점진적인 발전 등을 위해 다수의 NGO대표와 협의를 △NGO에 대해 추가에 산사용 등을 결정했다. 이로써 그동안 발언권만 가지고 있던 NGO가 하나의 협상대상으로 떠오르게 됐다.

선거휴일관계로 11일자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한편 준비회의에서 미국은 '주거권(Right to Housing)'에 대한 축소요청을 제안했으나 대부분의 나라가 주거권 보장을 주장해 미국의 의견은 무시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측은 미국의 입장에 찬성을 표시해 비난을 샀다.

미국의 주거권 축소요청 배경에 대해 박문수(서강대 사회학과 교수)신부는 "미국 헌법에는 권리로 인정이 되던, 재판을 거쳐 법적 권리로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집있는 사람들이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해 주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한국과 일본정부가 그의 견에 찬성을 한 것은 주거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려는 속셈"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각국 NGO들은 5월15일까지 미국에 항의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유기용 제중독과 대행사업장의 중대재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민주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단병호, 금속연맹)은 8일부터 한 주간을 '산재직업병 추방 주간'으로 설정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또한 연맹측은 임금투쟁에서 산재직업병 추방을 위한 공동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금속연맹은 이 주간에 전국 1백16개 유해위험시설 작업장에 대해 유해위험 작업 중지 스티커 부착과 노동부 위험상황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대책마련 촉구하며, 산업안전법 등 관련법규 위반사항을 찾아내 대검찰청 고발하는 등 공동실천방침을 준비했다. 또한 24일 금속연맹의 공동요구를 당국에 전달하고 유해위험 작업 중지 스티커 부착과 고발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금속연맹은 △한라중공업 최병권사장의 구속 △현대중공업 도장부 역학조사 결과 공개 △유기용제 중독과 관련 종합대책 마련과 검감검진기관과 작업환경측정기관 선택권을 노조에 보장 △과로사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유해위험 작업 중지권 보장 등을 요구해

왔다. 지난 2, 3일 연속으로 발생한 현대중공업(사장 김정국)의 이형우(30, 엔지니어)씨와 이주락(54, 첩관 하역부)씨의 사망으로 심각성이 증대된 산재문제는 우리의 노동여건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사건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회사측은 노동자의 안전의식 미비로 인한 사건으로 치부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김임식)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가두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고발장 접수를 준비중이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상경투쟁을 전개한 한라중공업 삼호조선소 노조(위원장 백운선)는 올해 들어 발생한 22건의 중대재해의 책임을 물어 최병권 사장 등의 구속을 요구했으나 현장 작업조장 최완태(건조부)씨가 구속되는 등 재해의 책임이 작업자에게 넘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조장이 구속된 부서에서는 작업거부를 하고 있는 등 정상적인 작업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죽지 않고 일하게 해달라" 금속연맹, 산재추방 주간 선포

금속연맹은 이 주간에 전국 1백16개 유해위험시설 작업장에 대해 유해위험 작업 중지 스티커 부착과 노동부 위험상황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대책마련 촉구하며, 산업안전법 등 관련법규 위반사항을 찾아내 대검찰청 고발하는 등 공동실천방침을 준비했다. 또한 24일 금속연맹의 공동요구를 당국에 전달하고 유해위험 작업 중지 스티커 부착과 고발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금속연맹은 △한라중공업 최병권사장의 구속 △현대중공업 도장부 역학조사 결과 공개 △유기용제 중독과 관련 종합대책 마련과 검감검진기관과 작업환경측정기관 선택권을 노조에 보장 △과로사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유해위험 작업 중지권 보장 등을 요구해

왔다. 지난 2, 3일 연속으로 발생한 현대중공업(사장 김정국)의 이형우(30, 엔지니어)씨와 이주락(54, 첩관 하역부)씨의 사망으로 심각성이 증대된 산재문제는 우리의 노동여건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사건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회사측은 노동자의 안전의식 미비로 인한 사건으로 치부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김임식)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가두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고발장 접수를 준비중이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상경투쟁을 전개한 한라중공업 삼호조선소 노조(위원장 백운선)는 올해 들어 발생한 22건의 중대재해의 책임을 물어 최병권 사장 등의 구속을 요구했으나 현장 작업조장 최완태(건조부)씨가 구속되는 등 재해의 책임이 작업자에게 넘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조장이 구속된 부서에서는 작업거부를 하고 있는 등 정상적인 작업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시위도중 사망한
연세대 노수석씨의
명복을 빕니다.
- 인권운동사랑방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국보법, 인권남용 최소화했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국보법 폐지 권고

【제네바=장혜선】 지난 3월18일부터 시작해 6주간의 회기로 진행되고 있는 52차 인권위원회가 중반에 접어들면서 열기를 띠고 있다. 9일(제네바 현지시각)에는 한국의 국가보안법, 장기수, 노동법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한국정부 대표와 한국내 인권단체로 구성된 한국인권단체협의회(KOHRNET, 인권협) 대표와의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 다뤄진 8번째 의제 '모든 형태의 구속과 구금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인권문제'에서 아비드 후세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유엔인권위에서 약10분간 전세계의 상황과 그간 활동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연이은 것이다. 아비드후세인씨는 본 보고서(E/CN.4/1996/39) 이외에 작년 한국을 방문한 뒤 그 결과를 실은 한국방문보고서(E/CN.4/1996/39/Add.1)를 별도로 제출하였다.

그는 한국정부에 국보법 폐지를 강력하게 권고하며, 의사표현의 자유를 평화롭게 행사한 이유로 구속된 모든 구속자의 무조건적 석방과 사상전향제도 종식을 권고했다. 또한 노동자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부정하는 불공정한 노동법 개정을 지적했다.

특별보고관의 발표 직후 한국정부를 대표해 박창일 차석대사는 반박권을 행사했다. 한국정부는 작년 51차 인권위원회에서의 발언과 같은 내용으로 국보법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수호하는 '최소한'의 법적수단임을 강조했다.

이어 오후 인권협 대표 장혜선씨는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전적으로 지지, 환영하면서 한국정부의 입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자신이 정치적 신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기수를 계속 구속하는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보법 개정작업이 최근 이뤄졌다지만 92년 7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의 국보법 철폐 권고등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법 개정 역시 한국정부는 93년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제3차 개입금지 조항 폐지를 권고했고, 작년 5월 유엔 경제사회문화권 위원회(A규약)가 제3차 개입금지-복수노조금지 조항 개정을 권고했으나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한국정부의 발언이 거짓임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유엔 인권위원회에 "국가안보,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권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을 아시

아국가들이 승인하도록 권고할 것과 레안드로 데스푸이 인권과 비상사태(state of emergency) 특별보고관의 위인사항을 확대해 국보법 하의 인권침해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제안했다.

한편 한국정부의 발표에 대해 민가협 남규선총무는 "국보법이 안보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고 하지만 현재 법관들에 의해서 남용되고 있으며, 학술적 연구 등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으나 이미 잘 알려진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등에서도 이는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정부발언의 상당부분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했다.<한국정부대표 발언 2면 게재>

-노수석씨 노제를 보고- 나머지 뭉은 남겨진 이들에게...

스무살 청춘을 접은지 13일, '이대로 보낼 수 없다'는 동료들의 뜻에 운구를 멈춘지 6일만에 노수석씨는 망원동 묘역에 잠들었다.

10일 노씨의 운구는 정든 연세대 교정을 뒤로 하고, 자신의 발자취를 좇아 떠났다. 학창시절의 꿈이 머물던 신촌거리에서 부활의 노래를 들으며, 지난달 29일 그렇게도 억울하게 자신의 육신을 찾아간 종로거리에서 영혼을 달래며, 아버지의 땅, 민중의 땅 광주로 떠나갔다.

노씨의 가는 길은 외롭지 않았다. 신촌에서 종로까지 노씨를 예도하며 동행한 수만명의 학생과 시민들, 푸른 대기를 온통 필릭임으로 이어 놓은 만장의 물결은 끝을 볼 수가 없었다.

운구를 바라보며 눈물 흘리던 아주머지, 홍보물을 서로 청해 읽어보는 시민들, 동료들에게 나눠주었다며 몇장 더 달라는 직장여성, 열심히 홍보물을 나눠주는 학생에게 "수고하십니다" 한마디 전해주는 넥타이 아저씨... 봄날의 따사로운 햇살이 사람들 속에 둘러친 무관심의 장막을 활짝 열어젖힌 듯했다.

연세대를 떠나기 전, 대형영정 속의 노수석씨에게서 살짝 고인 눈물을 본 듯했다. 그러나, 거리에서 시민을 만나고, 노제에 참석한 수많은 사람들의 바람과 합성을 듣고난 뒤의 노씨는 살며시 미소짓고 있었다.

'이제는 조금이나마 편안한 마음으로 누울 수 있을 것 같다'며...

이날 노제를 떠나보낸 모든 이들의 마음은 한결 같았으리라. "이제 남은 뭉은 남아있는 우리에게 맡기고 고이 잠드소서"

"경찰과실 인정 어렵다" 재야, 국무총리 면담

10일 고 노수석씨 사건 해결을 위해 박형규(원로목사), 김성수(성공회 주교), 김동완(KNCC 총무), 김승훈(천주교 신부), 황인성(노수석대취위 집행위원장)씨가 오후4시 35분부터 25분간 이수성 국무총리와 면담했다. 황인성 집행위원장은 "3월29일의 시위가 평화적 시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폭력적 과잉 진압으로 노수석군이 죽음에 이른 것"이며 노수석씨의 죽음에 대해 유감 표명 삼엄정한 조사와 친임자 처벌 스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수립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수성 국무총리는 "젊은 학생의 불의의 죽음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에 공정한 조사를 지시해 놓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총리는 "2차례에 걸친 내무부장관의 보고서에서 당시 시위는 화염병을 사용하는 등 불법적인 시위였고, 현재까지 경찰의 명백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황학동 삼익아파트 20동 앞에서 노조상 이형철(57)씨의 좌판을 구경하던 박영생(27, 전국노조상증구지역연합회 사주청천)씨를 중구청가로정미계 용역단속반들이 불법노조상으로 오인해 전카3주의 폭행을 가했다.

박씨는 "성동경찰서측이 가해자인 용역단속반원들에 대해선 귀가조치를 취하고, 피를 흘리고 고통을 호소하는 자신과 좌판주인은 조사를 한다며 8시간을 경찰서에 잡아두었다"고 말했다. 한편, 좌판 주인인 이씨는 앞이 팔이 빠지는 등 전치6주 진단을 받아 현재 북부연세병원 입원 중이며 박씨는 진단서 제출과 함께 성동경찰서에 출도해야 한다.

장애인지발언 공대협 공천철회 요구

국회의원 후보가 공공장소에서 장애인지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7일 전남 목포에서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 합동연설회에서 배종덕(51, 신한국당 후보)씨가 상대후보를 겨냥해 "김홍일씨가 부친인 김대중총재와 닮은 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성이 같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리를 저는 것"이라고 말한데서 비롯된다.

이에 한국장애인지공동대책협의회(의장 조일목, 장애인공대협)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스배씨의 발언과 관련해 신한국당의 사과 광고 게재 스배씨에 대한 공천 철회 등을 요구했다.

불법노점상이라며 폭행 경찰, 피해자 진술무시

불법노점상으로 오인받아 폭행을 당한 시민에 대해 경찰이 용역단속반의 진술과 정황만을 가지고 편파수사에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9일 오후5시경 중구

'정보화사회와 인권' 강좌 세번째
인·터·넷·특·강
· 일시:4월13일(토) 오전10시
· 강사:정길락 (「인터넷 무작정 따라하기」 저자)
· 장소: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715-9185)

<한국정부대표 발언>

(중략)

1. 국가보안법
한국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자유민주주의 수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수단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에서도 형법에 유사한 법적 조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국보법을 유지하는 것이 한국전쟁이 유전상태로 된 이래로 한반도에 계속되어온 안보위협아래에서 안보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는데 국가보안법의 유지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한국민의 공통의 정서입니다.

한국정부는 최근 국보법 개정을 하여 인권침해라고 추정되는 가장 논란이 많은 문제의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으로 국보법 적용에서 잠재적인 인권남용의 요소를 최소화 또는 제거하였습니다.

한국정부는 앞으로 근본적 인권을 고려하여 국보법의 적용이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목적에 엄격히 제한되도록 할 것입니다.

국보법하에서 의사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관해서, 저는 한국 헌법 제37조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서, 국보법은 자유나 권리를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보법은 표현의 자유와 같은 근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보법의 적용은 한국의 자유민주체제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활동을 통제하는데 국한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이념에 대한 학술적 연구나 표현이 국보법하에서 처벌될 수 없습니다.

2. 징기수
일부 NGO에 의해 언급된 이른바 징기수는 '전쟁포로의 처우에 관한 제네바조약'에서 정의한 전쟁포로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정규군이 아니라 반인도주의 범죄를 저지른 개털라 전사였습니다. 이들은 다른 보통수인들과 동등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수인들이 행형법(Penal Institution Act)의 규정 준수여부에 따라 조기석방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재발가능성을 결정하는 수인의 기록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수인의 사회적응 능력 또한 고려됩니다. 남아있는 징기수는 자신의 범죄를 뉘우친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과 같은 조기석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93년 2월 민간정부의 출범이래, 한국정부는 다섯 번에 걸쳐 사면조치를 취했습니다. 많은 징기수가 그러한 사면에 포함되었습니다.

3. 노동법 개혁
한국정부는 전반적인 노동법 개정에 관해 노동조합과 경영자 양측과의 대화를 통하여 합의를 이루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그러한 해결책에 도달하리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수석·진철원·권희정
씨의 명복을 빕니다.
- 인권운동사랑방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신뢰할 수 없다

인권 활동가·전문가들, 정부 입장만 반영 객관성 결여

미국무부의 인권보고서에 대해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전문가들은 남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인용한 통계자료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이 조사결과 드러났다.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 사랑방)은 미국무부가 발표한 95년 남한 인권보고서(보고서)의 내용이 한국의 인권상황을 정확히 바라보고 있는 지에 대해 민변(회장 오영구)등 7개의 인권·사회단체들과 인권에 관심이 높은 변호사,교수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었다.

이번 조사는 보고서가 현장에서 활동하는 운동가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와 다음번 보고서가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발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 조사에 쓰인 질문지는 총 15문항으로, 이중 10개 문항은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해 보고한 내용의 질문이며, 나머지 5개항은 경제.사회.문화적권리에 대해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

피상적인 인권문제 파악 국가보안법, 노동법, 경찰.안기부의 인권침해 관행 등의 내용이 정확하다고 보는가에 대해 대체적으로 보고서의 내용이 근본적인

문제점은 의면하고 피상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는 이에 대해 전혀 정확하지 않다고 "고문의 정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는 점 등 국보법의 폐해에 대한 설명없이 국보법 개정의 필요성을 정부발표에만 근거하고 있으며, 노동법은 한국노총의 입장만 제시되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은 "문민정부의 노동정책은 지난 군사정권과 별다른 차별성이 없다"라고 지적하며 "노동권에 대해 보고서에 전혀 객관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보고서 내용중 부당노동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용자에게 해고 노동자를 재고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의 판결에 대해 재계조치가 없기 때문에 실효가 없고 오히려 해고만 남발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서 인용한 양심수 수치와 조작간첩 희생자들의 불법구금기간 등의 통계 수치가 정확한가라는 물음에 대부분 최소한의 수치를 인용했다는 의견이었고, 대체로 정확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KNCC인권위원회(위원장 김상근)는 "통계적, 현상적으로는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원인 분석이 부족하다"고 의견을 말했다. 민간단체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정부의 규제가 없으며 정부가 잘 협조하는가에 대해 대부분 '규제도 없으며 협조도 없다'고 답했다.

정부의 말과 실제 혼동 또한 정부정책과 현실 운영사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제 발표된 정부정책 중 현실에서 제대로 시행되는 것은 거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조용환변호사는 "진척 시행되지 않는다"며 "미국보고서는 정부의 말과 실제 시행되는 현실을 혼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도소의 인권상황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민변은 "보고서는 교도소내의 인권상황이 많이 개선된 듯이 적고 있지만 예전에 비해 개선된 점은 극히 일부"이며 "보고서에서 음식이 적당하다거나 수감자들의 면회등이 개선되었다는 것은 거짓된 보고"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정보화사회와 인권' 강좌 세번째

인 · 터 · 넷 · 특 · 강

· 일시: 4월13일(토) 오전10시

· 강사: 정길탁 (「인터넷 무작정 따라하기」 저자)

·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715-9185)

권침해가 사라졌다고 본 보고서의 견해에 대해 모두 "결코 아니다"며 "실제 부어간첩 김동석씨 사건으로 인해 증거도 없이 활동가들이 간첩으로 몰렸다고 답했다.

또한 국버법 판결에 있어 보고서에서는 몇가지 사례를 들어 사법부의 독립보장에 대해 극히 일부의 법조인들이 시행한 바람직한 것들을 두고 있다. 그러나, 임영화 변호사는 "조총련 사건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사법부의 최근 추세인 양 보도하고 있다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보고서의 전체 평가에 대해 한국의 인권현실을 알리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민간단체의 입장이 반영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이상영(충북대 법대)교수는 "군사정권때 보다 진전된 인권상황을 중심으로 보고가 돼 현재의 인권상황이 많이 좋아진 듯 보인다"며 그러나 "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내용에 대한 기술이 지극히 적고 비분 석적"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교수는 "비료적 객관성을 갖추려고 노력한 흔적은 있다"고 말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이 조사결과를 정리해 미국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다<인권하루소식 3월29일과 4월3일자 참조>.

조총련계 무조건 북한공작원이가?

범민련 전창일씨 공판, 간첩혐의 적용 무리 지적

12일 오후 서울지법형사 합의23부(담당판사 남성민)는 311호에서 간첩혐의로 구속된 범민련 전창일(75)씨 등에 대한 재판을 속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총련계'라는 규정의 모호성을 놓고 변호인측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전창일씨와 통화했다는 박용이라는 인물이 조총련계임을 내세워 그를 북한공작원으로 규정하고, 전씨에게 간첩혐의를 두고 있다. 그러나, 임영화 변호사는 "조총련계 라는 용어가 △조총련 구성원 △과거 조총련에 속해 있었으나 현재는 무소속으로 있는 자 △해방 후 남북한 어느 국적도 소 유하지 않았으나 단지 이 북출신이라는 이유로 조총련계로 구분된 자 등 다양

한 의미로 파악될 수 있기에, 박씨를 단순히 북한공작원으로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변호사는 전씨의 혐의사실 입증과 관련, 검찰에서 일부만 제출중인 전씨와 박씨의 통화 녹취 기록을 모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가안보 위협하는 노래

꽃다지 징역 1년6월 선고

노래집 <희망의 노래 꽃다지> 제작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2일 오전 서울지법형사6 단독(담당판사 김동윤)은 321호 법정에서 열린 원용호(32), 이은진(3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

년,자격정지 1년을,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노래들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며 유죄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이 끝난뒤, 원씨는 "국민의식은 21세기로 나아가는데 정치와 법은 19세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며 "최소한의 다원주의까지 인정하지 않는 국법은 우리나라 정치질서의 선진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고,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노령수당지급 소송 지연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지난 94년12월 대법원에 제기한 노령수당지급제외처분 청구소송 최종선고가 12일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고법으로 환송되었다. 참여연대는 노인복지사업지침의 위법성과 함께 노인들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의 문제를 이기남(68)씨를 통해 제기한 것이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령수당을 65살 이상의 생활보호 대상자인 노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노인복지사업지침에는 70살로 인하여, 시행하고 있다.

◆ 인권간행물 ◆

- [교회와 인권] 제7호-천주교인권위원회 (777-0643) · 주요내용:일본에 있는 가족에게로 보내 주세요!!/제주출신 양심수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등. 12면.
- 계간 [인권] 봄호-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764-0203) · 주요내용:'국가안보'논리에질식된 인권/아시아 인권현장 제정을 위한 동아시아 지역협의회 참가 보고/유엔인권위, 일본 군위안부 보고서/계일동포인권 등. 92쪽.
- 계간 [나눔터] 제18호-한국성폭력상담소(576-7128) · 주요내용:성폭력특별법 이대로 좋은가/성공한 음란통신은 처벌할 수 없다?/기획 · 개정된 윤락행위등 방지법, 그 효과는? 등. 16면.
- [포럼2001] 4월호-포럼2001(747-8897) · 주요내용: 노수석군의 죽음을 애도하며 등. 68쪽.
- [우리네 아이들]4월호-지역사회학아사연협회(275-8505) · 주요내용:학령전후 아동보육 현황과 과제/방과후 아동지도 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다녀와서 등. 79쪽.
- [한울노동법강좌 14호]-한울노동문제연구소(593-6501) · 주요내용: 사용종속관계없는 고용인, 교섭기부해도 정당/근로대가 받으면 근로계약없어도 조합활동가능 등. 68쪽.
- 자료집:[함께 가자 우리 이 길들]-부천 외국인 노동자의 집(032-651-8351) · 주요내용:부천외국인 노동자의 집 주요활동 내역과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 사례 소개 등. 27면.
- 자료집:[결사와 표현의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사노맹 구속자 석방 대책위원회(323-4963) · 주요내용:사노맹 탄압 현황, 93년 7월에서 현재까지 구속사건 일지/문민'적 정부와 인권 등. 64쪽.
- 자료집:제15대 총선을 대비한 [각정당 여성정책 공청회]-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 · 주요내용:각 정당 여성정책 발표/여성의 정치참여부문 / 고용안정과 고용평등부문/여성인권부문 등. 77쪽.
- 자료집:REPORT ON ACTIVITIES OF KOREA WOMEN'S NGOs-KOREA WOMEN'S NGO COMMITTEE(423-5355) · 주요내용:Equal participation in the politics and decision making processes/Violence against women and women's human rights in korea/Activities and development strategies ofkorean women's organizations 등. 122쪽.

<이달의 주제-장애인>

당사국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아동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보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위있는 생활을 누려야 함을 인정한다.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23조1항-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 715-9185 **팩스 :** 715-9186
통신 ID : rights(천리안, 하이텔)

국과수 발표, 경찰에 면죄부 부여

노수석씨 죽음 단순 심장사 처리

13일 서울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발표를 통해, 시위도중 사망한 노수석씨의 최종사인을 심장 이상에 의한 돌연사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는 부검결과 드러난 노씨의 외상 부분 및 노씨의 구타사실을 증언한 목격자 진술내용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하지 못함으로써 국과수의 부검이 여전히 경찰의 의중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던지고 있다.

1차 부검결과와 현재까지 수집된 여러 목격자들의 증언과 사진 등은, 29일 실제로 경찰이 과잉폭력진압을 행하였고, 노씨가 많은 외상을 입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또한, 노씨가 인쇄소 건물 안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을 때 경찰이 주변사람들의 구조요청을 무시함으로써 노씨의 죽음을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내 책

입자 처벌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런 상황에서 단순 심장사라는 부검결과 발표는 경찰에게 실질적인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국과수 부검을 통한 진상규명이라는 것이 여전히 과거관행과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노씨에 대한 구타증거는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일 부검결과 노씨에게 선 △원쪽 무릎 2군데 0.6x1.1cm, 1.7x2.6cm 크기의 압박성, 마찰성 피부손상 △원쪽 윗팔 2군데 0.2x3cm, 0.6x0.5cm 크기의 피하출혈 △등오른쪽(견갑골부위) 7x5cm 크기의 출혈(근육층 0.5cm 깊이 까지) △등오른쪽 3x2cm 출혈 △오른쪽 허벅지 3x2cm 출혈 △왼쪽 무릎 부위 출혈 등 외력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외상이

다수 발견됐다. 이에 부검에 참여했던 양길승(성수병원 원장)씨는 "상당히 많은 외상이 있어 노수석군이 구타 등 외력에 의해 손상을 입은 것이 인정된다. 심장병 증상없이 일상생활을 무난히 해온 노군이 사망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심장의 이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폭력적 강제해산이라는 상황과 과정(구타, 최루탄 세례와 몰아붙이기 등)이 전혀 심장병 증상이 없었던 피해자에게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따라서 노군의 경우 근

○ 주요 공판 안내 ○

- 4월16일(화) 하광풍,국보법,오후2시, 서울지법형사 7단독 속행, 421호 박충렬, 국보법, 오전11시, 서울형사9단독 속행, 317호
- 4월17일(수) 김영근외2인, 국보법, 오후2시, 서울형사21부 속행, 311호
- 4월18일(목) 김세우외1인,업무방해등,오전10시,서울형사6부 선고,423호 강중숙, 국보법, 오전10시, 서울형사 4부, 선고, 418호
- 4월19일(금) 전창일외2인, 국보법, 오후2시, 서울형사23부 속행, 311호 허인회, 국보법, 오후2시, 서울형사 9단독, 317호

본적인 사인 못지않게 당시의 상황과 조건이 중요한 사인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하루소식4월3일자 참조>

또한, 노씨의 후배 남기돈(연세대, 법학 1)씨는 "사고발생당일 오후 5시50분경 시위진압경찰에 쫓겨 동대문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시위대열에 섞여있는 수석이형을 만났는데 '나 맞았어'라고 2-3차례 말했다. 수석이형은 계속 시위대열과 함께 달려갔으나 다리가 휘청거리는데 매우 힘겨워 보였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경찰에서 발표한 국과수 부검결과를, "심장조직 등의 정밀분석에서 구타와 관련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노씨의 목과 가슴 등에서 발견된 피하출혈 흔적은 심폐소생술 등에 의해 생긴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현중 울들어 중대재해 사망 7명 안전시설 설치 시급

12일 오후4시25분경 현대중공업 8.9도크(베를 건조하는 곳) 신축판공장 현장에서 환델(다자 형강) 설치공사를 하던 노동자 이수정(42, 금미건설 소속)씨가 18미터 아래로 떨어져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로써 현대중공업에서는 올해 들어 7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숨진 이씨와 2인1조로 일했던 조창환씨의 진술에 의하면 이날 사고는 이씨가 이동유압크레인을 이용해 환델을 설치하기 위해 절단 작업을 마치고 볼트를 체결하려다 갑자기 크레인이 작동해 달아놓은 와이어가 팽

팽해 지면서 환델을 건너러 심하게 흔들리면서 이씨를 때려 일어났다.

노조측은 지난 3월25일 옆 신축공사장에서 이와 유사한 추락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시설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크레인안전수와 작업자간의 신호가 맞지않았는데 사고 원인을 두고 있지만, 만약 안전망이 설치되었다면 적어도 죽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잇따라 일어나는 외주노동자의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외주업체의 추방과 외주노동자의 안전대책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자료(요약)-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의 처분취소 대법원 판결문

(중략)
2. (중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노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과 노인의 복지에 관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법 제2조에 규정된 법의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제4조).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건강진단 노인복지법(법 제9조, 노인복지법시행령(영) 제15조, 경로(제4조).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건강진단 노인복지법(법 제9조, 노인복지법시행령(영) 제15조, 영 제16조) 등 여러가지 복지조치를 실시하게 함과 아울러 법 제13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제1항), 노령수당을 지급할 시기 및 대상자의 선정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중략) 그 위임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은 위 지침을 마련하여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략)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 제17조, 제20조 제1항은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연령범위에 관하여 위 법 조항과 동일하게 '65세 이상의 자'로 반복하여 규정한 다음 소득수준 등으로 참작한 일정소득 이하의 자라고 하는 지급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수준(지급액) 등의 결정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보건사회부장관이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에 관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은 65세 이상의 자 중에서 그 선정기준이 될 소득수준 등을 참작한 일정 소득 이하의 지급대상자의 범위와 그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매년 예산확보상황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지급수준과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일 뿐이지, 나아가 지급대상자의 최저연령을 법령상의 규정보다 높게 정하는 등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법령의 규정보다 축소·조정하여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에도, 위 지침은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를 '70세 이상'의 생활보조대상자로 규정함으로써 당초 법령이 예정한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를 부당하게 축소·조정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지침 가운데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를 '70세 이상'으로 규정한 부분은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그 판시이유에서 위 지침이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지침에 따라 행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 제13조, 영 제1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1996. 4.12.

<편집자 주> 4월 12일 대법원(주심 박준서 대법관)은 이기남(67)씨가 제기한 '노령수당지급제외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인정, 노령수당을 65세부터 지급해야 한다며 이를 고법으로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이에 판결문을 심습니다.

주간/인/권/호/름

(96년4월8일부터 4월14일까지)

<8일(월)>
경원대 진찰원씨 6일 불타 숨진채 발견/성신여대 권희정씨 학자단식 뒤 7일 사망 밝혀져/후보 320명 부정방지법 서명/정대협. 일본군위안부에게 위로금 2만엔씩 지급키로 했다/일본정부 계획 철회요구/중국 종신고용제 철폐키로/인천중학 43개교 73명 전공과 무관한 수업 가르쳐/전북일보 파워 5일제, 신문발행 중단/민변 시위 도중 숨진 노수석씨 아버지 노봉구씨를 대리해 박인룡 경찰청장등 진압관련자 서울지검에 고소

<9일(화)>
52차 유엔인권위에서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발표, 국보법폐지·노동법개정 등 권고, '성폭력 특별보고관 보고서를 지지하는 모임' 결성/한국영화감독협회등 한국영화검열철폐 캠페인 시작/부정선거 공대위 발족/대구지방경찰청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아 경북대안에 세운 '4·9통일열사추모비' 강제철거하겠다고 밝혀/대경총련, 5·6공 출신 후보낙선 주장하는 내용의 유인물 뿌린 대학생 총기위협했다며 경찰 공개사과 요구

<10일(수)>
<워싱턴 포스트>지 한·미 군사력이 북한도발 단념시킬 수 있다고 보도/리명중국총리 프랑스 방문, 파리시대 중국 인권침해 시위 잇따라/현재와 「5·18학살자 재판 회부를 위한 광주전남공대위」 <월간조선> 4월호에 실린 5·18관련기사에 대해 항의/노수석씨 장례식

<11일(목)>
일정부, 극동 유사사 광범위한 미군지원활동 법제화 작업 착수/광주지검특수부(김인원 검사) 금품받고 피의자 배준 혐의로 광주남부경찰서 경비과 박승경장 구속

<12일(금)>
5살 취학아동 6.2% 탈락/방송위, 방송4사의 4·11 총선 투표자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방송사 징계등 대책 논의/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5·18 고소·고발사건의 피고소·고발인 중 현역 군인 11명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대법원, 노령수당 지급을 70세이상으로 한 보건부의 '노인복지사업지침'이 현행 노인복지법 위배했다고 판결/꽃다지/제작자 원웅호씨 징역1년6개월, 이은진씨 징역1년 선고

<13일(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노수석씨 사인이 심근병증에 의한 급성심장사라고 최종 부검결과 발표

<해설>-----
4·11 국회의원 총선거가 국민회의와 민주당의 참패로 끝났다.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13일 중요공원에서 예정되었던 시위도중 숨진 노수석씨의 추모 및 규탄대회 불허방침이 내리고, 이어 국과수에서 노수석씨의 최종 사인을 급성심장사라 발표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잠시 할 말을 잊어버린다. 실령 노씨의 사인이 급성심장사라 치더라도 시위도중 울지로 한 인쇄소로 피신해 갔고, 그곳에서 고통을 호소한 노씨의 상태를 듣고도 이를 묵살한 경찰의 태도는 어떻게 봐야할 것인지 반드시 대답이 필요하다. 토끼물이 진압의 과정은 모두 생략한 채 "노씨의 심장이 일반인에 비해 두껍고 섬유질이 부드러운 점 등으로 미뤄 그의 사인은 돌연사다"는 발표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달의 주제-장애인>
 당사국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아동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보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풍요로운 생활을 누려야 함을 인정한다.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23조1항-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해고자 복직·손배소송 취하 삼미특수강(주), 노조와 합의

삼미특수강주식회사(대표 이사 이봉규)는 지난 10일 '해고조합원 복직에 관한 긴급협의회' 회의를 열어 노사 합의를 통해 해고노동자 강제총(42)씨등 8명에 대한 복직과 33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취하를 결정했다.
 삼미특수강노조(위원장 김창남)는 지난 92년 임금동결 및 인원감축반대를 위한 파업투쟁에서 16명의 노조원이 해고당했고, 회사측은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조를 상대로 33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노조는 4년여간 해고자 복직 및 손배철회를 목표로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해 투쟁해 왔다. 이번 합의에 대해 이희모 수석부위원장은 "노사합의로 이런 결정을 내려서 기쁘다"며 "해고자 복직을 위해 93년말경에는 본사에서 조합원들이 30일간 단식농성을 했을 정도로 노조집행부와 조합원들이 한마음으로 투쟁을 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씨는 "회사측에서도 현 집행부가 계속적으로 조합원

의 신뢰를 얻고 있으며 어느때보다 조직력이 막강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대표이사과 노조위원장은 합의서에서 △송철원(37), 강제총(42), 방석부(31), 강신태(33), 김동연(32), 조규수(33)씨등 6명은 96년 4월 15일자로 원직복직 발령 △이기호(37), 김현준(36)씨등 2명은 삼미특수강 영업부서로 복직 발령 단, 이씨등 2명은 복직일자로부터 2년 이내에 원직 발령 △92년 파업사태로 인한 그동안의 피해를 감안하여 장원지 역 발령자에게 사원아파트를, 시외발령자는 전세주택을 보장 △퇴직금·호봉·근

성균관대 여학생 분신!! 황혜인씨 온몸에 신너뿌려 사망

16일 성균관대학(총장 정범진) 울진교정 학생회관 3층 화장실에서 황혜인(물리학과 95학번)씨가 온몸에 신너를 뿌리고 분신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김영득(26, 복학생협의회 정책부장)씨에 따르면 "낮 12시50분경 학생회관 3층에서 광하는 폭음과 함께 불길기 일어 가 보니 황씨가 사망해 있었다"며 "전날도 함께 술을 마시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김씨는 술자리에서 황씨가 "열사가 계속 태어나고 있는데도 우리는 너무 안이하

게 대처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고 전한다. 황씨는 평소 써오던 다이어리에 "결의를 해야 할 것 같다. 더 이상 개념없이 산다라는 얘기는 듣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내 자신이 커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이젠... 노동해방!! 노동자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투쟁하세요"라며 결의가 담긴 글을 남겼다.
 현재 황씨는 수원 아주대 학병원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으며 총학생회(회장 주성철)측은 오늘 낮 12시 성대 금잔디 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황혜인씨 유서내용

내용이 타가고 있다. 죽음이 눈앞에 보인다. 권남문자들은 날 정당치 못한 행동이라 하겠지. 유물론자들은 날 비겁하다 하겠지. 하지만 난 내가 할 수 있는 대중의 의식화·조직화를 위해 이길지 최선을 생각한다. 그리고 종교론자들이 얘기하는 지옥에 가도 상관없다.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현 정권에 대한 대중의 의식이 변함이 있길 바랄 뿐이다. 난 노동해방을 보고 죽기를 바랐다. 그러나 나의 역할은 이길로 선택하게 했다. 뜨겁다! 괴롭다!
 부모님의 얼굴, 동지의 얼굴이 눈앞을 스쳐간다. 하지만 보다 많은 이들이 노동해방을 위해, 정권타도를 위해, 지본가 타도를 위해, 이 세상의 변혁을 위해 투쟁하기만을 난 지금 바랄 뿐이다. 이제 그 실천을 동지들이 해주길.

(시신 옆의 수첩에서 발견)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2%준수요구 민주노총·장대협 자매결연 맺어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은 소속 사업장마다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2% 준수를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 요구안을 마련하고 했다. 이와관련, 민주노총 임원과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의장 조일목) 대표들은 16일 오후 1시 종로 2가 대화빌딩 회의실에서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한 민주노총·장대협 자매결연 구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다'며, "이 소송은 회사의 손해에 대해 노조쪽에 돈을 청구하겠다는 것보다 노조를 와해 시키려는 의도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씨는 "같은 파업을 해도 문화방송측은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전체 조합원이 파업에 동참하고 조직력을 갖는다면 소송 청구가 어렵다"고 밝혔다. 그리고 "전 조합원이 회사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맞서 함께 책임질 것과 서명을 결의하며 회사에서도 쉽게 소송을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속사업장에서의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장애인 2%의 의무고용이 실시되도록 노력할 것을 천명하는데 이어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부담금으로 징수한 1천억원을 장애인 고용확대사업에 적절히 투자할 것 △기업들의 의무고용 회피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개선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모임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양동춘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장애인에 대한 이중적 인식구조를 깨지 않는다면, 장애인 고용이라는 것이 또다시 한두 사람에 대한 시혜에 그칠 것"이라며, "장애인을 인간으로 존엄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권영길 위원장은 "장애인체에 초차 0.83%에 그치고 있다. 특히 30대재벌은 고작 0.24%의 장애인 고용율을 기록해 법자체가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두 단체는 민주노총

클린턴방한 항의시위 한미행협 개정 촉구

16일 클린턴 미대통령의 방한을 맞아, 한미행협의 전면개정과 광주하살 및 미군범죄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는 집회와 시위가 전국적으로 전개됐다.
 이와관련,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대표

전우섭)는 성명을 발표, 한미행협개정의 요구로 △미군범죄에 대한 한국정부의 보상 △미군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확립 △미군기지사용료 징수 △미군부대의 한국인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미군의 밀수와 PX불법유통 방지대책 마련 등을 주장했다.

일본	한국
주일 미군에 의해 저질러진 오키나와 극고생 성폭행 사건에 대한 미국의 태도	92년 윤금이지 살해사건등 10만건이 넘는 주한미군범죄를 대하는 미국측의 태도
주일미군사령관 "이 끔찍한 비극은 인간성에 반하는 포악한 행동으로 미군 제복을 입은 우리 모두가 부끄럽게 만들었다"	주한미군사령관 "충무로 지하철 난동사건에서 미군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다. 사소한 문제를 매우 부끄럽게 확대시키고 있다"
주일미대사 "피해자와 가족 오키나와 주민에게 깊이 사죄한다. 피의자인 미군과 같은 미군인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한다"	주한미대사 "미군범죄는 범죄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언론이 미군범죄를 부정적으로 확대해석해서 한국인들의 반미감정을 유발시키는 데 문제가 있다"
클린턴 대통령 "우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일본인에 대한 어떠한 잘못이나 모욕도 꾀하지 않을 것"	클린턴 대통령 아무 언급이 없었음
크리스토퍼 국무장관 "정의는 실현되어야 하며 범인들은 반드시 처벌될 것"	미하원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디그 바이라이트 위원장 "한국국민들은 일부 미군의 행동에 관한 한국 언론의 도발적이고 부정확한 보도에 자극받아 주한미군의 국내법적응을 확대하려 한다"
"미국정부는 극히 비극적인 사건을 겪은 가족에 대한 정당한 보상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중"	페리 미국방장관 미군들의 충무로 지하철 난동 사건을 빚대어 "우리는 한미관계에 비판적인 시민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해야 할 것"
취한조치 주일미군의 훈련을 하루동안 중지하는 '반성의 날'을 선포하고, 주둔미군과 오키나와 주민의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한 토론등으로 2인간의 공식 행사	취한조치 51년동안 한번도 없음

<장애인 고용의 실태>

- 경제활동가능장애인중 취업장애인은 32%이며, 장애인 중 생활보호대상자는 12.1%에 이르고 있다(전체 생활보호대상자는 총인구의 3.3%).
-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약 44%로 94년 현재 전국의 경제활동참가율 61.8%보다 약 17.8%포인트가 낮다.
- 장애인의 직업별 취업분포는 농업어업 종사자가 31.4%인 반면 전문기술사무직 종사자는 9.4%에 불과하다.
- 장애인가구의 월평균소득은 91만원으로 일반가정의 50% 수준이며, 월평균근로소득은 50만원이하가 48.9%이고 50만원~1백만원이 36.3%, 1백만원 이상 14.7%이다(95년 실태조사).
- 여성 취업 장애인은 월소득 25만원 미만이 36.3%
- 장애인의 월평균근로소득 68만3천원은 95년 2/4분기 월평균임금의 약 64%에 불과하다.

<이달의 주제-장애인>
당사국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아동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조성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위있는 생활을 누려야 함을 인정한다.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23조1항-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일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재벌의 통신시장 독점에 제동

개인휴대통신 범국민대책위 결성

'정보통신 주권수호와 재벌독점방지를 위한 개인휴대통신(PCS) 범국민대책위'(공동대표 김금수등, 대책위)가 결성되었다.
이는 통신사업에 대한 국가 독주를 견제하고 통신사업이 재벌에 의해 이윤추

구 수단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금수(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대표는 "PCS를 비롯한 정보통신사업은 국가와 산업, 국민을 연결시켜 주

는 신경망과 같은 중대 산업임"을 강조하고 "현재의 사업자 선정과 정책결정이 국민적 토론과 공유없이 밀실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문제제기했다. 따라서 "정보통신의 주권수호와 재벌독점방지를 위해 국민적 지혜와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책위 구성 배경을 밝혔다.

또한 대책위는 현재 진행 중인 재벌기업 위주의 사업 선정에 있어 통신장비제조 재벌(현대·삼성·대우·LG)중 한국대를 컴소시업에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들 재벌이 통신서비스 사업과 결합해 통신시장을 독점·지배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기타 기업들의 몫으로 1개의 사업권을 할당한 것은 법적 최대주주 지분 제한 등의 보완책이 없어 대주주 재벌에게 흡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통신서비스 간 구별이 모호해지고 유무선이 통합되어 멀티미디어화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PCS, 주파수공용통신(TRS) 등 각 서비스별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재벌들에게 사업권을 분배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대책위에는 전국연합과 민주노동당 43개의 노동·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23일 정책토론회를

열어 국민주권으로서 통신사업의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재벌위주의 사업자 선정에 대한 피해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5월1일경 노동절 행사와는 별도의 대규모 집회를 잡고 있다.

한편 정부는 15일에 시작된 PCS와 TRS등 통신사업의 신청접수가 마무리 되는 대로 6월까지의 사업자 선정을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법 개정하라" 시, 양규현씨등 석방 촉구

국제앰네스티(AD)는 최근 권영길(민주노동 위원장)씨와 양규현(민주노동 수석위원장), 단병호(민주금속연맹 위원장)씨 등 3명에 대해 즉각적이고 조건없는 석방과 함께 국제적 수준의 노동법 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AI회원들에게 김영삼 대통령과 법무·노동부장관 앞으로 항의서한을 보낼 것을 요청했다.

AI는 "권씨등 3명이 구속된 것은 한국정부가 민주노동 총 창립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민주노동은 정부에 의해 불법단체로 규정되었으나 현재 8백61개의 노조, 41만8천명으로 구성된 전국규모의 노조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씨는 지난 2월에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된 상태이고, 양씨는 쿠데타 세력에 의해 재정권 악법으로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재판거부중이다.

단씨는 작년 11월 현대중공업 파업중 지지연설을 했다는 이유로 1년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성균관대생 잇따른 죽음 김좌진씨 사인불명확·황혜인씨 분신사망

노수석씨가 사망한지 채 한달도 지나지 않아 벌써 다섯명의 대학생이 목숨을 잃어 주변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특히 지난 13일 ROTC생이던 김좌진(토목공학과 3년)씨가 학군단 건물에서 숨진채 발견된데 이어, 이틀 뒤인 15일 황혜인(물리학과 2년)씨가 분신사망하는 등 잇따른 죽음을 접한 성균관대 올전교정은 더욱 어둡고 침울한 분위기다.

김좌진씨는 평소 말이 없는 성격이었지만 ROTC 1년차 중대장을 맡을 만큼 성실한 학생이라고 전한다. 가족들은 "김씨가 전혀 자살할 이유가 없었다"며, 사인을 정확히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씨의 동료들인 토목학과 학생들이 김씨의 사인과 관련해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현재까지 추측만이 무성할 뿐이다.

시상철(토목학과 3년)씨는 "내성적이던 좌진이 ROTC 내부의 문제와 가정의 어려움에 대한 고민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자살·타살의 여부는 불분명하다"며 부검결과가 나오는 이달말까지 계속 진상조사에 나설 뜻을 밝혔다.

한편, 황씨의 빈소가 마련 되어 있는 아주대병원 영안실에는 성균관대 학생들의 조문행렬이 이어지고 있으며, 빈소를 찾은 학생들의 표정엔 황씨의 뜻을 저버릴 수 없다는 강한 의지가 서려 있다.

오병전(총학생회 문화국장)씨는 "작년 11월 이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도 무관심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회의감이 든"이라며, 이후 황씨의 뜻을 저버리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제네바 소식 ③ - 의사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세인씨 인터뷰 의사표현의 자유는 한국민주주의 발전을 가져올 것

52차 유엔인권위 회기중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발표가 있을 때인 11일 특별보고관과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참석자들과의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특별보고관외에 특별보고관 보좌관 Marc Moquette씨와 김선수·한태근 변호사, 김영영(민변), 장혜선(인권협) 씨가 참석했다.

-올해 보고서의 대상으로 한국이 선정된 이유는?

"첫째, 우리는 한국이 상당한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더 진전된 민주주의가 가능한 정도의 발전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지도자, 정부관료뿐만 아니라 여론형성층 및 정책결정자들을 만나 '왜 민주주의의 진전속도가 더 빠르지 못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려 했다. 둘째, 한국은 아시아에서 독일과 비슷한 입장에 처해 있다. 우리는 한국민주주의가 독일의 경험을 배워 남북한 사이에 더 나은 통일실현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알고 싶었다.

또한 한국으로부터 입수한 보고서의 일부 내용, 즉 한국의 안보와 관련해 대립이 있다는 느낌을 주는 학생시위, 노동불안정과 그밖의 것들에 대해 우려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의 이러한 면들을 조사하고, 의사표현의 자유가 어떤 방식으로 지켜질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 했다. 왜냐하면, 의사표현의 자유는 한국민주주의의 완전한 변화와 이행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보고서에서 한국정부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느끼기에 한국의 민주주의와 발전적인 구상을 실현코자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국보법은 문제가 많았던 50년대 냉전기의 산물인 만큼 지금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두 가지 변화의 관점에서, 우리는 국보법이 대체될 절제적인 필요성을 느꼈다.

-보고관은 사상전향제도를 이해하고 있는 몇 안되는 외국인 중의 한 사람인데, 이 문제를 처음 알았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나는 한국이 민주개혁과 권리라는 측면에서 대평양지역에서 본보기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한국은 많은 인권단체들의 감시대상이 되고 있는 주변국들과의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만약 한국이 인권을 억압하지 않는 사회로서 본보기가 될 수 있다면, 주변국들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국보법에 의해 체포된 사람들에 관해 들었을 때, 나는 괴로웠다. 이 문제를 갖고 한국 정부관료들과 논의했을 때, 정부관료들은 "한국이 여전히 안보문제를 안고 있으며 인접국가들의 무력에 의해 위협받고 있어 국보법을 폐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대표들은 실용주의적 필요성 때문에 이 상황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용주의와 함께 도덕성을 가져야 하며, 이를 꼼꼼이 따져봐야 한다. 때문에 국민일부의 의도를 의심하느니 보다 국민들을 믿는다는 견지에

서 한국정부와 지각있는 지도층은 위협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

-사상전향제도의 희생자 중 일부 특히 장기수들이 30년 이상 구금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리라 보는데.

"그렇다. 우리는 체포된 사람들의 대부분이 석방돼야 한다고 몇 년 동안 제안해 왔다. 이 사건들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조사차 방문시 한국정부의 반응은 어떠했나?

"한국정부 장관들과 그 밖의 다른 여러 사람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경계심을 갖고 있었다. 정부는 안정과 변화라는 두 가지 노선을 갖게 마련이다. 안정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보수세력을 대변하고, 변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매우 진보적인데 이들 두 세력간의 갈등은 국가안보문제에 대한 그들의 입장에서도 반영된다.

-의사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해 한국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의사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존 법률을 계속 검토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라면, 의견의 불일치는 있을 수 있고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입장이 받아들여 준비가 되어있어야만 한다. 이것이 국민의 권리인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정부에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가? 한국정부가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보고관과 위원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유엔은 조정기관일 뿐 국가에 대한 집행기관이 아니다. 우리는 각국이 올바른 진로를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유엔에서의 이러한 우리의 역할을 과장해서는 안되며, 반대로 유엔의 역할을 너무 과소평가해서도 안된다. 유엔은 인류의 도덕적 양심의 표현이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입장은 합의 정치의 일부일 수밖에 없는 강대국의 입장과 상충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일은 다른 시대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해 왔다. 이제까지는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해왔지만 냉전시대의 종식과 공산권의 붕괴로 인해 새롭게 조성된 환경을 생각해 보면, 어느 때보다도 민주주의와 자유에 유리해졌다. 그러나, 자유는 얻기는 쉽지만 지키기는 힘든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작업은 끝이 없다.

-다른 나라를 방문할 계획은?

"터키, 페루 그리고 알바니아를 방문할 계획이지만 이 방문은 그 나라들의 사정에 달려 있다.

-북한도 방문할 계획인지

"작년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김일성주석 애도기간으로 가능치 않았다. 계속 북한을 방문하고자 노력할 것이지만, 북한의 초청이 있어야 가능하다.

[제네바=장혜선]

<이달의 주제-장애인>
 당사국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이동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보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풀워있는 생활을 누려야 함을 인정한다.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23조1항-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광주지법, 태아사산한 고애순씨 보석 허가

고씨 재수감 위기 모면, 손배소송 첫 재판 5월10일

18일 태아사산으로 형집행이 중단되었던 고애순(29, 광주전남연합 자동차(주)씨의 보석신청이 구속집행정지기간 만료 이틀을 남겨 놓고 받아들여졌다. 이 보석신청은 이상훈판사 후임으로 온 오세욱(광주지법 형사합의 2부)판사에 의해 내려졌다. 그전에 구속기간중 보석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광주지역단체들은 "고씨가

태아사산을 하기 전에 재판부의 이성적인 판단이 이루어 지지 못해 아쉬움이 남지만 뒤늦게나마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고씨는 작년 12월4일 범민련 광주지부에 가입·활동한 혐의로 수배중 구속되었는데, 당시 임신 8개월째였고 보석신청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출산 한 달을 남겨두고 구속집행정지로

폴러났다. 그 뒤 태아를 사산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여성·인권단체에서 이성수감자에 대한 처우개선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고씨는 국가를 상대로 그동안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놓았으며, 오는 5월10일 첫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소송을 담당할 백승헌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최선의 조치를 했느냐고 물을 것이다. 일찍 조치를 취했다면 불행한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인권협, 경원대 사태해결 촉구방문 경원대생 전면수업거부, 학교측 공권력 투입요구

학생들의 전면수업거부와 학교측의 공권력 투입 요청으로 극한 대립의 양상으로 치달고 있는 경원대사태와 관련해 인권운동사랑방·민변 등 9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한국인권단체협의회(인권협)는 18일 오전 경원대를 방문, 조속하고 원만한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방문에서 인권협은 "장현구씨와 진철원씨의 사망을 비롯해 현재까지 진행된 경원대사태의 책임이 학교측에 있음"을 지적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학교측에 요구했다. 또한, "학교당국이 학생들에 대한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는 또 다른 불행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권협은 이같은 입장을 김원섭 총장에게 직접 전달하고자 했으나, 총장이 행방을 감춰 이용근 학생과장에게 대신 서면으로 전달했다. 이날 방문단은 장현구씨를 형사고발한 장본인으로 학

생들의 지탄을 받아오던 문용식교수를 만났는데, 문 교수는 방문단에게 "인권단체가 전두환을 욕할 수 있는냐"는 등 상식이하의 발언과 욕설을 퍼부어 방문단의 거친 항의를 받기도 했다. 한편, 지난 17일 전체학생 투표에서 약 70%의 투표율에 과반수 찬성으로 전면수업거부를 결정한 경원대생들은 학적과와 전산실을 제외한 각부처실과 모든 강의실을 폐쇄하고 대학본관에 서 농성에 들어갔다. 수업거부 이틀째인 18일 오전 각 과나 단대별로 토론회와 집회를 가졌으며, 오후에는 1천여명의 재학생이 학교운동장에서 집회를 가진 뒤 재단사무실이 있는 시사저널사로 항의방문 갔다. 학생들은 △총장과 학생처장 퇴진 △장현구씨 고소·고발 당사자 4인의 사과 △계적등의 징계조치 철회 등을 간청 이용근 학생과장에게 대신 서면으로 전달했다. 이날 방문단은 장현구씨를 형사고발한 장본인으로 학

<고애순씨 인터뷰>

재판부 보석결정은 당연

-보석신청이 결정됐는데 기분은 어떤가?
 =당연한 결정이다. 재구속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구속 전에 수배생활을 한 것으로 아는데 수배생활은 어떠했는가?
 =95년 2월에 수배가 내려져 11개월간 피해 다녔다. 수배 이유가 범민련 광주지부에 가입·활동한 혐의였지만, 기소할 때는 광주전남연합의 활동에 관한 것 뿐이었다.
 -수배중에도 임신한 상태였을텐데 불안하지 않았나?
 =죄목이 터무니없이 두려움은 없었지만, 집행유예기간 중이어서 구속되면 실형을 받을 것 같아 피했을 뿐이다.
 -구속되었을 때 조사한 형사들도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어떠한 배려가 있었나?
 =계속해서 병원진료와 부당한 구속에 대해 항의했지만 ' 그렇게 화를 내면 아기에게 안좋다'는 충고를 했다. 그 정도가 경찰의 배려라면 배려였다.
 -구속집행정지로 나오기 전 이상을 감지하지 못했나?
 =실제적인 조치없이 의무과장이 괜찮다고 했고 나 또한 그렇게 믿고 싶었다. 몸이 이상이 있어도 내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였다.
 -남편도 고애순씨 이상으로 그동안 힘드셨을 텐데.
 =어찌면 남편의 아픔이 더 컸을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전혀 내색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진것에 대해 아이같이 기뻐했다. 너무 고맙다.

단병호씨 4월혁명상 수상

4월혁명연구소(소장 황건, 연구소)는 4월혁명 36주년을 맞아 18일 오후2시 연대장기원기념관에서 기념 토론회 및 제7회 4월혁명상 시상식을 가졌다.

올해 4월혁명상 수상자는 단병호(48, 민주금속연맹 위원장)씨이며, 단씨가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어 부인 이선애(40)씨가 대신 수상했다. 심기태(연구소 기획위원장)씨는 "4월혁명상은 4월혁명정신의 선양과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헌신적으로 싸워온 인사나 단체에게 수여되는 상"이라고 설명하고, "단병호씨는 노동계급의 핵심으로 민주노조운동의 지평을 확대했으며 탁월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항상 자본과의 투쟁에 있어 최전선에 서 있었다"며 수상이유를 밝혔다.

수상을 대신한 이선애씨는 "머칠전 남편 면회를 가서 4월혁명상을 받게 되었다고 하니 너무 과분한 상을 받게됐다"며 오히려 걱정을 했다"고 전했다. 현재 단씨는 건강안 상태이며 오는 7월 만기출소할 예정이다.

시민단체, 판검사 감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법조계의 공개화와 민주화를 위해 법조인자료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법조인자료실은 전·현직 판검사 2천6백여명의 개인파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개인기록과 경력 등을 싣고 있다. 또한 사법감시센터는 부장판검사를 중심으로 92년 이후 3천여건의 판결자료를 모아 관리하고 있으며, 이후 변호사로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해당법조인의 소송 및 재판기록, 관련 신문기사, 판결문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법조인자료실에는 시민들의 제보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796-8364).

**5·18자료집 제작·판매
 광주전남연합, 디스켓 수록**
 민주주의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은 80년 5월부터 95년 특별법제정까지 지속되어온 5·18 투쟁의 내용과 향후 방향을 담은 자료집을 제작·판매하고 있다. △5·18민중항쟁 전개과정 △희생자의 학살사실을 소개한 5월과 죽음 △헌법소원 전문 △미국의 개입문서 등 A4용지 2백20쪽 분량의 내용이 디스켓 1장에 담겨있다. 가격 3천원. 문의: 062-225-8117

장기수 2명 단식농성 광주교도소 김동기씨등

광주교도소에서 장기수 김동기(66·31년 복역), 최수인(57·32년 복역)씨가 서신교류 불허철회를 요구하며 16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김씨의 경우 의부로부터 온 편지가 전달되지 않았으며, 최씨의 경우 의부로부터 쓴 편지가 몇차례 부쳐지지 않았다고 한다.

성대 분신 황해인씨 장례 유가족 시신 화장 고집

지난 16일 분신사망한 황해인씨의 장례식이 18일 오후2시 성균관대학교 울전교정(경기도 수원시 소재)에서 학생·시민 2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학생과 황해인 열사 학생장'으로 치러졌다. 참석자들은 "김영삼정권의 살인적인 민중탄압이 죽음을 부르고 있다"며 정권의 각성을 촉구했다. 황씨의 시신은 유가족의 주장에 따라 속초 화장터에서 화장되었다.

뉴스엔기 성차별 심각 TV3사 뉴스 모니터 결과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추진본부에서 지난 3월 한달간 TV3사의 20개 종합뉴스를 대상으로 「뉴스안남성영키와 여성영키역할」에 관해 모니터한 결과, 뉴스 속에 등장하는 여성영키의 모습은 남성영키의 보조자에 그치며, 보도시간·보도내용 등에서 뚜렷한 성차고 고용평등본부는 밝혔다.

○행사와 동정○

- 4·19혁명 36주년 기념식
 · 4월19일(금) 오전10시 · 수유리 4·19국립묘지
 · 주최: 전국연합, 민주노총(☎ 747-4364, 765-2010)
 - 제1회 장애인고용촉진경기대회
 · 4월20일(토) 오후2시 · 종묘공원
 · 주최: 전국장애인한가죽협회(☎ 242-30445)
 - 평가토론회- 4·11총선과 진보진영의 과제
 · 4월20일(토) 오후2시-6시 · 서울대 문화관
 · 내용: 1부-4·11 총선의 3대 쟁점(4·11 총선과 지역주의/노동자계급의 투표성향/개혁세력의 진출과 한계) 2부-종합토론회(4·11 총선이후 진보진영의 정치적 과제)
 · 주최: 전국연합, 민교협, 민주노총, 참여연대
 -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제8차 정기총회 및 기념식
 · 일시: 4월20일(토) 오후3시
 · 장소: 대학로 흥사단 3층 강당(☎ 743-25113)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제2차 국제연대포럼
 · 4월22일 오후 7-10시 · 참여연대 회의실(☎ 796-8364)
 · 내용: 21세기를 향한 아시아민중계회(PP21)의 평가와 전망(장호순 사회교육원 연구원)/아시아에서 개발과 민주주의의 문제(이대훈 참여연대사무국장)
 - 문익환목사 기념사업회 사무실 집들이
 · 일시: 4월25일(목) 오후5시-8시
 · 문의: ☎ 764-3036
 - 금속연맹 공동요구 전달식
 · 일시: 4월24일 오후3시(1부), 오후5시(2부)
 · 내용: 1부-금속연맹 115개 사업장 기업주 초청 96년 임단협 노사간담회(여의도 중소기업회관 국제회의실)/2부-96년 임단투 승리결의대회(중소기업회관)
 · 주최: 전국민주금속노조연맹(☎ 051-817-4977)
- <주소 변경>
- 전교조 서울지부
 · 전화: 967-3976/ 전송: 968-3979
 · 주소: 동대문구 청량리1동 53-19 2층
 - 민주노총 해고자 복직투쟁 특별위원회(전해투)
 · 전화: 718-5325/ 전송: 718-5326
 · 주소: 마포구 용강동 51-5 민주당사

□ 여연 상임대표 지은희씨 선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16일 임시총회를 통해 지은희(50) 공동대표를 상임대표로 선출했다. 지은희씨는 현재 한국여성사회교육원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기획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달의 주제-장애인>
당사국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아동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보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풀워있는 생활을 누려야 함을 인정한다.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23조1항-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말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학우들과 함께 강의실에서 공부하고 싶다

장애우연구소, 전국 24기 대학 편의시설 실태조사

장애인의 달을 맞아 전국에서 장애인행사가 쏟아지는 가운데, 장애우연구소(소장 이성재, 연구소)가 발표한 장애인특례입학 실시 대학의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가 장애인행정이 얼마나 '빛좋은 개살구'인가를 실감나게 한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학생들은 대학생활에서 강의실·도서관 등 편의시설 문제, 학사관리 등 행정적인 측면, 교수·학우들과 인간관계 등 장애인의 접근권(Rights to Access)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실제 장애학생들은

통학문제부터 시작해 강의실·식당·화장실·도서관 등으로 이동하는 연속적인 동선을 제외하고라도 강의실조차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이다. 장애인 대학특례입학제가 시행된 지 2년, 현재 21개 대학에서 장애인 대학특례입학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연세대를 비롯한 24개 대학 27개 캠퍼스에서 대학생활을 하는 장애학생은 3백여 명에 이른 것으로 보고되었다. 연구소는 14개 대학 18개 캠퍼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와 함께 5개

대학 95학번 83명을 대상으로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연구소는 각 대학에 장애학생의 원활한 대학생활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학내 교육환경 개선과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된 정책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편의시설조사 결과 대부분 대학에서 편의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유도블럭이나 점자안내지도가 설치된 대학은 전국 어느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을 보면 계단과 경사로 유효폭은 최소 1.2미터인데 반해 대학건물에는 경사도가 설치된 학교의 절반이 넘지 않았고, 규정에 맞게 경사도가 설치된 학교는 한 곳도 없었다. 또한 화장실의 출입문 유효폭 규정인 0.9미터 이상을 지키거나, 점자안내표시가 있

는 화장실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장애인용 공중전화는 장로회신학대와 제주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에 1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장애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다른 학생들이나 교수들과의 대인관계를 들었다. 이같은 결과를 연구소는 18일 오후 2시 종로 대학기독교사회복지관 강당에서 발표했다. 김성재(한신대교수)이사장은 "장애인 특례입학을 실시하는 대학들이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특례입학제도를 통해 도덕적 이득과 경제적 수익을 얻으려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강병근(건국대 건축공학과)교수는 장애인 교육시설환경 개선을 위해 대안지적했다. 이와함께 강교수는 수치중심의 해결방식보다는 안전중심의 합리적 해결방안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자원봉사자와 공익요원의 활용과 초등학교에서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전국 모든 학교의 시설기준명 개정 등을 요청했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아래 지로로 납부를

지로용지를 분실하신 독자께서도 전국 어느 은행이든지 지로 창구에서 아래의 지로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로번호: 7618848

“김영삼정권타도·미제축출”

여수 수산대생 19일 분신사망

19일 오후 3시경 여수수산대 오영권(21·식품공학과95학번)씨가 학내 뒤편관 1층 화장실에서 은몸에 신나를 붓고 분신사망했다.

현장에서 발견한 가방속에는 A4 용지에 붉은 메직으로 '김영삼 타도·미제축출·조국통일만세!'라고 써여진 글이 발견되었다. 오씨는 이날 오후 5시30분경 여수 성심병원 영안실로 옮겨졌다.

이날 낮 12시경 4·19정신계승집회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오영권씨는 학우들의 무관심에 안타까워했다고 주변사람들은 전했다. 3시경 수산대 뒤편관 화장실에서 심하게 타는 냄새가 나, 가본 안상호(해양토목공학과 92학번)씨가 안씨를 발견하고 진화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은몸이 화염에 휩싸여 소화기 2대가 동원되었으나 살려내지 못했다.

그는 95년부터 청경교지 편집국 활동을 했으며, 작년 6월13일 여순총협 연합집회시위 도중 직격탄을 맞아 왼쪽눈을 실명했다. 오씨는 지금까지 교지편집국

학술부에서 활동해왔다. 저녁 7시50분 현재 여수 성심병원에는 사수대 2백여 명이 오씨의 시신을 지키고 있으며, 소식을 전해들은 학생들이 점결중이다.

김대표 화환 짓발하 4월혁명 기념식

4·19혁명 36주년을 맞아 전국연합, 민주노총 등 사회·노동단체 회원 1백여명은 4·19국립묘지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이들 단체들의 기념행사 전에는 정부주변사람들은 전했다. 3시경 수산대 뒤편관 화장실에서 심하게 타는 냄새가 나, 가본 안상호(해양토목공학과 92학번)씨가 안씨를 발견하고 진화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은몸이 화염에 휩싸여 소화기 2대가 동원되었으나 살려내지 못했다.

그는 95년부터 청경교지 편집국 활동을 했으며, 작년 6월13일 여순총협 연합집회시위 도중 직격탄을 맞아 왼쪽눈을 실명했다. 오씨는 지금까지 교지편집국

가스폭발 1명 사망 현중 20일동안 4명죽어

현대중공업(사장 김정국)에서 일주일만에 또 다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오전 8시25분경 현중 특수선 사업부 7도크 77호선(해군함정)에서 가스폭발이 일어나 조성동(44, 특수선 선각 건조5팀 반장)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문무기(35, 특수선 선각 건조5팀)씨가 얼굴과 팔뚝에 2도화상을 입는 중대재해를 당했다.

이날 사고는 조씨가 압력 테스트를 위해 탱크안에 들어가 절단기 불을 켜는 순간 '땡'하는 소리와 함께 가스폭발이 일어났으며, 화상을 당한 문씨는 현재 울산혜성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이다.

사고현장 조사를 마친 현중노조(위원장 김익식) 산업안전부추에 따르면 "탱크 작업 중에도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했으며,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회사측이 무시했던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조측은 특수선 노동자들에게 중대재해방지

스티커를 부쳐 작업장이 안전하다는 판단이 서기전까지는 작업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사고당일 점심시간에는 2천여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집회를 갖고 김위원장과 집회에 참여한 모든 노동자들이 직접 사장을 찾아가 △원인 규명 △전 사업장의 가스라인 안전 점검 실시 △책임자 처벌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노조 편집실 문대성(34)씨는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온 지 15년이 되었지만 사고현장에서 사장이 직접 나와 본 것은 오늘이 처음"이라며 "그동안 모든것이 노동자 책임이라고 말하던 회사측이 조금은 심각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들어 현중에서는 이주락씨등 외주노동자 5명을 포함해 8명의 노동자가 숨졌으며 4월 한 달동안에만 4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죽었다.

장애인정책 재검토 촉구 참여연대 성명서

참여연대는 장애인의 난을 맞아 장애인에 대한 인식전환과 정책의 전반적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30대 여인 분신 증태 “김대통령 만나게 해달라”

오영권씨가 숨진 시각과 유사한 시간인 19일 3시50분경 4·19국립묘지에서 안미옥(37·여, 미혼)씨가 분신, 인근 한일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있다. 당시 현장에는 북부총련소속 학생들이 4·19 마라톤을 마친 뒤 묘지참배중으로 목격자들에 따르면 안씨가 은몸에 불을 붙이고 계단 밑으로 뛰어들었다고 한다. 참배순서를 기다리던 국민대생들은 긴급하게 불을 끄고 깃발에 물을 묻어 응급조치한 뒤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다.

병원에서 안씨는 안절부절 못하며 계속 "김영삼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신 2-3도 화상(70%)을 입은 안씨는 생명이 위험한 상태로,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한다고 병원측은 전했다.

고 오영권씨가 남긴 시-

같은 95학번 이견만

<1> 같은 95학번이건만/ 너희 먼저 떠나는구나./ 내 영원한 동지들/ 너희들의 얼굴도, 이름도/ 낯설지 않고.../ 우린 어디선가 아니/ 한총련의 깃발아래/ 함께 모인 적이 있기에./ 그리고 너희들의 빈 자리는/ 내가 채울 것이다./ 불타는 적개심으로.

<2> 같은 95학번이건만/ 너희 먼저 떠나는구나./ 내 사랑하는 동지들/ 너희들의 글도, 외침도/ 낯설지 않고.../ 우린 어느 순간엔가 아니/ 조국이 부를 적에/ 함께 투쟁한 적이 있기에./ 그리고 너희들의 빈 자리는/ 내가 채울 것이다./ 가열찬 투쟁으로서.

<3> 수석아/ 혜인아/ 곧 통일 조국의 품에/ 물어 주겠다./ 내 목숨 걸고/ 맹세하련다.

- 1996. 4.18. 목요일 민중이 열사에게 바치는 글

<이달의 주제-장애인>
당사국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아동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조성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위있는 생활을 누려야 함을 인정한다.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23조1항-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3년째 원진레이온 약속 불이행 자격증 취득 통해 54명만 재취업

수백명의 직업병 환자와 22명의 사망자를 냈던 원진레이온이 폐업한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정부와 화사측이 노동자들과 합의했던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93년 7월 폐업초기 이후, 그해 11월 노·사·정 3자 새 삼원진노동자의 정부투자기관 재취업 △산재종합

병원 설립 △직업병 환자들과의 재활기금 마련 등에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회사와 정부측은 이를 반복·불이행해 왔다. 이에 원진레이온비상대책위 배기수위원장은 "원진레이온부지 매각대금 중 1백50억원을 재해위로금으로 출연하기로 한 3년전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며, 원진 실적자들의 정부투자

기관 재취업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또한, "6백37명의 직업병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하기 위한 산재종합병원 설립이 시급하다"며, 정부의 구체적인 병원설립계획 제시를 요구했다. 재취업이 요구되던 2백여명의 원진노동자중 불과 54명만이 서울도시철도공사(제2기 지하철공사)에 채용됐는데, 이들은 스스로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뒤에야 취업할 수 있었다. 대부분 고령인 나머지 원진노동자들은 각종 건설현장을 떠돌고 있으며, 30여명은 아예 취업조차 이뤄지지 못한 상황 이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진레이온은 88년 최초로 이황화탄소 직업병 참상이 사회에 알려진 이후, 91년 1백37일간의 김봉환씨 장례투쟁, 93년의 폐업거부 투쟁 등을 통해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심각성을 사회에 여론화시켰으며, 정부투자기관 재취업 요구를 통해 고용문제를 사회문제화해 왔다.

30일창립, 발기인모집 조수원추모사업회

병역·노동악법 철폐, 산별노조건설 등을 요구하며 작년 12월 자살한 조수원(대우정밀 병역특례해고노동자)씨 추모사업회(준)가 창립대회를 앞두고 발기인모집에 들어갔다. 추모사업회 발기인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발기인 동의서와 회비 1만원을 입금하면 된다.

오는 28(일) 오후2시에는 조수원씨가 잠든 솔밭산 고소참배를 갖고, 30일 오후7시 부산대에서 노동해방영사 조수원추모사업회 창립발족대회를 갖는다.

또한 추모사업회는 고조수원씨의 삶과 투쟁을 담은 추모자료집 「산맥에 우뚝서라」(310쪽)를 판매하고 있다. 가격은 1만원. 문의: 051-516-0165/ 국민은행 103-21-0672-630 예금주황철이

<동티모르 독립운동가와의 간담회>

- 최근 동티모르 문제에 대한

국제정치 동향과 동티모르 독립운동의 전망-

일시: 4월23일(화) 오후 6시-8시
장소: 세실 레스토랑(문의: 734-1484)
강사: 동티모르 독립운동가
회비: 1만원 정도

◎ 주요 공판 안내 ◎

- 4월23일(화) 장학노의2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등, 오전10시, 11단독, 311호 신건 권영길, 일반교통방해등, 오후2시, 3단독, 320호 속행
- 4월24일(수) 강희원,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부, 311호 신건 한봉수, 국보법, 오전11시, 합의 2부, 311호 신건 강재우의 8인, 국보법, 오후2시, 합의 2부, 425호 속행
- 4월25일(목) 유영욱, 국보법, 오전10시, 합의 2부, 311호 신건 김형덕, 국보법, 오전10시, 단독3부, 317호 속행 전제순, 국보법, 오후3시, 합의 4부, 418호 속행 골리나 프랭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등, 오전11시, 합의 2부, 422호 속행
- 4월26일(금) 장준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오전10시, 합의 2부, 425호 속행 임준원·김진중,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부, 425호 신건 이상윤, 국보법, 오전10시, 합의 2부, 311호 신건 유용기, 국보법, 오전10시, 합의 1부, 418호 속행 김동국, 업무방해등, 오전10시, 합의1부, 418호 속행 양규현, 제3차계입금지등, 오후2시, 단독4부, 421호 속행
- 4월27일(토) 김영곤의2인, 국보법, 오전10시, 합의 2부, 311호 선고 -이상 서울지법

경찰 보복성 구속 노점상연합회 항의

성동경찰서는 21일 오전 11시경 폭행을 저지른 용역 단속반원들의 진술만을 토대로 박영생(27, 전국노점상중구지역연합회 사무차장)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 구속 수감했다.

박씨는 지난 9일 중구청 가로정비계 용역단속반들에게 불법노점상으로 오인을 받아 진치3주의 폭행을 당했고, 이를 말리던 좌판 주인 이형철(57)씨는 앞이빨과 어깨가 빠지는 등 진치6주의 폭행을 당했다. 하지만 성동경찰서는 폭행을 가한 용역반원들은 쪽으로 돌려보내고, 박씨는 8시간동안 조사하는 등 잡아두었다.

이에 중부노점상연합회(회장 소순관) 회원 20여명은 편파수사라며 성동경찰서를 방문항의했다. 당시 폭행을 당했던 피해자 이씨와 소화장 등 4명은 성동경찰서 정광록 계장과의 면담에서 피해당사자와 가해자등 3자대면을 통해 피해관계를 명확히 밝혀줄 것과 편파수사금지를 요구했다.

면회를 통해 박영생씨는 "구속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들이 '이 새끼야 너 풀러 나면 또 잡아넣을 거야'는 등의 폭언을 했다"며 "미란다원칙등 피의자 권리에 대한 고지가 전혀 되지않았다"고 불법수사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오영권씨 오늘 장례 현정권타도 유서 남겨

지난 19일 '김영삼정권 타도, 조국통일' 등의 유서를 남기고 분신사망한 여수수산대생 오영권(21)씨의 장례가 오늘 거행된다. 운구는 여수수산대에서의 영결식과 시내 노계를 거쳐 장지로 이동한다. 한편, 21일 저녁 여수지역

학생들은 오씨의 분신과 관련, 예곡보도를 내보낸 MBC를 항의방문했다. 여수 MBC는 19일 오씨 사망에 대해, 오씨가 작년 한국통신파업 시위에서 경찰의 돌맹이에 맞아 한쪽 눈을 실명한 것을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보도했다.

사민청 수배자 연행 성세경씨 불심검문중

지난 20일 저녁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사민청)사건과 관련, 수배중이던 성세경(31)씨가 경찰의 불심검문에 의해 연행돼 22일 서울지검으로 송치됐다. 성씨는 94년 8월 안기부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됐으며, 검찰이 기소중지한 상태였다.

한편, 사민청은 94년 8월 국보법 위반혐의로 간부 9명이 구속되고 2명이 수배되었으나, 구속자들은 95년 2월까지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판문점회담 결정 함세한씨등 복속추진

지난 19일 불교인권위(공동대표 진관)는 전쟁포로인 김영태·함세한·김인서씨의 복송을 위해 판문점에서 조선불교도연맹 간부와 예비회담을 갖기로 했지만 정부측의 불허로 '자유의 다리'도 건너지 못하고 되돌았다.

진관스님과 함께 판문점으로 가려했던 불교인권위 서태스님은 "한 달전 통일원에 북한주민 접촉신청서를 접수하고 통일원의 응답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응답이 허가가 난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인권위측은 다시한번 접촉신청서를 통일원에 접수하고, 빠른 시일 내 다시 날짜를 잡아 회담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주/간/인/권/호/름

(96년4월15일부터 4월21일까지)

<15일(일)> 미국방장관, 오키나와 미군기지 축소에 따라 미병력 일부를 캄보디아나 한국으로 이전키로/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 인종차별정책의 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첫 공개 청문회 개최/서울교사협(준), 복수교원단체 요구 헌법소원

<16일(화)> 성균관대학 울전교정 학생회관 3층 확장실서 황혜인씨 분신지식/민주노총·장대협, 장애인의무고용비율 2% 준수율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요구안 마련/미대통령의 방문맞아, 한미행협 전연계장과 광주학살 및 미군범죄에 대한 사과 촉구집회 전개

<17일(수)> 정보통신 주권수호와 재벌독점방지를 위한 개인휴대통신 법국민대책위 결성/광주시, 518정신을 계승위한 기념제단에 10억원 출연/여수 수협 소속 36개 이촌 조합, '유류오염 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을 상대로 보상금 청구소송 서울지법에 제출

<18일(목)> 태아사상으로 형집행이 중단됐던 고애순씨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인권협, 경원대 사태해결 촉구방문/단병호 금속연맹위원장 4월혁명상 수여/광주교도소 장기수 2인, 서신교류 불허철폐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성대 분신 황혜인씨 장례 치류/순세탁방지 국제회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려

<19일(금)> 4·19혁명 기념일/여수수산대 오영권씨 "김영삼정권타도·미제축출"요구하며 분신지식/원종노동자 조성동씨, 가스폭발로 사망/안기우씨 4·19국립묘지에 분신/서울고법, 임의동행으로 붙잡아간 피의자를 48시간안에 풀어야 해도 수갑을 채워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했다면 불법구금이라고 판결/베트남전쟁 참전 고엽제 피해자 1백37명,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유엔 인권위 총회, '위안부동원 국제법 위반'이라며 특별보고관 보고서 채택

<20일(토)> 장애인의 날/모스크바에서 선진7개국 정상들,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는 원칙에 합의/러시아 국영 R-TV,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약 20만명의 정치범이 있다고 폭로/일본 지식인 1백60명, 군위안부 배상추구하는 성명발표

<21일(일)> 민주노총, '민주노총 인정했다'며 불참 김경/영광경찰서, 영광원전 반대시위 관련 김현수씨등 2명 구속

<해설>-----
지난 한 주간은 젊은 학생 2명의 죽음을 보아야 했던 암담한 시간들의 연속이었다. 숨진 황혜인씨와 오영권씨 이 두 사람 모두 노수석씨의 죽음에 대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로서 애痛해 했으며, 노씨의 죽음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한 희생이었음에도 누구 하나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현실을 비통해 하며, 김영삼정권타도를 외치며 죽어갔다. 노씨는 명확한 죽음원인을 밝히지 못한채 망월동묘역에 묻혔고, 황씨 또한 한줌의 재로 날아가 버렸다. 이제 할 일은 남아 있는 자들의 몫이라고 말하지만 뚜렷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점점 머릿속에서 잊혀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이달의 주제-장애인>
 당사국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이동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보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풍요로운 생활을 누려야 함을 인정한다.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23조1항-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정보통신업 국민의식 지배예상

국민 참여 속에 통신업 재검토 필요

17일 구성됐던 '정보통신 주권수호와 재벌독점방지를 위한 개인 휴대통신(PCS) 범국민대책위'(공동대표 김금수, 대책위)는 23일 PCS 사업자선정 등 정보통신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23일 오후2시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열린 공개토론회에는 1백50여명의 시민과 노조원들이 참석해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큰 관심을 나타냈다.

김금수(대책위 공동대표, 노동사회연구소 소장)씨는 "98년 통신시장의 완전 개방을 앞두고, 공공성과 공익성이 앞서야 할 통신산업의 지분을 재벌이 나눠가질 위험에 처해있다"며 "뒤늦게나마 구성된 범국민대책위가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현재 진행중인 통신사업자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통신사업이 갖는 특수성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시장 개방과 통신사업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검토 (김상곤 민교협 공동의장)

정보통신산업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는 정보통신산업이 2001년에는 시장 규모가 GNP 대비 15%에 해당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저공해산업으로 시장 잠재력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과 의식까지도 규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대한 산업에 전체 국민과 통신관련 노동자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미 89년부터 진행된 미국의 통신개방 압력으로 내적 역량이 키워지기 전에 모든 것을 개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현재 진행되는 정부 주도의 정보통신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동

신산업정책의 공공성과 공익성, 기간산업적 특성, 주체인 국민의 동의 등이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주권국가의 대표로서 통신시장 개방압력에 대처해야 하고, 한국통신의 민영화는 공익성이 크게 위축될 것이므로 일방적인 민영화 추진계획은 철회해야 한다.

통신산업의 기간산업적 특성상 한국통신이 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 특히 통신정책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PCS 사업자선정 문제점과 대책 (김영철 한국과학기술 청년회 지도위원)

PCS 사업자의 선정은 경제적인 PCS망의 구축 방법과 저렴한 요금체계, 기간망 보유자에 의한 서비스의 조기 제공 등이 이뤄진 다음에 그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정책의 방향은 국익과 국민 편익에 복무해야 한다. 서비스 체계에 대한 논점은 '독점이나, 경쟁이나'가 아니라 '망의 통합이나, 분할이나'는 차원에서 맞춰야 하고, 전국적으로 균형있는 정보화 사업은 추진해야 한다.

단체협상중 노동자 구속 정성철씨등 국보법 위반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을 준비중이던 노동권이 집 앞에서 잠복중인 경찰에 의해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구속돼, 경찰과 회사측에 의한 노조탄압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경남도청은 지난 19일 밤 10시경 태광산업 울산공장(공장장 허의웅) 노조원인 정성철(27, 조사동계부장)씨와 윤현정(24, 여성부장)씨를 윤씨의 집앞에서 연행·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이들은 현재 울산 중부서에 수감되어 있으며, 경남도청(창원 소재)으로 오가며 수사를 받고 있다.

태광산업 울산공장은 현재 노조와 회사측이 단체교섭 중이며, 이 과정에서 정씨는 임금요구를 작성하는 등 노조업무의 중책을 맡아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신용준(33, 노조 기획실장)씨는 "정씨의 구속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는 회사와 경찰이 짜고 노조를 말살하기 위해 것으로 생각되며, 명백한 노동탄압"이라고 지적했다.

불교인권상 후보추천 18일까지 접수

불교인권위(공동대표 전관, 한상범)는 인권증진에 노력한 개인이나 인권단체에 수여하는 불교인권상 후보추천을 5월18일(토)까지 받는다. 심사발표는 20일 오후2시에 있을 예정이다. 문의전화: 734-6401

'96 임단투 본격화

7개 노조 파업, 대한보증보험 쟁의신청

과 사업장의 상반기 임금 단체협상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현재 임금인상 요구안을 확정할 노조는 2백31개로, 집계 대상 노조의 23.3%이다. 이 가운데 임금교섭을 시작한 노조는 1백76개로 이는 작년에 비해 임금교섭시기가 다소 늦은 편이지만 이후 임단투요구안 확정과 교섭이 들어갈 노조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아래 표 참조).

현재 건설경건노조(위원장 김우철)등 7개 노조의 파업이 진행중이며 대한보증보험노조(위원장 박재봉)가 12일 쟁의발생신고를 냈다.

또한 현대그룹노조조합총연합회(의장 이영희)은 지난 13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임금인상 공동요구액 확정 △단체협약 공동요구 △민간주노총 강화 △금속조직 통합기반 조성 △사회개혁투쟁 대중화 등 임단투 요구안을 확정했다.

전국민주금속연맹(위원장 단병호, 금속연맹)은 오늘 '산재추방투위 노사공동구성' 제안과 '자율·성실교섭 노사공동결의문' 채택 등 공동요구안과 임단투승리의 결의대회 등을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가지며, 26일 동시다발로 주 40시간제 쟁취를 위한 중식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1일 전면총파업에 돌입한 구미의 한국합성노조(위원장 황영호)는 두 차례의 교섭이 결렬된 후 더이상 진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22일부터 27일까지 서울상경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진권(노

조 부위원장)씨는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일제시간 작업을 해 제품을 출하하는 등 노력을 보였지만, 회사는 오히려 노조 간부 6명에게 사표제출을 요구했다"며 비난했다.

현재 상경한 35명의 조합원들은 23일 각 당사 방문과 서울무역부(책임자 박조철부사장)의 항의방문등을 진행했으며 27일까지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서울역과 명동성당 등에서 선전전을 벌일 예정이다.

경원대, 장래 치르기로 장현구·진철원씨

본신사망이후 1백33일간 미뤄져온 경원대 고 장현구씨의 장례가 25일 치뤄진다.

유족과 학생들은 경원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며, 장례이후에도 계속 학원민주화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학교측이 장례를 문제해결의 선행조건으로 제시해온 점으로 미뤄볼 때, 장례이후 학교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편, 24일에는 고 진철원씨의 장례도 치뤄질 예정이며, 당일 오후 6시엔 추모공연 및 문화행사가 경원대 교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기사제보 : 715-9185

	집계대상 노조수	요구확정 노조수	임금인상 요구율	교섭시작 노조수
전체	993	231	15.7	176
제조업	317	100	14.8	57
비제조업	676	131	16.5	119

경원대문제 정부, 시민·사회단체 나서야

경원대사태가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고 있다. 22일 학교당국은 학생들이 요구한 최후답변시한에 맞서 휴업령을 발표했다. 이는 '더 이상의 대화는 없다'는 극단의 선택이요, 최후 선언이었다.

학원민주화투쟁 5년, 장현구씨 사망후 1백33일, 진철원씨 사망후 3주째... 그러나, 학생들에게 돌아온 것은 무더기 징계와 고소·고발, 수배와 구속, 그리고 학교측의 휴업령과 언제든지 예상되는 공권력 투입이다. 지금 학생들은 지쳐 있다. 너무나 힘들고 외롭다. 교육부는 나 몰라라 뒷집만 지고 있고, 언론은 건물집거 등만 집중보도함으로써 학생들을 폭도로 몰고 있다. 사회·재야단체들도 온통 총선이다 뭐다하며 관심을 돌려 경원대 문제는 의면당해 왔다.

이런 속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방식, 전면수업거부와 강의실 폐쇄라는 극약치방을 내렸다. 더 이상 물러날 곳도 물러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모든 강의실 입구는 책걸상으로 봉쇄되었고, C동 건물의 진한 향내는 17일간 머물렀던 고 진철원씨의 자취를 아직 지우지 못하고 있다. 대학본관 건물엔 교직원 대신 학생들이 자리를 잡아 토론과 농성을 진행하고, 출근은 했지만 일손을 놓고 있는 교직원들이 교정을 서성거릴 뿐이다. 휴업조치와 언제 있을지 모를 학교당국의 경찰력 요청에도 불구하고 연일 학생들은 집회와 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결코 평소의 대학캠퍼스라고 볼 수 없는 광경, 이것이 지금 경원대의 모습이다.

문제해결의 칼자루는 학교당국이 쥐고 있다. 그러나, 학원의 민주적 운영을 요구하는 학생들에게 학교가 취한 대응은 오로지 징계와 고발, 그리고 마침내 휴업선언이었다. 학생을 제자가 아닌 적으로 보는 듯한 몇몇 교수들의 반응은 '왜 지금껏 사태가 해결될 수 없었나' 하는 의구심을 풀어준다.

이제껏 학교측은 학생들에게 무조건 장례부터 치를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유족과 학생들이 장례를 결정한 후에도 학교측에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경찰력 투입 요청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조금만 더 제자를 사랑하고 교육자로서의 자세를 견지한다면 결코 취할 수 없는 최악의 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이다. 이래로 경찰력이 투입되고 그 결과, 또다른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그때가서 누가 책임질 수 있단 말인가?

더 늦기전에 정부는 경원대학당국의 이성적·교육적 해결을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할 것이며, 언론은 경원대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보도해야만 한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도 경원대사태를 더이상 학생들의 외로운 몸부림 속에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경원대 사태는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원대 사태에 있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학교측은 독단적 학교운영과 그 과정에서 희생된 장현구, 진철원씨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사과와 명예회복을 해야할 것이며, 부당하게 징계·고발 조치된 학생들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이것이 그 동안 힘들게 싸워왔던 경원대생들에 대한 정당한 댓가이며, 젊은 나이에 산회해간 장현구, 진철원씨의 넋을 위로하는 길이다.

제네바 소식 ④ - 52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

어린이·청소년, 재소자, 고문·실종문제등 논의 활발

-52차 유엔인권위원회 2주간 회의 주요 쟁점들-

□ 의제 8 '구속, 구금자들의 인권문제' 쟁점

-한국 인권침해국으로 낙인 못 면해
지난 9일 있었던 의제 8에서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세인씨의 한국보고서 발표에 대한 민간단체(NGO)의 관심이 쏟아졌다.
국제 펜클럽의 조앤 리덤 에커맨여사는 "국가보안법과 반테러법은 작가와 언론인의 표현의 자유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펜클럽은 "국보법으로 구속된 한국 작가·언론인·출판인 11명은 석방되어야 하며, 이들 양심수의 구속은 세계인권선언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특별보고관의 권고에 환영을 나타냈다.
제임스 실크(캐네디 재단 소장)씨는 한국에서는 95년 현재 국보법으로 2백여명의 양심수가 구속되었으며, 작년 3월에는 김무용씨가 빨치산운동을 집필한 혐의로 구속되고, 12명의 대학생들이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을 보고하면서 "남한의 국보법 남용은 불법이며, 평화적인 정치토론은 물론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오히네스버그원칙 가입촉구, 보고관 임기 3년 연장 요구
제 베너(Article 19)씨도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환영하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가안보와 관련한 법률 때문에 인권침해, 특히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나라도 나이지리아, 터키, 잠비아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더불어 그는 회교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작가와 언론인들의 죽음과 구금을 언급하면서 52개국으로 구성된 회교국가연합체(OIC)와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면담을 요구했다. 그는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특별보고관에게 효과적인 국제 조기경고제도 설립을 주장하며, 후세인씨의 특별보고관 임기를 3년 더 연장하자고 촉구했다.

-제3차개입금지등 또 지적
덴 커니아(ICFTU)씨는 후세인 보고서중에서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제3차개입금지 등 노동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94년 6월과 작년 5월 그리고 후세인씨의 권고는 지켜져야 하며, 노동법(특히 노동쟁의조정법)으로 구속된 모든 노동자들의 무조건적인 석방을 한국정부에 요구했다.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행동계획 발표
헤랄드 클리드(오스트리아 민간대표)씨는 미성년자의 구금문제를 언급하면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이 최근 제시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행동계획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방안 따르면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며, 이는 인권센터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유니세프, 유네스코 등과 같이 협력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AIDS문제등 재소자의 의료보호 시급
수잔 탐버레이크(HIV/AIDS에 대한 유엔합동프로그램)씨는 HIV/AIDS가 감옥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섹스나 마약복용으로 가능하며 교도소

관리인들은 대책에 있어 너무나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HIV/AIDS 테스트는 재소자들의 사생활과 안전을 침해하고 있으며, 다른 재소자들을 위한 보호대책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 재소자들은 기본적인 의료보호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스리랑카, 콜롬보등 고문 및 실종 심각
마누엘 델고(코스타리카 대표)씨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 정서는 맨처음 코스타리카에서 제기한 것이며, 교도소의 처우개선을 포함한 것이라고 말했다.
메리프렌 발비(평화와 자유를 위한 국제여성연맹)씨는 스리랑카에서 95년 일어난 36사건의 실종문제를 다룬 실종자에 관한 실무그룹의 보고서를 언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긴급조치와 반테러법으로 실종된 사람은 모두 35명이며, 지난 해 4-9월 사이에 일어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밀계 청년들이었다. 또한 콜롬보 지역에서 15구의 시체가 발견되었는데 실종자들이 죽음을 당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보고했다.

□ 의제 9 '인권위원회 활동방식등 인권증진방안'

-98년은 비엔나선언과 행동프로그램의 평가 기간
동터르 독립운동가 호세 아얄라 라소씨의 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인권위원회는 비엔나선언과 행동프로그램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비엔나선언과 행동의 프로그램의 후속작업이 논의되어야 하며, 이 논의를 회의 초반에 진행하면 국가와 지역적 차원에서 이뤄진 인권관련 사업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98년은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이며 비엔나선언과 행동프로그램의 평가를 위한 기간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유엔관련조직, NGO, IGO(정부간 기구) 또한 각 나라 정부는 이 평가사업을 반드시 해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인권을 증진하는 방법중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유엔인권위 아·태지역사무소 설립 제안
일본 인권단체 이마다(IMADA)대표는 "일본 오사카에 유엔인권위원회의 아·태지역사무소를 설립하자"고 제의했다. 이 제의는 95년 7월26-28일 오사카에서 유엔전문가, NGO, 대학간의 회의결과로 처음에는 소지역기구를 만들고 그 뒤 지역지구로 발전한다는 내용의 기획안을 갖고 있다. 이 제의에 대해 오사카시도 환영하며 기금마련에 앞장서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는 유엔은 아·태지역 인권증진을 위해 더 많은 기술적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22일 '소수자 보호와 차별방지를 위한 소위원회'의 선거에서 위원으로 아시아인이 2명 선출되었다. 남한에서 박상영(KOICA 회장)씨가 1차 투표에서, 2·3차 투표를 통해 일본의 리보다 하타노(Gakushuin 대학 국제법 교수)씨가 당선되었다.

【제네바=장혜선】

<이달의 주제-장애인>

당사국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이동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조성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위있는 생활을 누려야 함을 인정한다.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23조1항-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회사 망해도 노조 인정 못한다”

한국합성노조 고공농성, 상경투쟁 전개

구미 한국합성(대표이사 박동식)의 노사문제가 계속 대결국면으로 치달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합성노조(위원장 황영호)는 지난 11일부터 단체협상의 대상으로 노조를 인정할 것과 24억6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취하한 것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또한 김진권 부위원장 등 조합원 35명이 22일부터 서울 상경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 조합원 8백명중 5백여명은 철야농성을 진행중이고 분신조 30여명은 30여 미터높이의 사이로(2기) 탱크에 상황실을 만들어 '최후의 1인까지 결사항전'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회사측은 노조위원장등 노조간부 41명의 사퇴를 선행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96년 임·단협 교섭을 요구하는 노조에게 단체협약 갱신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것과 96년과 97년의 임금협약은 무교섭으로 체결할 것 등을 요구하며 노조와의 대화를 회피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황명진(민주노총 조직2부장)씨는 "그동안 회사가 망하더라도 노조와 대화할 수 없었다면 회장이 대화의 장에 나오기 시작했다"며 "한국합성노조가 내부 힘이 떨어지지 않고 현재와 같이 싸운다면 이번 투쟁은 승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상경투쟁을 벌이고 있는 김진권(노조 부위원장)씨는 "계속해서 공권력 투입 협박을 하고 있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사이로탱크에서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합성은 지난 91년 창립한 폴리에스텔 섬유회사로 이화섬유등 5개 계열사를 가지고 있으며 전체 노동자는 1천여명(2백명은 외국인 노동자)이고, 지난해에는 1백50억원의 흑자를 냈다. 회사는 회장 조카를

노조위원장으로 한 유령노조를 만들어 현장을 통제했으나, 노동자들은 94년 10월 철야농성 투쟁으로 민주노조를 재창했다. 하지만 회사측은 노조를 계속 인정하지 않고, 95년 노조원 89%의 찬성으로 행한 파업에 대해 24억 6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또한 96년 3월5일자로 조합원과 대의원을 포함한 노조간부 40명을 징계처리했다.

노동계, '신노사관계' 구상에 근로기준 약화 우려
24일 발표된 김영삼 대통령의 '신노사관계 구상'이 OECD가입 및 ILO 이사국 진출과 국내 경영여건의 개선이라는 현실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몇몇 독소조항의 개정을 근로기준법의 개악과 맞바꾸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노동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말까지 꼭 납부를
지로용지를 분실하신 독자께서도 전국 어느 은행이든지 지로 창구에서 아래의 지로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로번호: 7618848

경찰, 운구행렬에 최루탄 난사

경원대 장현구씨 1백34일만에 장례

25일 성남에서 열린 고 장현구씨의 장례 도중 경찰이 유가족들과 영구차에 최루탄을 난사해 대는 반인륜적인 일이 발생했다.

이날 장례행렬은 경원대 교내 영결식을 마치고 노재에 나섰다가 성남중부경찰서 앞에서 이같은 봉변을 당했다.

성남중부경찰서는 장씨가 학교측의 고발로 구속돼 고문수사를 받았던 장소였다. 이에 장례행렬은 경찰서장에 대해 고인에 대한 사과와 조문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이를 거부하고 아무런 경고도 없이 다섯대의 패퍼포그를 동원하며 무차별 최루탄을 난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고인의 영정을 부수는 등 반인륜적인 대응을 보였으며, 10여명의 학생들이 부상을 당했다. 장현구씨의 시신은 이날 오후 늦게 마석 모란공원에 안장되었다.

한편, 경원대생들은 이날 장례를 마친데 이어, 26일 교육부장관과의 면담을 시도, 학내문제의 해결을 요청할 예정이다. 경원대 총학생회는 지난 24일 교육부 방문을 통해 △장관과의 면담 △교육부내 진상조사단 구성 △특별감사 파견을 요청했으며, 현재 최원영 재단이 사장이 발행인으로 있는 <객석>과 <시사저널>의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구속자 늘어날 듯 청년연대 경찰에 항의

24일 애국동맹사건으로 구속된 김성훈(31)씨는 25일 가족면회 결과, 경찰로부터 '92년 중부지역담재건위 이념으로 된 유인물을 뿌렸다'는 자백을 강요당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씨는 목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같은 사건 혐의로 구속된 오상훈(31, 직장인)씨와 신호식(미확인)씨의 상황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13명의 회원이 연행된 한국노동청년연대(의장 이기주, 청년연대)는 즉각적으로 성명을 발표하는데 이어 24일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전면 대응을 결의했다. 25일 서울시장 옥인동대공분실을 찾아 항의방문을 했던 청년연대 회원 15명이 모두 중로경찰서로 연행이 됐다. 청년연대의 부산지부장 하종규(29)씨가 수배중인 것으로 알려져 구속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남 제주지부(의장 송대수)에서 구속된 원전희(27, 전남 간사)씨는 25일 3시경 석방이 됐다. 이에 대해 김대환 전남 제주지부 사무국장은 "무작정 구속부터 시키는 문민정부 경찰이 세상을 거꾸로 돌리려 한다"며 분노를 나타냈다.

철도청 책임 전면부인 경인선지연 1차 공판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창국등, 참여연대)가 국가를 상대로 낸 경인선의 잦은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재판에서 철도청은 책임을 모두 부인하고 재판부에 소를 각하해 줄 것을 요구했다.

25일 오전11시 민사제16부(황인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철도청 이동희씨는 답변서를 제출하며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철도청은 지난 2월25일 전철지연원인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지연책임 중

68%가 철도청 책임이라는 발표한 사실이 있으나 이날은 전면 부인한 것이다. 이 소송은 참여연대의 주선으로 박영관(24, 기획사)씨등 6명이 지난 3월28일 경인선의 상습적인 지연운행과 잦은 사고에 따른 손

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소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가 공서비스의 쟁포에 대한 제도개혁을 위하여 추가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타고 싶은 1호선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행사과 동정○

- 동두천 미2사단 산불참사에 대한 미군당국 규탄집회
 - 4월26일(금) 낮12시 · 용산 미군사령부 1번문 앞
 - 주최: 주한미군법외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744-1211)
-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사면 및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 제정 촉구
 - 일시: 4월26일(금) 오후2시
 - 장소: 민주노동 5층 대회의실(765-2010)
 - 주최: 외국인 노동자 대책협의회(744-9063)
- 5차 시민포럼 : 아시아 수출자유지역의 자본 성격과 국제적 대응 전략
 - 4월26일(금) 오후7시 · 참여연대 제1사무실
 - 주최: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796-8364)
- 고 김세진-이재호 열사 10주기 추모식
 - 4월28일(일) 오전 10시30분 · 서울대 학생회관 라운지
 - 주최: 고 김세진-이재호 열사 추모사업위원회(871-2567)
-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5주년 기념행사
 - 4월30일(화) 오후2시-5시 · 기독교연합회관 중강당
 - 주최: 한국성폭력상담소(573-1888)
- '96 노동절 기념 공개토론회 : 여성노동시장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4월30일(화) 오후1시
 - 장소: 이화여대 인문대 교수연구관 111호
 - 주최: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269-5763~5)
- 세계 주거회의 제2차 실무 워크숍
 - 일시: 4월30일(화) 오후4시-5월1일 오전10시
 - 장소: 숭실대학교 기독교사회봉사관 101호(820-0801)
 - 주최: 세계주거회의 한국민간위원회(3673-3031)
 - 참가회비: 1인당 1만원(자료집 및 숙박비용)
- 교통권 신장을 위한 한일 국제 심포지움
 - 4월30일(화) 오후2시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최: 녹색교통운동(720-7879)/(일본)교통권학회
- 제106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
 - 5월1일(수) 오후1시50분 · 보라매공원
 - 주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765-2010)
- 한국여성단체연합, 새 소식지 창간
 - 어연이 그동안 발행했던 <민주여성>이 보다 새로운 내용과 형식으로 <한국여성단체연합 소식>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 소식지는 2개월마다 발행될 예정이고 정기구독 신청을 받고 있다. 문의전화: 273-9535
- 민족문제 '올력', <원숭이 O구멍은 빨개> 공연
 - 올력의 이번 작품은 환경문제의 본질적인 문제, 그중에서 위대 문제를 다룬 것으로 핵이 가지고 있는 촉발적인 위험성을 경고하고, 우리가 누리는 빛에너지가 가지는 근원적인 문제를 파헤친 본격적인 환경연극이다. 공연 기간은 4월20일-5월5일. 문의: 469-0646

<이달의 주제-장애인>
당사국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아동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보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위있는 생활을 누려야 함을 인정한다.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23조1항-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을통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일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피의자·가족 요청없이도 출동가능케

당직변호사제 3주년, 국민홍보 확대 필요

5월1일로 시행 3주년을 맞은 당직변호사제도가 국민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시행 초기의 활력을 잃고 있다. 당직변호사제도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기중인 변호사가 당직상황실의 연락에 따라 빠른 시간안에 피의자를 검진함으로써, 수사단계의 피의자에게 부당한 구금과 구타 등 가혹행위가 일어난다는 것을 막고, 형사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이후 접수건수가 급격히 하락하는 등 초기보다 저조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직변호사제 운영위원들은 가장 직접적 원인을 홍보부족과 그에 따른 국민들의 인식부족으로 파악하고 다각적인 행사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월29일을 3주년 기념당직일로 정하고 60여

명의 당직변호사가 서울의 모든 경찰서에서 하루종일 상주하며, 검결과 상담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피의자나 가족의 직접적인 요청이 없어도 서울지방변호사회 판단에 따라 당직변호사를 출동할 수 있게 하는 당직인지제도의 활성화가 모색되고 있다. 또한, 당직변호사수의 확대, 경찰서내 변호인접견실의 설치요구, 당직변호사제의 전국화 등을 개선대책으로 논의, 추진하고 있다.

박찬운(당직변호사제 운영위원)변호사는 "이 제도는 수사과정에서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막는 것 뿐만 아니라, 나아가 수사초기단계의 변호인의 조력을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 제도화하는 것, 즉 형사절차의 개혁이라는 목표아래 시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직 대다수 국민들이 이 제도의 시행사실과 유용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제대로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언론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했다.

예견된 산불사고 미군 공개사과 촉구

1백50일동안 파업을 전개해오던 건설증권(회장 손홍민)노동조합이 마취내 회사측과 최종 합의안을 성사시켰다. 노조측은 24일 회사측과 △노조집행부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 △본부 내에 노조사무실 제공 △회사측의 임금인상안 수용 등의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은 회사측의 뜻이 대체로 반영된 것이지만, 국내 증권사 중 최장의 파업을 전개하면서 전체 직원의 70%가 넘는 조합원들이 전례없는 단결과 자신감을 획득했다는 점등은 노조측이 얻은 성과로 평가된다. 건설증권은 국내체일의 소고소·고발을 하는가 하면, 노동부의 중재안마저 거부하는 등 강경대응으로 일관해 27억의 흑자를 낼만큼 건설한 기업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임금수준이 동종업계평균의 68% 수준이며, 27억의 순이익증액과 최종 합의안을 성사시켰다. 노조측은 24일 회사측과 △노조집행부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 △본부 내에 노조사무실 제공 △회사측의 임금인상안 수용 등의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은 회사측의 뜻이 대체로 반영된 것이지만, 국내 증권사 중 최장의 파업을 전개하면서 전체 직원의 70%가 넘는 조합원들이 전례없는 단결과 자신감을 획득했다는 점등은 노조측이 얻은 성과로 평가된다. 건설증권은 국내체일의 소고소·고발을 하는가 하면, 노동부의 중재안마저 거부하는 등 강경대응으로 일관해 27억의 흑자를 낼만큼 건설한 기업으로 평가받아

했다. 그러나, 임금수준이 동종업계평균의 68% 수준이며, 27억의 순이익증액과 최종 합의안을 성사시켰다. 노조측은 24일 회사측과 △노조집행부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 △본부 내에 노조사무실 제공 △회사측의 임금인상안 수용 등의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은 회사측의 뜻이 대체로 반영된 것이지만, 국내 증권사 중 최장의 파업을 전개하면서 전체 직원의 70%가 넘는 조합원들이 전례없는 단결과 자신감을 획득했다는 점등은 노조측이 얻은 성과로 평가된다. 건설증권은 국내체일의 소고소·고발을 하는가 하면, 노동부의 중재안마저 거부하는 등 강경대응으로 일관해 27억의 흑자를 낼만큼 건설한 기업으로 평가받아

지난 23일 동두천 미군2사단 훈련장 산불사고에 대해 동두천민주시민회(의장 최송권)등이 미군당국의 책

임추장과 동시에 한미행정 협정 개정 투쟁 및 공여지 반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 사건과 관련해 26일 「주한미군법외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진우섭)는 용산 미군사령부 1번문 앞에서 2시간 동안 집회를 열었다.

진우섭 대표는 "미군측이 사용권한이 있는 공여지에서 미군이 일으킨 산불을 끄다가 한국의 젊은이 7명이 사망했다. 그동안 책임을 회피하던 미군측은 그 책임을 인정한다며 위로금 60만원을 제시했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또한 정대표는 "동두천에서 미군들이 낸 산불은 이번뿐이 아니며, 이 사건은 예견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용한(명백 민주실천시민모임)의장은 집회 전에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들과 실권침해를 막는 것 뿐만 아니라, 나아가 수사초기단계의 변호인의 조력을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 제도화하는 것, 즉 형사절차의 개혁이라는 목표아래 시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직 대다수 국민들이 이 제도의 시행사실과 유용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제대로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언론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했다.

현재 동두천시는 미군기지를 포함해 공여지가 75%에 이르며, 그 사용의 권한은 미군측에 있고 관리는 한국정부가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번 산불사고와 관련해 동두천민주시민회는 오늘 오후3시 미군2사단 정문앞에서 △미군의 공개사과 △책임자 처벌 △사망한 이들 대한 배상 △공익공무원에 대한 법적 지위 보장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쫓겨다니며 일하는 가난한 이방인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서명작업 돌입

외국인노동자가 국내에 유입된지 5년이 넘어진 지금, '외국인노동자보호법'(가칭) 제정을 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상임대표 김해성, 성남의국인노동자의 집 소장, 대책협의회)는 26일 오후 2시 민주노동당 사무실에서 보호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설명회와 함께 선포식을 가졌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표해 자간다드 올리(Jaganhnath Oli, 32·네팔)씨는 '한국정부가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몇달치 월급을 못받고도 사업주가 신고할까 두려워 울며 겨자먹기로 떼이는 경우가 많고, 산재적용도 불법체류라는 약점을 이용해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며 보호법 제정을 호소했다.

대책위는 "총선인 2월 15일 노동부는 '기존의 산업기술연수생 제도를 철폐하고, 고용허가제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얼마전 발표된 '신 노사관계 구상'에서 조차 한마디 언급이 없었다"며 기만술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대책위는 더 이상 정부의 답변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보호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달 28일 범국민서명운동 발대식을 갖고 5월30일까지 전국에서 거리서명작업등 캠페인에 들어간다. 6월2일 서울에서 캠페인과 거리서명운동으로 이를 마무리하고, 3일 보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및 7일에는 국회에 입법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작년 10월부터 보호법 시안과 함께 조문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책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8월28일부터 9월1일까지 '국제화시대의 이주노동자문제'라는 주제로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지역 외국인노동자운동단체의 실무자모임을 통해 국제연대를 꾀하고, 97년 유엔이 정한 '이주노동자의 해'를 맞아 한국 내 불합리한 외국인노동자문제를 국제적 적극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는 15만명에 이르며, 이중 8·9만 명의 외국인들이 불법체류 상태라고 대책위는 추정했다.

청년연대 10명 구속 항의방문자 집유1년

24일 국가보안법으로 무더기 연행된 한국노동청년연대(의장 이기주, 청년연대) 간부 13명에 대해 이기주(31)씨등 10명이 구속, 수감되었다. 또한 부산지부 이익진(29, 회원)씨등 3명은 증거불충분으로 영장이 기각되어 26일 새벽 1시경 석방되었다.

또한 25일 간부들의 구속에 항의, 옥인동 대공분실을 방문한 박상준(29)씨등 회원 19명은 즉시에 넘겨져 벌금 1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이선주(26)씨는 구류 3일을 받았다.

그러나 항의하러간 이들 중 김승겸(28, 우리청년회 회원)씨등 3명은 더 조사할 것이 있다는 이유로 옥인동 대공분실로 이송되었다.

재구속자 명단 : 김승겸, 김윤희(26·청년연대 상근간사) 정희진(26·학원강사)

○ 인권간행물 ○

- 「통신」, 95호-전국연합(747-4364)
 - 주요내용:강성구 MBC사장과 내연의 연인 전화내용 발췌/보혐료 동결, 통합의보 쟁취 상경투쟁/정부의 '중소기업살리기' 제대로 가고 있는가? 등. 52쪽.
- 「청년통신」, 제9호-한청체(364-7782)
 - 주요내용:한청회 제5기 의장단에게 듣는다/또다시 부정되는 정권의 길로 가려는가 등. 28쪽.
- 「후원회 소식」, 통권54호-양심수후원회(763-2606)
 - 주요내용:경찰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이대로 좋은가/양심수 가족-현정희씨의 어머니 이삼덕씨 등. 23쪽
- 「사월혁명회보」, 제43호-사월혁명연구소(888-3682)
 - 주요내용:4월혁명 36주년의 의미와 과제 등. 31쪽
- 「산재노동자소식」, 96년 1호-산재노협(868-2379)
 - 주요내용:중대재해와 공상처리가 정부측의 산재발생을 0.99% 허구성 입증/산재상식/현중, 도장근로자 유용용, 채고농도 폭로등 산재동향/직업병 발생과정과 현재의 건강상태 등. 50쪽.
- 「함께 가는 여성」, 통권104-여성민우회(269-5763)
 - 주요내용:청소년의 성중독과 성폭력/김영삼 정부 3년 여성정책 평가 등. 20쪽.
- 「두레방」, 제16호-기장여성신도회(0351-841-2609)
 - 주요내용:충무로 지하철역에서 폭행당한 조경국씨의 투쟁기 '한국인 특시의 승리' 등. 23쪽
- 「실터」, 제19호-대우여성의 전화(053-475-8082)
 - 주요내용:95년 상담통계/한국 여성정책 등. 15쪽
- 「나눔의집·청소년쉼터」, 4월-봉천동 나눔의 집/청소년쉼터(871-1596)
 - 주요내용:매 맞는 아이들, 그들의 미래는/나눔의 집 소식 등. 15쪽
- 「한국여성단체연합 소식」, 창간호-여연(273-9535)
 - 주요내용: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무엇을 담아야 하나/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전담기구 설치현황과 문제점/제1차 일본군 '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등. 20쪽.
- 「정신대문제대책활동소식」, 제9호-정대협(365-4016)
 - 주요내용:제4차 아시아연대회의 소식/제52차 유엔인권위 소식/제4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 등. 11쪽
- 자료집:「장애인 특례입학 실시대상 대학교 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장애학생의 대학생활에 대한 설문조사 보고서」-장애인권문제연구소(521-5364)
 - 주요내용:실태조사의 배경과 목적/학교별 조사결과/대학내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문제점과 대책 등. 251쪽.
- 자료집:「금속연맹 115개 사업장 기업주 초청 96년 임단협 노사간담회」-금속연맹(051-817-4977)
 - 주요내용:금속연맹 96임단협 공동요구서 제안/산재추방특별위원회 노사공동 구성 제안/산재추방특별위원회 노사공동 구성 제안/115개 사업주와 노조간의 공동교섭 제안 등. 35쪽.
- 자료집:「PCS 사업자선정 등 정보통신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정보통신 주권수호와 재벌독점방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750-5411)
 - 주요내용:통신시장 개방과 통신사업 구조조정정책에 대한 검토/개인휴대통신 사업자선정 문제점과 대책/일본의 민영화, 분리·분할문제에 대한 대응-일본-컨텐츠의 보고 등. 73쪽.

＜이달의 주제-주제＞
당시국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아동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보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풀워있는 생활을 누려야 함을 인정한다.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23조1항-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97년 선주민문제 공식의제로 유엔인권위 폐막, 한국인권상황 개선 촉구

지난 3월18일 개막했던 제52차 유엔인권위가 84개의 결의안(resolution) 및 14개의 결정(decision)을 채택하고, 차기 인권위에서는 논의될 임시의제 19항을 결의했다. 이번에 채택된 인권위의 결의 중에는 선주민 문제(Indigenous issues)가 들어 있는 것이 눈길을 끈다. 선주민 문제는 각국의 원주민들에게 자치 또는 자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문제로써 매년 인권위에서 논의되기는 했지만 공식의제로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52차 인권위에서는 정한 가운데, 26일 폐막했다. 이번에 채택된 인권위의 결의 중에는 선주민 문제(Indigenous issues)가 들어 있는 것이 눈길을 끈다. 선주민 문제는 각국의 원주민들에게 자치 또는 자결권을

등을 한국인권상황의 개선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개막 초기부터 관심을 끌었던 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는 결국 중국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중국은 중국인권결의안이 투표에 부쳐지기 앞서 불처리안(no action motion)을 제기했고, 이것이 찬성 27, 반대 20, 기권 6으로 통과되면서 중국인권결의안은 무산되었다. 이 투표에서 한국은 기권을 했다.

· 불처리·종교적 불관용·국가비상사태 등과 관련된 시민·정치적 권리 △발진권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등 기본적인 인권문제들과, △소수민족 △이주노동자 △인종주의 등이 주제문의제로 채택되었다.

또한 유엔인권위 기구 및 운영과 관련, △조약감시기구의 효과적 운영 △조약기구 △국제인권조약 △인권위 합리화 등이 논의되며, 팔레스타인 문제와 키프리스 문제 등 국가별 인권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안기부, 법원허가 무시 꽃다지 이은진씨 출국금지

안기부는 여전히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가? 경찰, 검사, 판사가 모두 허가한 출국요청을 안기부가 막고 있다. 지난 2월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은진(31, 꽃다지 대표)씨는 30일, 5월1일 양일간 진행되는 일본 전노협 초청 공연과 관련, 지난 13일 의무부에 여권을 신청했다. 이씨는 출국을 위해 판사(김동윤)와 검찰의 허가 서류를 제출했으며, 경찰청의 허가도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안기부의 개입으로 여권이 나오지 않아 결국 출국을 할 수 없게 됐다. 여권발급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경찰청 정보과 담당행사는 "안기부에서 제동을 걸고 있다"고 말했으나, 곧바로 안기부에 문의하자 안기부에선 "경찰청에서 서류를 넣어 주지 않았다"며 말했다고 이씨는 전했다.

이씨는 "일본 국회의원이 여권이 나오는 즉시 비자를 발급해 주기 위해 지난 금요일 하루종일 기다렸다"며, "국제적 망신이기도 하다"고 분노를 터뜨렸다. 이에 항의해, 이씨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역사바로세우기에 나섰다

이밖에도 '인권위의 활동방식에 관한 결의안' 채택을 둘러싸고 정부와 NGO(민간단체)간에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스리랑카 등 주요 인권침해국들은 자국의 인권상황이 국제무대에서 지적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인권위의 모든 결정을 만장일치로 하자고 주장한 반면, 각국의 NGO들은 이러한 주장이 NGO를 논의에서 배제시키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함에 따라, 내년

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97년 3월10일부터 4월18일까지 개최되는 제53차 인권위는 선주민문제를 비롯, 총 19개 의제를 다룬다. △자결권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여성폭력·고문 및 구금·실종·표현의 자유·사법부 독립·정의실현

교내 추모식 원천봉쇄

김세진·이재호씨 10주기 역사바로세우기에 나섰다. 김영삼정부가 학생들의 교내 추모회를 봉쇄하고 출입자들의 신분증과 소지품을 일일이 검사하는 등 군사정부식 통제를 답습하고 있다.

27일 오후 2시 서울대에서는 분신 10주기를 맞은 김세진·이재호씨의 추모대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학교 주변 봉쇄와 검문으로 많은 학생들이 들어오지 못해, 오후 5시가 되어서야 겨우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날 경찰의 원천봉쇄는 서울대 총장(신우 중호)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2대 직선총장으로 선출된 신우씨는 과거 평화의 댐 건설을 이론적으로 옹호했던 유일한 교수로, 선출시기부터 끊임없이 학내의 비판을 받아온 인물이다.

이적성여부 시효만료 노운협의장등 3명 집유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노
운협) 의장 김영근씨등 3명
이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서울지법형사 합의 21부
(부장판사 민형기)는 27일
오전10시 열린 공판에서 김
씨와 문성현씨에게 징역2년
에 집행유예 3년을, 박찬식
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문제삼
은 노운협의 이적단체 구
성·가입시기에 대해 "노운
협은 88년에 만들어졌으며
90년 대의원대회는 단지 이
단체를 확대개편한 것에 불
과하므로, 88년의 노운협 구
성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
으로 면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영근씨등은 현재
집유기간이어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지만, 이미 이 사
건으로 6개월간 복역했으며
대원범의 판례상 집유기간
이라도 사건에 따라 다시
집유를 선고한 선례가 있어
이에 따른다"고 말했다.

'기필코 정든 일터로' 27일 전국해고노동자대회

김영삼대통령의 '신노사관
계'구상과 더불어 노동법 개
정 요구가 확산되는 가운데,
해고노동자들의 복직문제가
주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신구상'이 발표되
자마자 민주노총과 공공부
문노동조합대표자회의 등이
노동법 개정의 선행조치로
해고자복직을 촉구하고 나
선데 이어, 민주노총 산하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전해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아래 지로로 납부를

지로번호: 7618848

주/간/인/권/호/름

(96년4월22일부터 4월28일까지)

- <22일(월)>
이수성국무총리, 국정과담회에서 장애인시설 의무화 밝
혀/민고협, 총장직선제 고수를 위한 서명운동 전개키로
- <23일(화)>
「정보통신주권수호와 재벌독점방지를 위한 개인휴대통
신 비국민대책위」 정보통신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에 대한 공개토론회 개최/동두천 미군2사단 훈련장 산
불사고로 한국인 산림청 계장과 공익요원 6명 사망/국
라카이, 리노 오미에도 군참모총장이 민간대통령의 전역
명령은 거부해 쿠데타 위기
- <24일(수)>
한국노동청년연대 간부 13명과 중부지역당 사건 관련자
3명 등 17명, 국보법으로 무더기 연행·구속/건설중권
노조, 파업 1백50일만에 합의/아암도노점상 고 이덕인
씨, 사망 1백49일만에 장례/김영삼대통령, 노동관계 개
혁방안 보고대회에서 노사관계 개혁위원회 설치 밝혀/
유엔, 마약과 돈세탁에 대처하기 위한 무기명계좌 금지
를 촉구하는 결의안 통과
- <25일(목)>
경원대 장현구씨 장례행렬에 경찰 최루탄 난사/철도청,
참여연대가 제기한 경인선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공
판서 책임부인, 재판부에 소를 각하해 줄 것을 요청
- <26일(금)>
외노협,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
운동 선포식/환경단체, 체르노빌원전 사고 10주년 맞아
해발전소 건립반대등 주장하며 거리행진/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얻어맞은 대학생 9명이 낸 손해소송에서 국가배
상 판결/매춘여성의 인권회복을 위한 민간단체 한소리
회등, '매춘여성의 인권문제와 사회복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라피크 알 하리리 레바논 총리, 이스라엘과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혀
- <27일(토)>
범청학련 남측본부 지역별로 집회 열고, 북한·미국 평
화협정 체결과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지 요구하는 결의
문 채택/주한미군사령부, 한국의 재판권행사에 관한 항
의서한과 함께 조사증인 미군에 대한 기소유보를 법무
부에 요구/노운협의장 김영근씨등 3명, 집행유예 선고받
아 석방/아르헨티나 카톨릭 교회, 76-83년사이 군부독재
정권 협력 한데 대해 국민들에 사과하는 성명발표
- <해설>=====
그동안 국내 노동운동의 축색이 되어왔던 제3자개입
금지과 복수노조금지 조항 등 세계적인 노동약법이
개정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한 주간이었다.
87-9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김영삼대통령이 즐기차
계약으로 내놓았던 노동약법이 10여년 만에 개정될
조짐이다. 그러나 민주노총등 노동운동단체들은 김경
권의 이번 신노사개혁 구상이 한국의 OECD가입을
위해 어쩔 수 없는 필요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개혁이랄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이번 개정
에서 기업주들이 그동안 요구해 온 근로자파견제와 유
급휴가 무급화 등이 진행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만약 또다시 정부가 제3자개입금지라는 허울좋은 가
면을 쓰고 노동자를 기만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국내
외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투)는 27일 종로공원에서
제10차 전국해고노동자 결
의대회를 갖고, 해고자 복
직과 노동약법 철폐를 강력
히 요구했다.
전해투는 "문민정부 들어
서만도 한국통신, 서울지하
철, 부산지하철 등 약 3백
여 명의 해고자가 발생했
고, 현재까지 복직 희망자
는 1천여 명이 넘는다"며
"김대통령이 노동약법을 개
정하겠다는 뜻을 비춘 이상
군사정권시절의 노동약법에
의해 발생한 해고노동자들
은 당연히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해투는 29일 노동
부를 방문, 노동부의 실질
적 조치를 계삼 촉구했다.
또한, 30일에는 법원의 복
직판결에도 불구하고 해고
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있는
금촌의료원에서 복직촉구집
회를 가지며, 5월1일 노동
절에는 LG해고노동자 문제
와 관련, 여의도 본사 앞
에서 해고노동자 복직을 촉구
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다른 공안사건이다" 청년연대 기자회견

한국노동청년연대(의장 이
기주, 청년연대)는 이기주
의장을 포함한 회원 13명의
구속사건에 대해 29일 오후
3시 종로교회에서 기자회견
을 갖고 "이번 사건은 또다
른 공안사건이며 총선 이후
민중운동 탄압에 대한 시발
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는 노동자투쟁을 무력화하
려는 술책이며, 노동청년운
동의 활동방향과 발전에 대
한 제동을 건 것이라고 설
명했다.

인권하루소식

96년 5월

(제633호 - 제654호)

오늘은 106주년
노동절입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신인력정책, 여성노동자 주변화 우려 여성노동시장정책 공개토론회 개최

106주년 노동절 기념행사로 한국여성민우회(공동대표 정강자)등 여성단체들은 '여성노동시장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4월30일 개최했다. 정강자대표는 "그동안 여성노동자들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정부의 산업·인력정책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고용안정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우리를 나타내며 "이 자리를 통해 노동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한 연구와 정책대안이 제시되기

를 바란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유연성 시대'의 한국의 여성노동시장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조순경(이화여대 여성학과)교수는 "현재 정부의 신인력정책은 한 노동자에게 많은 능력을 요구하는 기능적 유연성과 기업이 인력을 필요할 때 사용하고 비필 수 있는 수량적 유연성으로 나눌 수 있다"며 "이것은 특히 여성노동자들의 주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악법이며 정확한 실태파악

없이 일본의 법제도와 정책을 그대로 모방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김태홍(한국여성개발원 책임연구원)씨등 토론자들은 신인력정책이 서방 선진국에서는 문제를 많이 발생시킬 뿐 아니라 효과가 정확치 않아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처럼 기업주들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의 삶을 저하시키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토론자들은 잘못된 정책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여성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의 노동력이 주변화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106주년 세계노동절 각계 노동악법 개정 촉구 성명 발표

47개 노동선교단체 산재보험확대 촉구

총회노동상담소·영등포산업선교회 47개 단체로 이뤄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산하 노동선교단체」는 29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소의 근로계층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단체들은 정부측에 △5인 이하 사업장으로 산재보험 확대 △장애인의 취업과 사회활동 확대 △외국인노동자에게 동등한 법적응 등을 촉구했다.

전국연합 "개별적 노사관계 개악안돼"

전국연합은 최근 김영삼대통령이 발표한 '신노사관계 구상'에 기대를 표하며, 올해안에 노동법 개정이 마무리되기를 요구했다. 또한 전국연합은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복수노조금지등 악법 조항의 무조건 철폐와 함께 연월차 유급화 폐지등 개별적 노사관계 개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AI한국지부 "국제조약에 부합되길"

앤네스티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는 노동절을 즈음해 성명을 내고 현재 진행중인 노동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환영을 표시하며 "이번 개정이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한 ILO조약등 각종 국제조약에 완전히 부합하기를" 희망했다.

을 촉구하는 일본인 서명용지를 정부합동민원실장에게 전달했다. 당초 김영삼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면담은 작년 11월29일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된 범민련 남측본부 관계자들의 석방을 위해 일본후원회(회장 전영부, 일본참의원)측이 4백91개 단체와 1백94명으로부터 받은 서명용지를 한국 정부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범민련 남측본부는 강희남목사등 구속자 석방을 위해 사무실에서 1백52인제 항의농성을 벌이고 있다.

경찰, 우상근씨 검거 전력 제3자개입 안돼 국보법 적용

천안경찰서와 대전 동부경찰서는 4월29일 밤10시30분경 진보정치연합 대전시지부 부위원장 우상근(36, 진문노련 망향휴게소 노조 사무국장)씨의 검거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경찰은 이미 지난 2월28일과 4월26일에 사복형사 40여명과 전투경찰 2개중대 등 공권력을 투입했다.

진보정치연합은 경찰이 우씨를 제3자개입으로 연행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국보법으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범민련 구속자 석방촉구 일본 491개 단체 서명

4월30일 조국통일범민족연맹 남측본부(의장 강희남, 범민련 남측본부)는 수감중인 범민련 관련자들의 석방

주요 공판 안내

- 5월1일(수) 강재우의 8인, 국보법, 오후2시, 합의22부, 425호, 속행
 - 5월3일(금) 전창일의 2인, 국보법, 오후2시, 합의 23부, 311호 속행 양규현, 제3자개입금지등, 오후2시, 4단독, 421호, 속행 권순미,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425호, 신진 민병래,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3부, 425호, 신진
- 이상 서울지법 형사국

<인권하루소식> 96년 4월분 총목차(614-632호)

호	월일	면	기사 제목
614	4/2	1	언론, '노수석씨 사인 심장이상'이라고 단정 보도했지만 노씨 구다 증언하는 목격자 다수 나타나
		2	2일부터 4일까지 한라중공업 노조 본사 앞 상경투쟁/밖무영씨사건 항의시위에 대해 홍콩 정부 공정재판 약속 답변/주간인권호름(3월25일부터 31일까지)
615	4/3	1	경찰, 노수석씨 죽음속에 방치, '노씨사인은 경찰폭력'이라고 대책위 결론
		2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 "긴정권은 노동쟁의 처리에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3	MBC 파업 20일째 맞아 사태해결 위한 대책위 결성/참여연대, 경인선 대책마련 촉구하며 서울역앞 낮12시에 항의시위/신문의 강제투입률 중앙일보 1위
616	4/4	1	"책임자 처벌·폭력진압방지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종묘공원 제2차 국민대회/장례에 임하는 유가족의 입장 "수석이는 과잉진압으로 인해 희생..."/현중 외주노동자 압착사
		2	제네바 소식②-개발권, 인권 증진과 함께 추진돼야, 국제비밀가위원회, '사회권조약에 선택의정서 추가'
617	4/6	1	현중, 연이어 노동자 사망, 노동자 하루 6명 사망, 3백30명 부상/안기부, 간첩만들기 실패 박총렬씨 보석결정으로 4일 출감/노수석씨 장례, "이대로 보낼 수 없다"는 학생대책위의 요구로 연기
		2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북한편
618	4/9	1	학원정상화 요구하며 경원대생 또다시 사망, 학생측 전면 수업거부 돌입예정/학자투단식 뒤 성신여대생 사망
		2	노수석씨 부친, 경찰청장 상해치사 혐의로 고소, 경찰관계자 처벌 요구/김은 돈'배격서약에 충신후보 3백20명 참여/정대협, 일본의 위안부 책임회피 비난하여 배상 촉구/전국연합, 교육정책 비판하는 성명발표/주간인권호름(4월1일부터 7일까지)
619	4/10	1	장애인 폭행 의경 버적이 군 복무중, 사건발생 석달만에 불구속 기소/노수석·권희정대책위 구성, 권희정씨 한중의 재로
		2	노수석씨 망원동에 묻혀, 학교측과 등록금문제 등 해결합의/세계주거회의의 3차 준비회의서 "NGO도 협상대상"이라고 밝혀/금속연맹, "죽지 않고 일하게 해달라" 산재추방주간 선포
620	4/12	1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국보법 폐지 권고/노수석씨 노제를 보고, 나머지 몫은 남겨진 이들에게...
		2	제야인사 노수석씨 사건으로 국무총리 면담자리에서 "경찰과실 인정 어렵다"는 답변/경찰, 피해자 진술 무시하고 불법노점상이라며 폭행/공대협, 장애인비하 발언한 총선 후보 공천철회 요구/유엔 인권위 한국정부대표 발언 내용
621	4/13	1	인권활동가·전문가들, 미국무부 인권보고서에 대해 정부 입장만 반영 객관성이 결여되 신뢰할 수 없다고 결론
		2	범민련 진창일씨 공판, 간첩혐의 적용 무리 지적/국가안보 위협하는 노래, 꽃다지 징역 1년6월 선고/참여연대, 노령수당지급 소송
622	4/16	1	노수석씨 죽음 단순 심장사 처리한 국과수 발표, 경찰에 면죄부 부여/현중 울들어 중대개혁 사망 7명, 안전시설 설치 시급
		2	<자료>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의 처분취소 대법원 판결문 요지/주간인권호름(4월8일부터 14일까지)
623	4/17	1	삼미특수강(주), 해고자 복직·손배소송 취하등 노조와 합의/성균관대 학생 황혜인씨, 온몸에 신너뿌려 분신 사망/황혜인씨 유서내용
		2	민주노총·장대협 자매결연 맺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2%수준 요구/장애인 고용 실태/클린턴방한 맞아 한미협협 개정 촉구하는 항의시위

<인권하루소식> 96년 4월분 총목차(614-632호)

호	월일	면	기사 제목
624	4/18	1	재벌의 통신시장 독점에 제동, 개인휴대통신 범국민대책위 결성/성균관대생 잇따른 죽음, 김좌진씨 사인불명확·황혜인씨 분신사망/AI, 양규현씨등 석방 촉구하고 노동법 개정 요구
		2	제네바 소식 ③-의사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미드 후세인씨 인터뷰, 의사 표현의 자유는 한국민주주의 발전을 가져올 것
625	4/19	1	광주지법, 태이사산한 고에순씨 보석 허가돼 재수감 위기 모면, 5월10일 손해배상소송 첫 재판/고에순씨 인터뷰-재판부 보석결정은 당연/인권협 경원대 사태해결 촉구방문, 경원대 상 전면수업거부·학교측 공권력 투입요구
		2	단병호씨 4월 혁명상 수상/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판검사 감시/5·18자료집 제작·판매/광주교도소 김동기씨등 장기수 2명 단식농성/성대 분신 황혜인씨 장례, 유가족 시신 화장 고집/TV 3사 뉴스 모니터 결과, 뉴스앵커 성차별 심각
626	4/20	1	"학우들과 함께 강의실에서 공부하고 싶다" 장애우연구회, 전국대학 편의시설 실태조사/4월혁명의 산증인 문헌영씨 별세, 21일 벽제에서 화장
		2	"김영삼정권 타도·미제축출" 여수 수산대생 19인 분신사망/고 오영권씨가 남긴 시/4월혁명 기념식에서 김종필대표 화환 짓밟혀/현중, 가스폭발로 1명 사망, 20일동안 4명 죽어/참여연대 장애인정책 재검토 촉구 성명서 발표/30대 여인 "김대통령 만나게 해달라"며 분신 중태
627	4/23	1	3년째 원진레이온 약속 불이행으로 자격증 취득한 54명만 재취위/조수원추모사업회 30일 창립, 발기인 모집
		2	노점상연합회, 경찰 보복성 구속에 항의/현정권다도 유서 남긴 오영권씨 장례/사민청 수배자 성세경씨 불심검문중 연행/함세환씨등 복송추진 위한 판문점회담 결렬/주간인권호름(4월15일부터 21일까지)
628	4/24	1	"국민 참여 속에 통신법 재검토 필요" PCS범국민대책위 공개토론회 개최/단체협상중 정성철씨 등 국보법으로 구속/불교인권상 후보추천 5월18일까지 접수
		2	96년 임단투 본격화, 7개 노조 파업과 대한보증보험 쟁의 신청/경원대 장현구·진철원씨 장례 치르기로/경원대문제 정부, 시민·사회단체 나서야
629	4/25	1	'과거행적'에 관한 세운 국보법, 하루새 전국 17명 연행·구속/이덕인씨 1백49일만에 묻혀 "분노의 염원이 불탄다"
		2	"금속연맹 노사간담회, 사업장 대표 불참 "제3자개입 허용등 언급없었다"/정대협, 일본 반 인권적 태도 규탄/사노맹관련 첫 공판, 검찰 4년전 활동으로 기소/문민정부에도 이런일이!" 범민련 송수신 절단
		3	제네바 소식 ④ -52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 어린이·청소년, 재소자, 고문·실종문제등 논의 활발
630	4/26	1	"회사는 망해도 노조는 인정 못한다", 한국합성노조 공공농성, 상경투쟁 전개/노동계, '신노사관계' 구상에 근로기준 약화 우려
		2	경원대 장현구씨 장례 치루는 중 경찰, 운구행렬에 최루탄 난사/청년연대, 24일 연행에 대해 항의/경인선지연 1차 공판에서 철도청 책임 전면부인
631	4/27	1	당지번호사제 3주년, 피의자 가족 요청없이도 추동가능케/건설증권 1백50인 파업 끝 타결, 조합원 단결력·자신감 성과로/예견된 산불사고' 미군 공개사과 촉구
		2	꽃겨다리며 일하는 가난한 이방인,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서명작업 돌입/청년연대 10명 구속, 항의방문자 집행유예 1년
632	4/30	1	유엔인권위 폐막, 97년 선주민문제 공식의제로/안기부 법원허가 무시하며 꽃다지 이은진씨 출국금지/김세진·이재호씨 10주기 교내 추모식 원천봉쇄
		2	노운협위원장등 3명 집행유예로 석방/27일 전국해고노동자대회/"또다른 공안사건이다" 청년연대 기자회견/주간인권호름(4월22일부터 28일까지)

<이달의 주제-노동권>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을 위태롭게 한다. -ILO 제26차(44년) 총회, 필라델피아 선언중에서-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노동법개악 노동자 총결기로 저지

106주년 노동절 기념 민주노총 집회 1만여명 참석

제106주년 노동절을 맞아 5월1일 보라매공원에서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 주최로 대대적인 노동절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노총 산하 노조에서 1만명이 넘는 노동자가 참석해 노동절

을 기념했다. 본대회에는 민교협 공동대표 김상근교수 등 각 사회·시민·정당 인사 20여명이 참석했다. 권영길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민주노총 출범이후 처음 맞는 노동절이어서 감

회가 새롭다"며 "신노사관계개혁의 선행조건은 과거 청산이며, 노동약법으로 구속된 노동자들의 석방과 수배해제, 사용자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취소"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노동조합 외해 기도 중단 △노동법

경원대, 4명 제적 등 학생 다시 중징계 학생들 대화요구 거부, 징계위 통보도 안해

지난달 22일 휴업령을 내린 경원대측은 4월30일 또 다시 학생 10명을 징계한다고 발표했다. 4명 제적, 5명 무기정학, 1명 유기정학으로, 지난 3월4일의 제적 2명, 무기정학 5명, 유기정학 1명보다 강경한 대응이었다.

이런 징계는 징계대상자들을 징계위에 출석시키지 않은 것은 물론, 징계사유마저 통보하지 않는 등 학교측이 최소한의 절차와 합리성마저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데 또한 문제가 있다.

현제 경원대생들은 징계에 이은 공권력의 투입을 우려하면서도, 끝까지 요구안 관철을 위해 힘쓸 것임을 밝히고 있다. <징계학생 명단과 내용> 제적-임정훈(토목 93) 황왕택(전기 90) 박대성(도시계획 94) 김태연(산업 92) 무기정학-김경훈(회계 91) 이시내(회계 91) 김숙경(관광경영 91) 고은숙(영문 92) 신은미(조경 92) 유기정학-신상철(무역(야 92)

것이다. 이번 징계는 징계대상자들을 징계위에 출석시키지 않은 것은 물론, 징계사유마저 통보하지 않는 등 학교측이 최소한의 절차와 합리성마저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데 또한 문제가 있다. 현제 경원대생들은 징계에 이은 공권력의 투입을 우려하면서도, 끝까지 요구안 관철을 위해 힘쓸 것임을 밝히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G그룹의 해고노동자는 64명이며 93년부터 복직을 요구하는 노동자는 24명이다. 이동렬(37, 89년 해고)씨는 "복직을 원하는 노동자들은 회사측의 요구에 따라 변화된 모습과 자숙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회사측은 아무런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이제 가만히만 있을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LG그룹 해고자 복직 촉구 본사 건물에 계란세례

LG그룹 해고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의장 성환기, 해복투)는 1일 오후4시 해고노동자 복직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96년에는 반드시 정든 일터와 동지들 곁으로 돌아가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여의도 LG그룹 본사 앞에서 개최된 이 집회에는 해고노동자 50여명과 한총련 소속 대학생 3백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나현균 전해투위원장과 성환기씨 등 4명의 대표가 회사측과 만나 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회사측이 불성실하게 교섭에 임하자, 참가자들은 LG그룹 본관 중앙현관에 계란 1백여개를 던지며 항의했다.

해복투는 지난 93년 3월부터 4년에 걸쳐 회사와 원만한 대화를 통해 해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무런 해결책도 얻지 못한 상황이다.

이동렬(37, 89년 해고)씨는 "복직을 원하는 노동자들은 회사측의 요구에 따라 변화된 모습과 자숙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회사측은 아무런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이제 가만히만 있을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해복투는 일주일에 한번씩 집회를 개최해 강력히 복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복투는 3일 오후1시 LG전선 안양공장 정문에서 산본주민 LG해고자 지원대책위 주최로 복직촉구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아래 지로로 납부를
지로번호: 7618848

<교통권 심포지엄 지상중계>

교통서비스는 의료서비스와 같은 현대인의 기본권

교통약자 중심으로 교통정책 변화되어야

4월30일 녹색교통운동과 일본 교통권학회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교통권신장을 위한 한·일 국제심포지엄'은 약자의 측면에서 바라본 교통권의 문제와 생활영역으로써의 보행권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각인시켜주는 기회였다.

임삼진 녹색교통운동 사무국장은 '자동차화와 시민교통권'의 주제발표를 통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교통행위는 보행"이라며, "보행권과 장애인교통권,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권등을 중심으로 교통정책과 문화가 변화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자가용 이용 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거리를 걷는데,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드는 것은 '교통권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자동차 이용자 역시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의 입장으로 바뀌는데, 제대로된 보행환경이 마련되면 보행자나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자전거이용자 등 모든 교통약자들이 편해진다는 이야기다.

보도통행사고 연평균 1천3백건 넘어

다양한 형태로 보행권은 침해당하고 있다. 경찰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보도통행중 교통사고는 90년들이 평균 1천3백66건이 발생했고, 부상자는 1천6백19명, 사망자는 57명으로 집계되었다. 94년에는 보도통행중 1천6백5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49명이 죽고, 1천7백53명이 부상당했다. 차도,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닌 보행자의 전용공간이어야할 보도상에서조차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사유지라는 소유권을 이유로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횡단보도의 육교 또는 지하도화이다. 이는 동일한 생활권을 인위적으로 분리시키는데 문제가 있다. 이같은 공간분리는 휠체어장애인에게는 '거대한 절벽'이자, 사회참여를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창살없는 감옥'이다. 또한 노약자나 짐을 든 사람, 유모차를 끌고 건너는 보행자들에게는 '험한 산'과 같다. 시청주변의 도로는 반인간적 보행환경의 전형인데, 이는 교통운영자들이 기본적으로 보행교통 자체를 무시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장애인과 보행자등 교통약자의 교통편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단적인 예라고 임사무국장은 지적했다. 유럽에서는 보도중심으로 되어 있어 육교나 지하도를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한다.

보행 역시 생활공간

보행체계의 미흡은 인구가 밀집한 곳일수록 심해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하철역은 그 지역의 중심적인 곳에 위치해 있으므로 인구가동이 빈번할 수 밖에 없는데, 보행환경은 최악의 취약지대라고 그는 말했다. 실제 지하철역 주변 이면도로 진출입 지점의 횡단보도 설치상황을 보면, 횡단보도가 하나도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이 32개역 가운데 8개역, 설치비율이 40% 미만인 곳이

13개역으로 전체의 2/3 가량이 위험지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보행은 단순히 '이동'이라는 목적을 가진 교통수단의 의미를 넘어 보행로를 통해 옥외공간에서 이뤄지는 생활전반에 활력과 새로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생활공간'의 차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행자사고율 선진국의 2-3배

94년5월 녹색교통운동과 미디어 리서치가 실시한 <보행자 교통환경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85.6%가 녹색신호가 짧다고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호운영은 교통운영자들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자동차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보행자 녹색점멸신호의 문제이다. 초등학교 주변 신호기를 제외한 모든 신호기가 정상인이 1/3을 건너면 점멸등으로 바뀌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행신호도 '1초당 1미터'라는 빠른 시간을 주어 안심하고 건널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은 주어지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 보행자 사고율이 선진국(미국 15%, 일본 25%)보다 2-3배 많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아베 세이지(교통권학회 이사)교수의 결론처럼 현대사회에 있어 교통은 사람의 사회적 생존을 위한 기본적 조건이 되었으며, 교통서비스는 의료서비스와 나란히 현대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신감할 수 있었다.

한국·베트남·중국의 여성운동가들 한자리에 -현장방문과 심포지엄 개최-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지은희, 여연)은 '급속한 아시아의 산업화 과정에서의 여성과제'라는 제목으로 중국, 베트남의 여성단체와 공동으로 심포지엄과 현장방문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5월1일부터 10일간 진행될 한국측의 현장방문 프로그램에는 구로공단과 마산수출자유지역 등의 방문이 예정되어 있고, 7-8일에는 '아시아 여성노동자의 현황과 과제'라는 워크샵 등이 열린다.

조영숙(여연 사회개발부장)씨는 이 행사의 목적에 대해 "중국·베트남·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제기된 여성문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해결대안을 찾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행사를 통해 3국간의 사회운동가, 학자, 전문가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프로그램을 마친 뒤, 6월25일부터 2주일간 중국에서 중국측의 프로그램이 열리며, 베트남의 프로그램은 9월로 예정되어 있다.

기사제보/구독신청
전화 715-9185 전송 715-9186

<동티모르민족저항평의회 칼로스 마이아씨 방한> 동티모르인의 투쟁에 한국민의 연대를! -세계 약소민족해방운동의 상징, 동티모르-

인도네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의 바다 중간에 위치한 면적 1만5천 평방 킬로미터의 작은 섬나라, 75년 인구 70만 명의 이 나라가 포스투갈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직후 다시 인도네시아의 무력침공을 받았고, 그후 20년 동안 최소 10만 이상이 학살당한 나라,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동티모르의 전사들은 국내외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중 지난 22일 한국을 방문한 칼로스 마이아(Carlos Maia)씨는 독립운동조직인 동티모르민족저항평의회(CNRM)의 국제연대책임자다. 그는 동티모르 여자를 아내로 둔 백인이다. 그는 각국을 돌아다니며 동티모르가 처한 현실을 설명하고 동티모르인의 독립투쟁을 지원해 줄 것을 호소하고 다닌다.

동티모르 남자들 정관수술까지

그가 전하는 동티모르의 현실은 이렇다. "인도네시아는 동티모르 남자들에게 정관수술을 통해 인구를 억제하려 합니다. 인도네시아 본토에서 10만명을 이주시켰습니다. 그렇잖아도 인도네시아의 폭압적인 식민지 정책으로 동티모르인들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태인데다 일자리마저 뺏기니 젊은이들이 집단적인 탈출을 하는 것이지요. 지난해 10개월 동안 1백명의 젊은이들이 외국 대사관에 망명 신청을 했지만, 이들 나라들이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관계 때문에 망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티모르 독립운동에 대한 지지는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유엔에서도 12개의 결의안이 이미 통과되었으니 동티모르 독립운동이 국제적인 지지를 획득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국제사회에서 점차 동티모르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포르투갈 신정부가 새로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아일랜드가 유럽연합의 의장국이 되면 훨씬 상황은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호주에서 오는 7월 국제회의를 열고, 아시아-말레이시아에서는 12월 아태지역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수하르트 대통령이 방문하는 곳마다 독재와 부정부패, 동티모르 점령과 관련해 인권단체들이 항의를 하니, 수하르트도 정권으로서도 곤혹이겠지요"

그가 말하는 동티모르 독립에 대한 희망은 인도네시아 민주화세력이 점차 세력을 얻어가고 있다는 데도 있다.

"거기때다가 인도네시아 내부의 민주화운동세력이 동티모르의 독립운동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남의 민족을 깃발으면서 민주주의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이지요. 또, 30년 독재로 인해 부정부패가 참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다다랐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민주화운동은 곧 동티모르의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0년 독재, 수하르트 정권 부정부패 극에 달해 그렇다면 동티모르의 독립은 낙관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아직 회의적이다.

"하지만, 아직도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무기로 각국 정부를 협박하고 있는 것이지요. 석유, 천연가스, 원목 등 무궁무진한 천연자원에다가 외국기업의 투자에 대해 매우 우호적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등돌릴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민의 지지 동티모르인에 큰 힘 될 것

그는 이어 한국국민들의 지지를 당부하는 말로 짧은 만남의 목적을 분명히 했다.

"한국 국민들도 일본의 식민주주의를 겪어서 식민지 국민의 고통을 잘 알고 있고, 또 오랜동안의 민주화투쟁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동티모르인들의 자유와 자결을 위한 투쟁에 한국 국민들이 지지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동티모르를 억압하는 인도네시아 정부를 지지하는 한국 정부의 방침을 돌리기 위해 노력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한국민들의 연대투쟁은 인권과 정의를 염원하는 동티모르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는 2박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4일 오전 출국했다. 그러나 다른 민족의 독립을 위해 20년을 헌신해온 그에게 한국의 인권단체들은 어느 것 하나 도움을 주겠다는 뚜렷한 답변을 주지 못했다.

<현장스케치-노동절 기념식 열린 보라매공원>

다양한 계층이 참석한 노동자의 축제

◎ 이번 노동절 기념식에서는 각 노조의 개성을 마음껏 살린 의상과 도구들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병원노련과 연노련등은 기존 가수들의 공연장이나 볼 수 있는 알록달록한 기다란 풍선을 가지고 나타났으며, 한국통신은 현재 주요사업의 하나인 재벌집중의 정보통신사업을 반대하는 구호가 적힌 풍선을 대량으로 나눠주었다.

◎ 진보미술동인 조각 전시

진보미술동인 '현실감각'(대표 한상용)은 106주년 노동절 기념 제3회 메이데이 조각전을 개최했다. 구체적인 삶 속에서 미술이라는 언어로, 질 높은 노동자문화예술의 생산에 부무하고자 노력하는 생산자들과 소개한 '현실감각'의 이번 3회 작품은 7.2m×2.4m×4.5m인 대형 조각으로 남노동자들이 단결된 힘과 동지애로 일깨우고 있는 모습이었다.

◎ 외국인 노동자도 서명 받아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소속 외국인 노동자 30여명은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보호법 제정을 요구하며 서명을 받으러 다녔다. 피부색과 언어가 다르지만 '만국의 노동자는 평등하다'는 진리로 한국 노동자 역시 과거에는 외국에서 불법채류하며 탄압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다며 자신들의 처지를 이해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슈(안산 시외공단 프레스공)씨는 까무잡잡한 피부에 웃음을 가득담고 유창한 한국말로 자신들의 처지를 설명하며 서명을 부탁했다.

◎ 경원대생 이사장등 현상수배

현재 장현구씨와 진철원씨등 학원자주화 투쟁중 사망해 심각한 교내문제를 치르고 있는 경원대 총학생회(총학생회장 위영석)측은 이날 보라매공원 곳곳에 최원영(경원대 이사장), 이석규(학생처장), 김원섭(총장)등 3인에 대한 커다란 사진과 함께 현상수배 전단을 붙여 눈길을 끌었다. 학생들은 최원영씨등 3명의 죄명이 장서와 진씨를 살인한 혐의와 권력 남용, 폭력죄 등이라고 밝혔으며, 경원대에서 이들을 영구 추방해주는 사람에게는 후사하겠다는 말을 빠뜨리지 않았다.

<이달의 주제-노동권>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을 위태롭게 한다. -ILO 제26차(44년) 총회, 필리델피아 선언증에서-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신청도 받고 있다.

5·18행사위:062-225-8117, 222-649476

시민연대:062-521-8811

5·18행사위, 영역별 재조명 작업

광주항쟁 16주년 맞아, 학술·문화행사 줄이어

내부고발자보호 조례제정 참여연대 촉구

5·18 특별법 제정이후 처음맞는 5·18민중항쟁을 기념해, 5월행사준비로 빛고을광주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매년 5월만 되면 많은 사람들의 눈길과 마음은 광주로 쏠리는데, 올해 행사는 특히 전직대통령의 구속과 특별법의 제정 등의 변화를 통해 '광주의 의미'를 재조명하는데 의미가 있다. 더욱이 본행사가 열리는 18, 19일이 주말이어서 여느 때보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광주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 5월행사 활발

[5·18 민중항쟁16주년 행사위원회] (위원장 강신석, 5·18행사위원회) 주최로 11일부터 시작돼 5월말까지 진행되는 5·18기념행사는 망월동묘역, 도청앞, 무등경기장, 성암야영장 등 광주 전역에서 펼쳐진다. 이중에서도 주행사는 17일 오후 도청앞 광장에서 열리는 전야제, 18일 망월동묘역에서 열리는 추모제와 기념식이다. 또한 19일 오후2시에는 도청앞에서 전국연합 주최로 국민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5·18행사위원회 박광배(33)총무는 이번 행사의 중요성에 대해 "5·18 정신을 계승하되, 각 부문과 영역에서 그 의미를 한 대목 정

리하는데 두었다"면서, 의학·역사·학술적인 측면에서 5·18민중항쟁을 정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학적 의미 재조명도

5·18 정신계승과 역사바로세우기를 위한 학술행사도 풍성하게 진행된다. 15일 [21세기 청년광장] 주최로 무등컨벤션센터에서 '미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리며, 16일에는 민교협 주최로 금곡문화관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평가와 전망' 토론회가 열린다. 특히 25일 열리는 학술발표 '광주 5·18민중항쟁 피해자 15년 후유증에 관한 연구'는 시작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소년·시민참여 유도

이밖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제, 글쓰기한 마당 등이 마련되어 있고,

한총련·민주노동·텍노련 등의 부문행사와 천주교·원불교·불교·기독교등 종교계가 주최하는 종교행사가 잇따라 열린다(문화행사는 아래표 참조).

국제청년캠프 열리

국제행사로는 14-20일 시민연대모임 주최로 성암야영장에서 '국제청년캠프'가 열리고, 극단 토박이가 5월 25일부터 6월30일까지 <금희의 오일>로 북미주 공연에 들어간다.

시민연대모임(공동대표 오수성)은 93년, 95년 국제심포지엄에 이어 올해는 5·18 정신계승, 인권과 평화를 위한 제1회 국제청년캠프를 '인권과 평화'라는 주제로 연다. 청년캠프는 인권과 평화에 관한 각국의 다양한 관심사를 주제로, 국제협력 등을 통한 해결책을 찾아본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미국, 일본, 태국등 26개국 이 참가신청을 했으며, 국내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공익정보지원단(본부장 김창국)은 2일 '내부고발자보호 조례제정 촉구'를 위한 결의서'를 서울시(시장 조순)에 전달했다.

지난해 9월 참여연대(공동대표 오계식등)와 이지문(영동포 시의원)씨는 '서울시 내부고발자보호조례제정안'을 작성해 시의회에 청원해, 이 문제를 공론화시켰다. 또한 이씨는 4월18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조순시장은 공약과 시정운영 3개년 계획을 통해 내부고발자보호 조례 제정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금까지 법률검토나 제도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순시장은 "현재에도 시민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제정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제도마련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날짜	행사명	시간·장소	주최
11(토)-17(금)	그림판 한마당	가톨릭센터 인도주변	우리미술연구회 '민들레'
11(토)-20(월)	우리하늘, 우리땅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	구동구청-광운본점
14(화)	오월문학제	가톨릭센터 7층 대강당	광주전남민족문학인협회
14일(화)	KBS 열린음악회	조선대 운동장	(재) 5·18기념재단
15(수)-17(금)	거리음악회	가톨릭센터 앞	민예총 노래분과
17(금)-20(월)	오월사진전	금남로/가톨릭 갤러리	민예총 영상분과
17(금)	거리행렬극	시내전역(전야제전)	5·18행사위
17(금)	전야제	도청앞광장(오후7시)	5·18행사위

“동지와 민중에 대한 사랑, 건강” 당부 노동운동가 유구영씨 2일 별세

간암으로 투병생활을 해 오던 민주노총 정책부국장 유구영(39)씨가 2일 새벽 2시 25분경 운명했다. 유구영씨는 최근 광주 단식위 ‘민주생활학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4월 9일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부천 세종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던 중 노동절인 5월 1일 아침 혼수상태에 빠졌으며, 권영길위원장 등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끝내 숨을 거두었다. 유가족으로는 부인 신윤복(39)씨와 두 딸 은실(고1), 민지(중1)양이 있다. 민주노총은 2일 오전 10시 긴급회의를 열고 유구영씨의 장례식을 ‘민주노총장’으로 할 것과 일정을 논의했다. 2일 오후 8시 세종병원에서 추모식을 갖고, 3일 오후 5시 입관식을 치른다. 4일 새벽 6시 병원 영안실에

서 받인후, 오전 9시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추도식을 갖고, 1시간 뒤 모교인 고려대에서 영결식을 가진다. 오후 1시 학교를 출발해 오후 4시 마석 모란공원에서 하관식을 가진 예정이다. 한편, ‘20년을 한결같이 운동전선을 지켜온 사람’ 유씨의 살아생전 마지막 인터뷰가 <말>지 5월호에 실려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인터뷰에서 그는 ‘혹시나’하는 마음이라며 동지들에게 첫째, 진정한 동지사랑, 둘째 진정한 대중사랑, 셋째 건강에 대해 무지하거나 교만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영안실: 032-348-1966
세종병원노조: 032-340-1677
민주노총: 765-2010

기사제보 715-9185

●행사와동정●

- 박노해 후원을 위한 모임 결성식
 - 일시: 5월 3일(금) 오후 6시
 - 장소: 천주교 종로교회(강남)
 - 주최: 천주교인권위원회(777-0613)
- 광주 인권지기 창립대회
 - 일시: 5월 3일(금) 오후 6시
 - 장소: 신명아트센터(전남 광주역앞 고려시멘트 2층)
 - 주최: 인권지기준비위원회(062-529-7576)
- “작은하늘 라이브 콘서트”
 - 일시: 5월 7일(화)-12일(일)
 - 평일 오후 7시 30분 토·일 오후 4시, 7시
 - 장소: 라이브극장 벳 (393-8467, 1959)
 - 주최: 예술기획 벳
- 한국여성 NGO위원회 사무실 이전안내
 - 주소: 서울시 중구 쌍림동 88-7 대한간호협회 2층
 - 전화: 268-6709 팩스: 278-3763
- 제2차 동아시아 여성포럼 등록 5월 31일까지 받아
 - 한국여성 NGO위원회는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유교문화 속의 여성문제로 열리는 제2차 동아시아 포럼 등록을 5월 31일까지 받고 있다. 여성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문의: 268-6709

내땅 사용도 미군허가 받아야 쇠목마을, 미군 공여지문제 현안 등장

동두천시 광암동 83-1번지 일대, 흔히들 쇠목마을이라 부르는 이 마을은 주민 11가구 42명이 화전을 일궈 살며, 이류이면 관광객 수백명이 찾아드는 곳이다. 그런데, 1-2년 후엔 이곳 관광객의 쉼터는 물론, 주민들의 삶의 터전마저 폐쇄될 위기에 처해 있다. 마을 입구에 미군 사격장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난 3월 15일 쇠목마을 입구엔 느닷없이 미군 사격장의 표적으로, 장갑차를 들여놓기 시작했다. 비록 땅 소유자는 마을주민들이지만, 미군 공여지이기 때문에 사격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미군의 설명이다. 그 날 이후 주민들은 지금까지 47일간 사격장 신설 저지를 위한 투쟁을 전개해 오고 있다.

쇠목마을 주민대책위 위원장인 김병규(41)씨는 “쇠목마을 주민 대부분은 해방 후 미군이 들어오면서 살던 곳에서 쫓겨나 이곳에 정착한 사람들이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또다시 쫓겨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난 달 산불이 났던 걸산리도 다른 공여지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내줬던 땅인데 이제 와서 쇠목마을까지 내 놓으라니, 하나를 주면 또 하나를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라며 분개했다.

동두천시 51x 공여지로 묶여
미군 공여지는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함에 있어 필요하면 어느때나 한국정부로부터 양도받아 사용할 수 있는 땅이다.

현재 전국의 미군기지는 98개소에 1억평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보다 더 엄청난 것으로 추산되는 공여지는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그 실태마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쇠목마을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동두천시의 경우, 미군기지 2백50만평 외에 시 전체면적의 51%에 해당하는 1천5백만평이 공여지로 묶여 있다.

쇠목마을 주민들은 시청을 비롯한 모든 관공서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시내 농성을 보름이상 진행하며 사격장 설치계획철회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주민들도 알고 있다. 이것이 결코 일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입연히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국내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여지는 한미행정협정(SOFA)에 의해 처리되기 때문에 결국 정부와 미군의 협의를 통해 해결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문제해결은 한미행정협정개정
“결국 이 문제는 우리 정부가 얼마나 자주적으로 미군에 대응하느냐의 문제”라는 강홍구(동두천 민주시민회 부의장)씨의 지적은 이번 문제의 본질과 그 해답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고 있다.

쇠목마을 주민들과 주한미군법외근절운동본부는 2일 오전 11시 미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한 데 이어, 3일 낮 12시 용산 미8군사령부 1번 정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기로 했다.

미군기지와 공여지 반환의 문제가 결코 동두천 쇠목마을만이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모든 미군주둔지의 문제이며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인식 속에, 이제 미군기지 및 공여지 반환의 문제는 한미행정 개정을 비롯한 한미관계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달의 주제-노동권>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을 위태롭게 한다.
-ILO 제26차(44년) 총회,
필라델피아 선언중에서-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경원대, 회색가면 쓰고 협상나서

11명 추가 고발, 공권력 투입 요청

학생들과 대화를 하겠다던 경원대가, 또다시 제자 1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공권력을 요청하는 등 가면 쓴 농대와 같이 학생들을 기만하고 있다.

3일 오후 3시 학교측과의 협상을 위해 본관 총장실에

자리한 학생들은, 면담파기 통보와 함께 성남경찰서의 출두요구서를 받았다. 총학생회와의 공식협상을 약속한 학교측은 하루도 체 지나지 않아 “대자보·플래카드를 철수하고 농성을 풀지 않는 한 대화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면담을 파기했다. 더욱이, 면담 하루전날 경찰측에 11명의 학생들을 고발한 점으로 볼 때 애초부터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었음이 드러났다.

학교당국의 공식협상 제의를 흔쾌히 받아들인 학생들은 이날 오전까지만해도 기대감에 한껏 고무되어 있었으나, 약속이 파기되고 소환장이 날라오자 학교측의 기만적 태도에 분개해

‘미군공여지 반환’ 미군기지앞 시위 쇠목마을투쟁, 전국적 확산 기미

한반도내 미국땅, 미군공여지 문제가 동두천 쇠목마을의 미군사격장 설치문제를 더붙어 표면화되고 있다. 지난 3월 15일 이후, 미군사격장 설치반대와 공여지 해제를 요구하며 48일동안 싸움을 벌여온 쇠목마을 주민들은 3일 낮 12시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사격장 폐지’와 ‘공여지 해제’의 목소리를 힘차게 드높였다.

이날 집회를 공동주최한 주한미군법외근절 운동본부(대표 전우섭)는 오는 10일 국방부 항의집회를 열어 △전국 공여지 실태공개 △사유지 불법공여의 책임인정 △피해보상 등을 요구키로 했다. 또한, 11일엔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앞으로 공여지 반환투쟁이 대규모로 전개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미군측은 “다음주 월요일 쇠목마을의 장갑차를 철수시키고, 사격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국방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주민들은 사격장을 영구히 설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문서화할 것까지 공여지 해제가 공극적 해결책이라는 것을 계속 해서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쇠목마을 주민들은 올해 농사마저 포기한 채 두 달에 걸친 투쟁을 끈기있게 전개해 왔다. 이제 사격장 설치안 철회라는 1차적 성과는 얻어낸 것으로 보이나,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입은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문제와 미군공여지 반환의 문제는 여전히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무엇보다도 이날 자리는 지난 2일 김원섭총장이 학교측 5인, 학생 5인으로 ‘경원 정상화를 위한 소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직접 제안하면서 마련된 자리였기에 학생들의 충격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노를 삼키기도 전에 성남경찰서에 20개 중대병력이 집결해 있다는 소식을 접하며, 예견되는 공권력투입에 긴장의 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학생회는 6일(월) 오후 3시에 다시 학교측에 면담을 제안했으며, 5일 마석 모란공원에서 고 천세용, 장현구선배 대표 5인에 참가하는 것을 비롯, 주말에도 학내 선전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에만 학내문제로 18명이 고발되고 17명이

징계된 경원대 사태는 한국 인권단체협의회(인권협)와 민교협 정식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 고발된 학생 명단>
: 위영석, 유현목, 이병민, 한왕택, 양신석, 강승환, 민태호, 박대성, 김문홍, 한유진, 임정훈(이상 11명)

범민련 3명 재판 제보자 증인신청

3일 오후 2시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남성민) 심리로 전창일(75, 범민련 의장)씨등 범민련관련 구속자 3명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그동안 검찰에서 증거로 제시한 전화통화내용에 대해 “필요한 부분을 밝혀 한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대한 답변을 검찰(강익중 검사)에 요구했다.

또한 검찰이 조종연씨에 대한 구체적으로 제보한 김상돈(일본 영사) 씨와 강종헌(범민련 일본 공동본부 차장) 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했다.

한편 검찰측은 공소장에서 신경길(38, 사무처장)씨에 대한 공소사실중 ‘반국가단체의 표현물을 제작·배포한 것’을 ‘단순 취득’한 것으로 변경했다.

다음 재판은 10일 오후 2시.

기사제보 715-9185

구타여성, 법률지원 절박 이상희할머니사건 미연에 방지하자

“구타상황에 처해있는 여성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법률적 지원으로, 구타당한 여성 3천2백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8.7%를 차지했다. 이는 한국여성의 전화(회장 신혜수, 여성의 전화)가 지난 3월 발표한 95년 상담통계에서 나타났는데, 작년 상담건수 1만5천3백90건 중 아내구타가 21.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속적으로 구타당하는 딸을 보듬어 사위를 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일 구속된 이상희(73) 할머니의 경우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상희할머니의 딸 정미숙(42)씨는 남편 오원종(50)씨로부터 돈벌이를 강요당하고, 조금이라도 대꾸를 하면 칼로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한다. 정씨가 더이상 견디지 못하고 친정으로 피신을 오면 술에 취한 오씨가 찾아와 부인은 물론 장모인 이상희할머니에게도 폭언과 구타를 일삼았다.

이때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출동조차 않거나, 출동하더라도 10분후면 오씨를 되돌려 보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찰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여성의 전화는 “현행 법규로는 이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가 어렵다. 만약 주변의 신고로 가해자 오씨를 격리 수용만 했더라면 두 모녀가 살인자가 되는 것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가정폭력방지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요구했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원 여성의 전화에서는 두 모녀 구제 서명작업을 벌이며, 재판부에 정상을 참작해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보낼 예정이다.

한편 이같은 가정폭력의 심각성이 ‘죽음’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른 경우는 드문 일이 아니다. 95년 3월 계속된 가정폭력으로 아버지를 살해한 전경진(18)씨, 94년 폭력에 못이겨 남편을 살해한 이순심(43)씨, 93년 14년동안 남편을 학대를 받아오다 결국 칼로 생명을 위협하는 남편을 죽인 이형자(40)씨 사건 등은 가정폭력의 문제점과 해결책 마련의 시급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두밀마을학교 현판식 폐교철회소송 지원

작은 학교 살리기운동의 대표적 예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가평 두밀분교가 마을회관에서 다시 문을 연다. 오늘 오후1시 두밀리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두밀리 마을학교’ 현판식이 거행된다.

이미 오래전에 마을 입구 두밀분교의 교문은 녹슬었지만, 지난 1일부터 아이들은 방과후 마을회관 공부방에 다니기 시작했다. 엄마들이 번갈아 가면서 숙제도 보살펴주고, 좋은 영화도 보여주고, 옛이야기도 들려준다. 이후 여건이 좋아지면 컴퓨터 교육도 해줄 작정이라고 한다.

두밀리마을 주민들은 94년 2월 농어촌소규모학교통폐합방침에 따라 두밀분교가 폐교된 뒤, 그해 4월 서울고법에 폐교철회소송을 제기해, 95년 5월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 즉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아직까지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락처: 02-745-8333/
0356-82-8615

합법출판도 국보적용 사노맹 징역5년 구형

3일 오전10시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최정수) 심리로 열린 권순미(33, 고려대학원 정치학과)씨 재판에서 검찰(담당검사 조성옥)은 국보법상 이적단체가입과 회합통신,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로 징역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애초 권씨는 사노맹재건 혐의로 구속되었다. 하지만 권씨는 “91년 사노맹 가입 후 활동이 전혀 없었고, 5개월만에 조직을 탈퇴했다”며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또한 검찰측은 압수한 「세계철학사」 「국가와 혁명」 등 서점에서 쉽게 살수 있는 책을 문제삼아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고 공판은 15일(수).

한편 지난 4월24일 권씨와 같은 사노맹 가입혐의 구속·기소된 강희원(33)씨와 한봉수(31)씨는 각각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 징역4년을 구형받았다.

“체르노빌을 돕자” 선명회·환경운동연합

한국선명회와 환경운동연합은 체르노빌 10주년을 맞아 체르노빌 현지에서 살고 있는 조선족 피폭이민자를 초청, 이들 치료 기금마련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오는 오후4-6시 관악청소년회관에서 연다. 음악공연에서는 체르노빌 피해 어린이들의 시와 산문이 낭송되며, 조선족 피폭이민이 ‘이리나 인’ (10)양이 나와 증언을 할 예정이다. 문의: 청소년회관 876-0636

동두천 산불참사에 미군측 배짱 위로금 “60만원만 먹어라”

지난달 23일 7명의 인명을 앗아간 동두천 산불 참사에, 직접 책임자인 미군측이 희생자보상은 물론 공개 사과나 책임자 문책조차 하지 않아, 동두천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번 참사는 무엇보다도 미군의 군사훈련중 발생했다는 점, 게다가 산불을 내기도 이를 초동진화하지 않아 더 큰 참사를 야기했다는 점, 사격훈련시 수시로 산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대비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미군측의 책임이 명백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미군측은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이, 사망자들에게 단 60만원의 위로금만을 지급함으로써 오히려 유족들을 우롱하는 듯한 태도마저 보이고 있다.

이 상황에서 동두천시는 유족들에게 1억1천8백만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동두천시는 학교와 관공서, 시민들로부터 모금한 성금으로 일인당 3천만원을 지급하고, 시에비에서 5천만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번 산불참사의 보상을 시민에게 부담지우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4월29일 동두천 시청소속 공익근무요원 9명이 공익요원의 확실한 신분보장을 요구하며, 시청직원과 싸움을 벌인 끝에 사만섭(21)씨를 비롯한 5명이 구속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들은 준공무원, 준공인이라는 애매한 신분에서는 이후 똑같은 사건이 발생해도 배상문제의 법적규정이 없다는 것에 항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이달의 주제-노동권>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을 위태롭게 한다.
-ILO 제26차(44년) 총회, 필리델피아 선언중에서-

공권력 투입에 항의 2명 분신 경찰, 화염병 사용으로 인한 과실 주장

26일째 노조측과 대화를 거부하다 결국 공권력을 투입한 회사측의 처사에 분노해 노조간부 2명이 분신, 공권력 투입요청에 출동한 전투경찰이 조합원을 폭행병원에 즉시 후송하지 않고 20여분동안 전경차에 태운 채 폭행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4월11일부터 전면파업을 벌여온 구미 한국합성 노조(위원장 황영호)는 4일 회사측(대표이사 박동식)의 공권력 투입요청에 출동한 전투경찰이 조합원을 폭행하자 이에 항의하며, 이진권(33·부위원장)씨와 서상준(32·회계감사)씨가 온몸에 신나를 붓고 분신했다.

구미 순천향병원에 치료 중인 두 사람은 현재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 중인 이씨와 서씨는 각각 40%와 25%의 화상을 입은 상태이다.

한편 회사측은 그동안 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불법파업에 대해 24억6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다. 또한 교섭중에는 ‘회사는 망해도 노조는 인정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되풀이 해 왔다<하루소식 4월26일자 참조>.

또한 노조측에 의하면 사고 당일, 제2공장의 장성택(전무이사)씨등 관리부 직원 1백여명이 구미노동청을 방문해 “불법파업이니 공권력을 투입해 해결하라”며 요청했다고 한다. 요청을 받고 전투경찰 1백50여명이 제2공장에 투입돼 조합원들을 폭행·연행했으며, 이에 항의해 이씨등이 분신했다. 그동안 연행된 조합원들은 구미경찰서등 4곳에 분산되어 조사를 받고 있으며, 그중 신영호(26·대의원)씨등 43명은 화염병 사용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의 편파보도로 노동자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 6일자 문화일보 사회면 기사는 화염병을 던지다 실수로 화상을 입게 되었다고 한 경찰

의 입장만을 실고 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조합원들은 화염병을 던진 적이 없으며 특히, 부위원장등은 화염병을 들지 않았음을 주장했다.

이씨와 서씨가 치료 중인 한강성심병원에는 이병위(부위원장)씨등 13명이 병상을 지키고 있다. 이씨의 부인 박은숙(25)씨는 이씨가 이틀째 응급실에서 있는 것을 불안해 하며 “화상은 그 자체보다 다른 병으로 전염되는 것이 무서운데 이 사람 저사람이 드나드는 응급실에서 있어야 하니 너무 안타깝다”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병원측은 그동안 입원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씨를 응급실에 두었으며, 서씨는 6일 오전에야 준중환자실로 옮겨졌다.

한편 한국합성 서울무역부에서 임원비를 가지고 온 유한상(상무이사)씨는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고, 이러한 불운한 일이 생겨 착착한 심정이지만 경찰측의 주장과 완전히 상반돼 어느 쪽 말을 믿어야 할 지 모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분신이라는 것이 조합원들이 보는데서 하는 것 아니냐”며 은연중 경찰측 주장을 두둔하는 입장을 보였다.

분신사건이후 6일 오후 7시에 한국합성노조는 전조직원 집회를 열고 △경찰 투입과 관련한 책임자 처벌 △강제연행·구속노동자 석방 △사건조작 중단 △교섭에 임할 것 △노동부는 더욱 분노하고 있다. 6일자 문화일보 사회면 기사는 화염병을 던지다 실수로 화상을 입게 되었다고 한 경찰

이진권부위원장 인터뷰

“끝까지 싸워 승리의 기쁨을 전해달라”

-제2공장에 항의하러 갈 때 동료들과 신나를 가지고 간 것으로 하는데 사전에 준비된 행동인가?
=일주일전부터 전경들이 제1공장의 열병합발전소와 2공장에서 배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4일 관리자들이 노동청 항의방문후 2공장에 들어갔다 나오는 조합원 5명이 전경들에게 무자비한 폭행당했고, 1공장에 배치되어 있던 병력 3개 중대가 2공장으로 이동해 조합원 22명을 강제로 연행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상황의 긴급함을 느낀 우리 5명은 온 몸에 신나를 붓고 전경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하지만 전경들은 더욱 폭행을 가했고 이에 흥분되어 불을 붙인 것이다.

-문화일보 기사에는 부위원장등이 경찰을 향해 화염병을 던지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하는데...
=화염병이 아니라 나 스스로ライター 불을 붙였다. 나 같은 노동자의 입장을 신문들이 실겠는가. 다만 기사들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

-회사측에 한마디 한다면.
=이 상태가 빨리 끝나는 것이 노조와 회사측에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이 대처상태가 계속된다면 불행한 일이 또 발생할 것 같아 두렵다. 회사측은 더 이상 억지주장을 버려야 한다.

-조합원들에 한마디 해 달라.
=함께 있어야 하는데 너무 미안하다. 비록 내가 없더라도(그의 말 속에서 죽음을 의미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열심히 싸워 승리의 기쁨을 전해줬으면 한다. 끝까지 함께 못해 정말 미안하다.

**'이적표현물 탐독'
전공관련 무죄 선고**

지난 1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신회주(23, 전남대 사학과 4년)씨 항소심에서 재판부(부장판사 이홍훈)는 원심을 파기하고 국보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미제침략백년사』 『빼곡새가 노래하는 곳』 등을 읽은 것은 사학과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전공과 무관하지 않으며, 위 자료를 읽는 것이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기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1일 열린 1심 판결에서는 재판부(판사 박행웅)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으나, 신씨는 이에 불복,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채 항소심을 준비해 왔다. 무죄판결을 받은 후, 신씨는 "상식과 억지의 싸움에서 상식이 승리하여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말했다. 그는 "이번 승리는 국보법 7조5항에 대한 부분적 승리일뿐 국보법 자체를 이긴 것은 아니다"며 국보법 철폐를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의대사건 7주년
법적 진상규명 요구**

지난 3일로 부산 5·3동의대 사건이 7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8·15특사로 윤창호(무기정역 선고)씨가 석방되면서 30여명에 이르던 구속자들은 모두 풀려났지만, 이들은 아직도 살인죄라는 누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동의대 사건의 가장 큰 의혹은 화재발생의 원인에 대한 부분이다. 재판과

정에서 학생들이 신나와 석유를 뿌렸다는 점·경측 주장이 틀린 것으로 밝혀졌으며, 화염병과 발화의 연관을 찾아내는데도 실패했다. 그리고, 경찰측 증인들의 증언에서도 당시 화재가 결코 학생들의 의도적 방화가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하지만 진정사망에 따른 파가운 여론재판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은 극악한 살인마로 규정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방화에 의한 살인이라는 반인륜적 죄로 판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기정역 선고자가 6년만에 사면조치된 것은 동의대 사건이 정치적 의도에 의해 조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이와관련, 이광영(부산 민가협 사무국장)씨는 "사면을 통해 정치적으로는 진상규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지만, 사법적인 진상규명이 이뤄야만 진정으로 동의대 사건 관련자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다"며 재심 준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 인권지기 창립
인권감시·보장 한몫 다짐**

민주주의의 성지 광주에서 인권운동의 새 지평을 열어 갈 '인권지기'가 3일 창립대회를 가졌다. 전문인권단체를 지향하는 인권지기는 "문민정부 3년 동안 우리의 인권상황은 크게 개선된 모습이 없다"며,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일궈 나가기 위해 인권의 감시와 보장을 위한 작은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창립취지를 밝혔다. 인권지기는 주요활동으로 양심수 후원, 양심수 석방 및 악법철폐 운동, 각종 자료집 발간 및 인권 교양 강좌 개최, 인권교발센타 운영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주간/인/권/호/름

(96년4월29일부터 5월5일까지)

<4월29일(월)>
전두환씨등 재판에서 80년 언론기관 통·폐합조치 전씨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져/일본 도쿄 니카노경찰서, 위안부들의 생활상을 담은 '낮은 목소리' 상영을 방해한 괴청년 소재파악에 나서

<4월30일(화)>
노동부 산하 한국노동교육원 설문결과,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가장 먼저 변화해야 할 대상으로 기업(36.1%)복아/성폭력상담소 5월 기념세미나에서 성폭력처벌 친족범위를 민법과 동일하게 확대할 것 촉구

<5월1일(수)>
106주년 세계노동절, 민주노총등 보라매공원서 2만여명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두산기계 해고·정적 노동자, 부당징계 철폐요구하며 49일째 천막농성/정보통신주권 수호와 재벌독점방지를 위한 범국민대행위, 종묘공원서 재벌위주의 개인휴대통신 사업자 선정방침 철폐 요구

<5월2일(목)>
민주노총 정책부국장 유규영(39)씨 간암으로 사망/민변, 8·15등과 관련 미국정부로부터 받은 비밀문물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외무부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경찰청, 20살 미만 청소년의 가출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13-18% 증가했다고 발표/보건복지부, 상반기 결원인력 36명 장애인우선 채용키로/일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발기인 대표 사임

<5월3일(금)>
경원대 30일 10명 제적 발표에 이어, 학생 11명 추가고 받고 공권력요청/쇠목마을 주민과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사격장 폐지와 공여지 해제촉구 집회/미군행기 평택시 상공 저공비행하다가 민가 10여채 등에 2백60여만원의 재산피해 발생

<5월4일(토)>
공안탄압 중단등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전남대생 장삼열씨 최루탄으로 보이는 물체에 오른쪽 눈을 맞아 실명/복지부 발표, 편부모가정은 95년 1백만 가구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울산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등 노조간부 16명 경찰 고소

<해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신문지면을 때우는 어린이관련 기사들을 보면서 작년과 달라진 것이 무얼까 의아해진다. 올해도 여전히 아이들은 부모들에게 응돈을 많이 줄 것, 공부만 하라고 하지 말 것, 잔소리를 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일년새 11%나 가출 청소년이 늘었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결해야 할 것인가. 정부가 내놓은 방법은 간단하다. 전국 방방오원들 되도록 많이 내세워 윤리학, 유혹업소, 직업소개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한다. 이 점은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정부정책과 어른들의 생각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한 대목이다. 그러나 올바른 해결책의 출발은 어린이를 결코 보호나 훈육의 대상이 아니라 엄연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데 있다. 바로 이점이 올해는 5월을 맞아 달라져야 할 것이다.

인권하루소식

<이달의 주제-노동권>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을 위태롭게 한다. -ILO 제26차(44년) 총회, 필라델피아 선언중에서-

발행처 : 인천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재개발 시행에 주민의사 무시

신림동 재개발지구 주민, 주거권 보장요구

재개발 시행자 선정의 부당성에 항의하고 주거권과 재산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 3일부터 신림동 328번지 내 신림2-1 재개발지구 주민들이 대한주택공사 본사에서 단식 및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주민들의 자율적 의사에 의해 추진되어야 하는 재개발 시행권이 불합당한 절차에 의해 주택공사로 넘어간 것을 지적하고 있다. 92년 5월2일 주민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에 대한 투표가 가부동수를 이뤘으나, 당시 주민대표를 맡고 있던 이윤성씨가 자의적으로 주택공사에 시행권을 넘겼고, 이 때문에 주민들은 94년 3월6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재차

총회를 열고 구 집행부를 해임시켰다. 따라서 주택공사에 시행권이 넘어간 것이 주민들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94년 5월27일 주택공사를 시행자로 선정고시해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이후 주택공사는 339번지 일대에 9백여 세대가 들어설 수 있는 기아주택지를 설치했으며, 지금까지 주민 2천세대 가운데 1천9백세대가 이주해 생활하고 있다. 현재 남아 있는 1백세대 주민들은 현실적으로 시행자 선정에 철회시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자선책으로 자신들의 소유지 1천7백여평에 한해서는 스스로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며 지

구분할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표 이정화(33)씨는 "재개발지구 2만7천여평의 땅 중 9천평은 주택공사가 서울시에 채납하게 되어 있다. 우리는 이 땅을 주민에게 돌려달라는 것이며, 이는 결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공익이나 경로당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주택공사가 이를 들어주지 않고 철거를 감행한다면 우리는 땅 속에 묻힐 각오로 싸울 것이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한, "현재 평당 2-3백만원으로 소유지를 팔게 될 경우,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주민은 5% 정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재개발 시행은 주민의 의사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위원장등 16명의 노조간부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울산동부경찰서에 고소·고발했다.

회사측은 지난 4월19일 가스폭발로 조성동(44·특수선 선각 건조5팀 반장)씨가 사망한 후 노조측이 조합원들에게 4일간의 '작업장 출입 금지'조치를 취한 것과 노조 기관지 '민주항해'에서 회사측의 안전조치 소홀로 사고가 났다는 글을 게재한 것에 관련 이와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위원장은 7일 성명서를 발표해 "이번 회사의 고소·고발조치는 비도덕적 행위"라고 비난하며 "현재 단체협약 협상이 진행중이고 임금협상도 곧 들어가게 되는데 회사는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갈 것이 아니라 각종 현안을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성숙된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들어 현중에서는 8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으며, 조씨가 사망한 때에는 김정국사장이 직접 사고현장을 둘러볼 정도로 근로조건이 심각한 상태였다.

회사측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배경에 대해 이재관(34·편집실 차장)씨는 "회사측은 대이상 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현재 한국합성노조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등은 노동법 개정을 앞두고 노동자들이 주장이 많아 질 것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중노조는 이후 노조간부들의 고소·고발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현중의 안전실태문제를 알리는 선전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 주요 공판 안내 ○

- 5월7일(화) 권영길, 일반교동방해등, 오후2시, 3단독, 320호 속행
- 5월8일(수) 강희원,한봉수,유영옥(사노맹 사건),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1부,311호 선고
- 5월9일(목) 김형덕, 국보법, 오전10시, 단독3부, 317호 속행
- 5월10일(금) 유현수,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425호 속행
- 5월11일(토) 김진중,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425호 선고
- 5월12일(일) 김재우의8인, 국보법, 오후2시, 합의22부, 311호 속행

-이상 서울지법 형사국

우토로마을에 사는 한인강제징용자들 일본대기업 소유권 주장, 퇴거통보

재일 한국인이 일제시대의 강제징용 때부터 살아온 터전이 일본 대기업의 반사회적 행위로 철거위험에 처해 있어 국내 동포들의 관심과 도움이 요청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 교토의 우토로마을은 80세대 3백80여명의 재일 한국인이 삶을 꾸려가고 있는 곳이다. 이 마을은 지난 40년 경도 비행장 건설에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이 집단기거와 숙식을 하던 곳으로 종전후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된 상태에서 조선인들 스스로 집단촌을 건설하여 살아온 지역이다.

동아리 강제해체협박에 항의 대구공전 박동학씨 분신 중태

대구공업전문대학(이사장이경희, 대구공전) 동아리 연합회(회장 배수용, 동연) 조직국장 박동학(92학번 전자계산학과)씨가 6일 오후 4시 20분경 분신했다. 박씨는 학장(노정환)과 학생과장(김갑준)의 면담을 요구하며 온몸에 신나를 붓고 분신자살을 기도했으며 현재 전신 70%의 3도화상을 입고 영남대병원에서 치료중이나 중태이다. 대구공전 오대국(26, 총학생회 회장)씨에 의하면 올해 초부터 학생들은 동연의 자치권보장과 지도교수제 자율화 등 7가지를 요구했다. 그리고 4월 22일부터 각 학과별로 집회를 여는 과정에서 학생과장은 동연회장에 반성문을 쓰지 않으면 동연을 강제 해체시키고 징계하겠다고 협박을 했으며, 6일 오전경에는 학생과

우토로마을은 نيسان자동차의 계열회사인 نيسان차체의 소유지로 되어있다가, 87년 5월 부동산업체 (유)서일본식산에 매각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50년 가까이 살아온 주민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해 현재의 사태가 발생되었다. 또한 마을을 인수한 (유)서일본식산은 88년 12월 전 주민에게 퇴거통보를 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자 세대주를 피고로 89년 토지명도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주민들은 자신들의 땅을 지키기 위한 7여년의 법적·사회적 투쟁을 벌여왔다. 조상훈(광진구 서울시의원)

씨는 "그동안 국내에서 우토로주민 대다수가 조총련계라는 이유로 도움을 주지 않았다"며 "이 문제는 민간이나 조총련계나라는 식이 아닌 민족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6일에는 우토로마을을 지키기 위한 대대적인 집회가 개최되어 있다. 우토로마을의 주민단체인 우토로내회 총무인 김소도(70·강제징용자)씨는 "집회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 바란다"며 "이 땅은 우리의 피와 땀이 묻혀진 우리들의 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재판에서 패소하게 되어도 다시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문제해결을 위해 우토로재판부의 화해조정안이 마련되었지만 1차조정안은 서일본식산 회사의 거부로 성립되지 않았고, 95년 4월에 제기된 2차 조정안은 '회사측의 토지 매입이 터무니 없다'며 주민측에서 거부했다. 현재 재판은 마지막 한세대의 증인조사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7월에 재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박노해씨 후원모임 결성 "양심수 석방의 첫발"

지난 3일 종로성당에서는 박노해 후원모임이 결성됐다. 이날 결성식을 주최한 천주교 인권위는 "박노해라는 이름은 이땅의 양심수와 소외된 이들의 상징"이라며, "박노해 후원 모임은 모든 양심수의 석방을 앞당기고 우리 사회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의미있는 첫발"이라고 결성취지를 밝혔다.

이 모임은 박씨의 석방을 위한 국내외 인권단체 문화예술단체와의 연대활동과 박노해 시와 노래의 공연개최 등의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아시아시민사회 연구모임 한국사회교육원 모집

한국사회교육원(원장 오제식)은 국제연대사업의 일환으로 '아시아 시민사회 연구모임'을 준비중이다. 1차 아시아시민사회 연구모임은 필리핀 시민사회를 주제로 5월 20일부터 10주 동안 진행된다. 신청 마감 9일(목), 단회원은 12명으로 제한한다. 문의: 744-3964(장호순부장)

천주교인권위 선출 인권협 대표단체

한국인권단체협의회(인권협)는 7일 낮 12시 제4차 대표자회의를 갖고 제3차년도 대표단체로 천주교인권위원회(상임대표 김승훈 신부)를, 간사단체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을 확정지었다. 또한 인권협 소속 단체로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기독교교회여성연합회 인권위원회'가 신규단체로 가입할 예정이다.

북측에 인권기도문 제안 불교인권위 24일 함께 낭독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와 통일인사 석방 불교대책위원회(부위원장 지원)는 6일 북한조선불교도연맹(대표 박태호)측에 '부처님 오신날 남북 불교인권기도문'을 함께 작성·발표할 것을 제안했다. 불교인권위가 제안한 기도문에는 '국보법 철폐와 장기수 석방, 합세환서 등 3명의 전쟁 포로에 대한 북송의 소원'이 담겨져 있다.

범민련 강령과 규약의 국보법 위반에 관한 의견

민주법연 소속 법학자 이상영(충북대 법학)교수는 지난해 11월 국보법 제7조 제1항과 제5항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된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단의 변호사단을 통해 범민련 강령과 규약이 국보법 위반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지난 4월 24일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그 내용을 요약해 실는다.<편집자주>

1. 범민련의 강령과 규약은 헌법상의 평화통일 원칙과 부합되며, 연방국가 통일방안은 국민주권의 원칙에 부합하는 통일방안을 찾기 위한 하나의 노력에 불과하다.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서는 북한의 대남전략을 교과서적으로 서술하고 이를 90년의 범민족대회추진본부와 당해 사건의 범민련의 강령 및 규약과 단선적으로 관련지워 기재하고 있을 뿐, 그 강령과 규약의 헌법적 또는 법률적 적부판단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범민련과 그 참가자 활동의 국보법 위반행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살피기 위해서 그 양자의 관련성은 매우 중요한데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공소장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다. 여기서는 공소장에서 판단하지 않고 지나친 부분, 즉 과연 범민련의 강령과 규약이 현행 헌법 하에서 어떠한 내포와 외연을 갖는 것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1) 강령의 전문과 1은 "은 거리의 슬기와 힘을 모아 민족의 분단을 극복하고 90년대에 기필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7.4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이는 "평화적 통일의 사망에 입각하여 정의와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라는 현행 헌법 전문에 완전히 부합되는 것이다.

(2) (3) 중략
(4) 강령 3과 4는 평화통일을 위한 남한과 북한의 물리적 경쟁과 대결구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협력의 방안이고, 강령 5와 6은 50여년의 분단으로 인한 단결을 극복하고자 하는 방안이라고 보인다. 이는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이미 그 헌법적합성이 확인된 바 있다.

결국 범민련의 강령과 규약, 결성선언문은 평화통일에 관한 현행 헌법 전문과 제4조의 규정,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그 헌법적합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2. 결국 검찰의 공소논리는 규약이나 강령에 대한 실질적 평가없이 과거의 자의적인 법운용 실태를 또다시 재연하고 있는 것으로 단호히 거부되어야 할 것이다.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범민련의 강령과 규약 및 결성선언문이 엄연히 우리 헌법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검찰은 범민련의 강령과 규약이 국보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공소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공소논리를 맹목적으로 전개한다면, 범민련의 강령과 규약의 각 조문들의 내용이 어떤 것이 되든 상관없이 이미 그것을 공동으로 읽거나 채택한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2) 이처럼 잘못된 국보법 운용 실태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구 국보법(91년 5.31 개정 전법) 제7조의 위헌심판에서 동 조항 자체의 양심의 자유 침해 가능성, 편의적·자의적 법운용 허용의 문제, 헌법

의 평화통일 원칙 위배 등 법치주의와 최형법정주의 위반의 소지를 근거로 엄격한 해석을 전제로 하는 한정합헌결정을 선고한 것(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이나, 이에 따라 91년 5월 31일 개정된 법률의 제7조 제1항에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행위의 구성요건을 부가한 것이 가지는 헌법적 의미를 물이해한 소치라고 생각된다.

(3) 오히려 조금이라도 국보법의 존재의의가 있다면, 국보법의 운용은 보다 헌법에 적합하게, 그리고 보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 평등의 기본원칙"(헌법재판소 결정요지 제5문)을 우리 현실에 구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위 개정법률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4) 이렇게 볼 때 이번 범민련 국보법 위반 여부의 문제에서 검찰의 공소논리와 법운용은 현행 헌법과 개정 국보법의 취지에 반하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3. 헌법의 영토조항이나 북한의 반국가단체 여부에 관한 여러 논의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검찰의 공소논리는 인용될 수 없으며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더욱더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1) (2) 중략
(3)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이라거나 "휴전선 이북지역은 인민공화국이 불법으로 점령한 미수복지역"이라는 대한민국의 영역에 대한 종래의 해석논리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바로 이들 논리에 기초하여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 역시 이제 공개적으로 그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입장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비록 소수의견에서이긴 하지만 명확히 개진된 바 있다. 앞의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소수의견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의 평화통일 조항과 상충한다고 하면서, "남북한의 주민이 서로 상대방의 실정을 정확히 알고서 형성된 여론의 바탕에서 통일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4) 물론 아직도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북한이 여전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양립하기 어려운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견해의 타당 여부를 쉽게 논단할 수는 없다. "북한은 반국가단체"라는 명제를 근본적인 존립기반으로 삼고 있는 국보법의 적용은, 그 명제 자체의 타당 여부에 대한 논의가 공식화된 이상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말해 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 평가 없이 사용된 문언의 외형에 의존하여 국보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려는 검찰의 공소논리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것으로 당연히 거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달의 주제-노동권>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을 위태롭게 한다.
-ILO 제26차(44년) 총회, 필리델피아 선언증에서-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좌파 대청소’ 작업 노골화 정치·학생조직 및 노동진영까지

김영삼 정부가 파시스트 적 탄압과 ‘좌파 대청소 작업’을 노골화하고 있다. 7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정부는 “학생·재야활동의 좌경화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며, 집회에 공권력을 총동원한 뿐 아니라 컴퓨터통신과 도서 등을 통한 이념확산을 막고, 가칭 학원대책실무협의회를 설치해 이념문제에 관한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사상·집회의 자유를 비롯한 민주사회의 기본권마저 통제·구속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좌경화 좌시않겠다
이는 올해들어서만도 구 사노맹 활동자들의 잇단 구속, 쫓다지 사건, 한국노총

청년연대 사건 등을 통해 진행되어 오던 ‘좌파청소’ 방침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발표 뒤 채하루도 지나지 않아 「전국학생정치연합」(전학련) 관련자를 구속함으로써 그 실행을 본격화했다. 92년부터 진보적 학생운동을 목표로 공개적 정치활동을 해온 「전국학생정치연합」 관련자들의 구속은 정부의 학생정치세력 소탕작업을 본격화하는 전주곡이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전학련 8일 긴급구속
8일 국보법 위반혐의로 긴급구속된 성혜연(덕성여대 91학번)씨등 전학련 관련자 6명은 전날부터 이날 오전9시-10시 사이에 각각 자신의 집에서 연행돼 홍제동 보안과에 구금되어 가족의 면회마저 거부당한 채 조사를 받고 있다.

“농민운동의 희망을 살립시다” 12일 최종진 후원기도회

전농, 전민련, 통일시대국민회의 활동을 통해 한평생 민주화운동에 헌신해온 최종진(갑신대 71학번)씨가 4월말 폐암선고를 받고 현재 청주 단식원에서 투병중이다. 최씨는 현재 폐암말기 판정을 받은 상태이다. KNCC와 전농을 비롯한 재야단체에서는 최종진씨를 돕기위한 후원회를 조직하고 오는 12일 오후2시 형제교회에서 후원기도회를 갖는다. 문의: 252-0273
계좌번호: 한일은행 085-065100-02-20 이상길
상업은행 432-07-044055 이상길

원장 이진권씨 등 2명의 분신에 책임을 묻기 위해 경찰에 항의방문을 갔으며, 경찰은 노조원 1백30여명을 현장에서 연행한데 이어, 18명을 구속하고 27명을 불구속, 1백3명을 구류처분했다. 또한, 황영호노조위원장을 비롯 7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검거에 나서는 등 ‘노조 씨 말리기’작전에 나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학련 구속자 명단>
성혜연, 이소영(성신여대 89), 김지영(덕성여대 90), 김정순(외국어대 91), 윤여림(성신여대 92), 손영우(동국대 90)

재개발지역주민 연행 주택공사 공권력요청

신림동 재개발 문제로 논현동 대한주택공사 본사에서 침묵시위를 벌이던 이경화(33)씨등 지역주민들이 8일 오전 강남경찰서로 전원 연행됐다. 이날 오전11시경 1백여명의 전경 및 사복경찰들에 의해 연행된 주민들은 방배, 관악, 노랑진경찰서에 3-4명씩 분산돼 조사를 받고 있다.

주택공사(주공)측은 6일 업무방해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주민들을 고소한 상태였으며, 이날 공권력 투입은 주공측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주공측은 경찰병력이 투입되기 직전까지도 표면적으로는 주민들과의 대화를 원하는 듯한 행동을 취했다<하루소식 5월8일자 참조>

이날 구속된 성혜연씨의 어머니 최양순(49)씨는 “도대체 왜 내 딸을 잡아가지 이유를 알 수 없다. 경찰은 연행사유를 밝힐 수 없다면서 무조건 딸을 잡아갔다”며, “문민정부 하에서도 사상의 자유는 없는 거냐”고 울먹였다.

이번에 구속된 6명 중에는 활동을 정리하고 사회생활에 전념하던 자들도 포함돼 있어, 정부의 좌파소탕작업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이들뿐 아니라, 한때라도 좌파활동을 했던 모든 사람들을 표적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전학련 사건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최근 몇년간 진행되어 온 공안사건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하다.

노동현장도 소탕작업

한편, 김영삼 정부의 운동권 소탕작업은 이념·정치 조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노동현장에서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구미 한국합성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구속은 정부가 ‘신노사관계구상’이라는 노사관계 개혁방안을 내놓으면서도 한편에선 정부나 회사쪽에 부담스러운 노동세력들은 과감히 제거하겠다는 의도를 여실히 볼 수 있다. 한국합성 노동자들은 지난 5일, 노조 부위

기획시리즈 ① ‘세계의 인권’ 연재를 시작하며

모든이는 다른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편집자주> 지금도 세계 구석구석에서는 실종·고문·학살 등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으며, 어린이·청소년·난민·선주민 등 소수자들의 인권문제가 심각하다. <하루소식>에서는 기획으로 인권침해를 유형별, 계층별로 나눠 12월말까지 약 20회에 걸쳐 소개할 예정이다.

몇 년째 귀청을 때려온 ‘세계화’ 구호에 넌더리가 났을 독자들에게 <인권하루소식>에서까지 ‘세계’를 들고 나오는게 어떤 반응을 낳을지 걱정스런 한편 ‘인권’은 좋은 얘기는 제쳐두고 항상 끔찍하고 고통스런 일들만 들춰낸다는 인상을 줄 것이 두렵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 글이 둘러볼 ‘세계’는 ‘로맨틱 유럽횡단투트’식의 유쾌한 제목과는 아주 판판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시작한 것은, ‘인권침해’는 너무 흔한 이야기이지만 필요란 만큼 얘기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침해자와 탄압자들은 항상 ‘사실’을 감추고 싶어한다. 그러나 이를 모른 척 하는 일, 아니면 아예 모르고 있는 것 자체는 결코 옳은 일이 될 수 없다. 모든 사람은 인종·국적·이념을 넘어, 국내법과 관습을 떠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안고 있다. 인권보호는 모든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다.

국경선은 존귀하게 대우 받을 인간의 권리를 부정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될 수 없을 뿐더러 오늘날의 세계는 위하고 실린 한 쪽의 천과 같다. 우리가 맞닥뜨린 문제의 상당수는 국제간 상호협력력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두 차례의 세계대전의 유혈과 공포에 대한 ‘인간성의 대응’으로 표현된 세계인권선언은 국제간 상호협력의 경향을 드러낸 초기의 증거물이다.

그러나, ‘모든 민족과 나라

를 위해 성취해야 할 공통기준’으로서의 선언과 그뒤를 따를 수많은 인권조약들이 그 이행에 있어서 사람들의 ‘절대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국가안보와 공공의 안전, 범죄예방, 공공질서…”는 항상 그럴듯한 구실이 된다. 그러나 누가, 언제,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기 시작했고 결정하는가? 국제무대에 선 인권의 이상을 담은 명언을 하고 자기 나라에선 인권침해를 일삼는 위선은 계속되고 있다.

어느 나라나 인권의 깃발을 꽂고 항해하지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지도를 해독해 왔다. 동·서간의 해묵은 이분법 - ‘자유’ 지향이냐, ‘보장’ 지향이냐, 정치·경제·사회적 권리가 먼저냐 - 논쟁은 남·북간, 제3세계와 선진국간의 갈등으로 이어져 왔다.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유’에 대한 자부심에 차서 선진국들은 말한다. “국가와 의무는 가능한 최대한의 자유를 개인에게 보장하는 것이다. 단일정당과 독재로 무슨 발전을 이룰 수 있느냐? 여성과 소수자를 어찌 그리 혹독하게 다룰 수 있느냐? 제3세계의 인권은 말로만 떠벌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의 자부심은 종종 ‘위선’으로 조롱받는다. “무기를 파는 건 누구냐? 고문도구를 수출하고 기술을 가르친 건 누구냐?”, ‘일자리’가 없는데 4, 5년마다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그리도 좋으냐?”

한편, 제3세계의 반발은

우리에게 익숙한 논법이다. “우리는 정말 가난하다. ‘생존’이 우선이다. 오물렛을 먹으려면 달걀을 깨뜨려야 한다. 즉, 일시적인 인권의 손상이 경제성장의 열매를 먹을 수는 없다. ‘개인의 자유’는 때때로 ‘더 큰 선’을 위해 희생되어야만 한다. ‘개인의 자유’라는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려들지 마라. 우리는 ‘개인’보다는 ‘사회 속의 조화와 질서’를 더 중히 여긴다” 등등.

전환점은 가까이 있다. 93년 세계인권대회에 모인 각국 정부와 민간, 남성과 여성은 한 목소리로 합의했다. 인권의 단계에 대한 구시대의 논쟁을 거절하고, 현재 실천해야 할 의무이자, 미래사회의 관건으로써 정치·시민적 권리와 경제·사회적 권리간의 실제적인 융해를 내세운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우울한 목록들을 펼쳐들어야만 했다. 단 하루도 전쟁과 기아, 자의적 구금과 고문, 강간과 살인, 함께 마련한 선언과 헌장·조약이 끊임없이 손상되고 있음을 확인해야만 한 것이다. 한편 권리에 대한 서로 다른 주장의 화해와 인권존중 없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있을 수 없다는 점은 더욱 분명해졌다. 이 점은 앞으로 연재될 우울한 목록들 앞에서 재확인될 것이고, 뭔가 ‘시작’해야 할 때라는 경종이 될 것이다. “행복은 전지구적인 것이어야만 한다. 모두가 누릴 수 있을 때만이 세상은 보다 나은 것이 될 수 있다”(Paulo Sérgio Pinheiro)

【류은숙 인권교육실장】

정년 60세로 연장 민주노총 법개정요구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은 어버이날을 맞아 법개정을 통해 모든 직장의 정년을 최소한 60세 이상으로 연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평균수명의 증가, 자녀들의 결혼연령 증가 등 변화된 시대상황에 따른 것이다. 92년 7월 시행된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과거 행적에 낙인 사노맹 무조건 유죄

현재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과거 사노맹 가입자들은 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보법상 유죄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8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민형기)는 사노맹 가입·활동 혐의로 구속된 강희원, 한봉수, 유영욱씨에게 모두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노맹은 이미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단체이다. 현재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등 아직도 사상적 표류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피고들도 사상적 표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노맹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것은 아니며,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을 오랜 시일이 지난 시점에서 과거에 가입사실을 이유로 구금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단이 든다”며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

<근 조>

대구공전 박동학씨의
명복을 빕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숙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기무사, 언론기관에 불법 압력행사

주간 시사뉴스, 임재문사령관 비리 보도 예정

법적으로 민간사찰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국군기무사가 내부비리를 고발한 신문에 불법적인 사찰과 압력을 행사해 문제가 되고 있다.

주간 시사뉴스(발행인 강신환)는 지난 2월29일자 시사뉴스 77호에서 '문민시대

기무사 내부 인권탄압 여 전'이라는 기사를 보도한 이후, 두달여 동안 후속기사를 보도하지 말라는 압력과 함께 최근엔 사무실과 발행인 주택을 감시당하는 등 국기관인 기무사로부터 불법적인 민간사찰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사뉴스는 77호에서 기무사가 폭력성과 결탁, 이권에 개입한 사실 및 간부 숙종의 의혹 등을 보도한 데 이어, 후속기사로 임재문 기무사령관의 비리를 보도할 예정이었다.

이 회사 직원 배지훈(24)씨에 따르면, 77호가 배포된 2월14일 오후 기무사 언론과장 김성룡중령과 김중원준위가 본사로 찾아와 "시사뉴스를 다 걷어버릴 수 있다"고 발언한 데 이어, 15일엔 주상식 검찰실장과 조현규대령 등 3명이 회사를 방문, "후속기사를 절대 보도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또한, 2월27일 이성범참모장 등이 강신환 발행인을 만나 "조현규 등은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테니 후속기사는 없던 걸로 하자"며 회유하는 등 기무사의 노력이 집요했음이 드러났다.

최근 상황에 대해, 배씨는 "기무사요원 20여명이 4월 30일부터 5월6일까지 사무실 주변을 감시하고 발행인의 차량을 미행했으며, 5월1일엔 서초경찰서 형사라고

칭하는 자들이 도박단 신고가 들어왔다며 본사에 침입. 발행인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갔다"고 전했다.

이같은 시사뉴스에 대한 기무사의 부당한 압력행사는 각 언론사 기자들에 의해 취재가 됐지만 현재까지 보도되지 않고 있다.

기무사는 4월24일 박효준 준장과 조원규대령을 통해 발행인과 이용만사회부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울지검에 고소했으며, 서울지검은 이들에게 사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시사뉴스는 다음호에서 '임재문 사령관의 충격적 비리'라는 기사를 보도하기로 했으며, '기무사내 인권 탄압의 현장들' '복마전속 고문으로 병들어가는 기무부대원'이라는 후속기사도 연재할 예정이다.

한국합섬사태 강경대응 민주노총등 23개 단체

민주노총 등 23개 노동·사회단체는 9일 대표자회의를 열어 한국합섬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구속자 및 연행된 조합원 석방 △박동식 한국합섬 사장 구속 △구미 경찰서장 사퇴 △정부의 노동자 탄압 중지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11일 탐골공원에서 규탄집회를 열기로 했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아래 지로로 납부를

지로번호: 7618848

“학생과장이 불 붙었다”

대구공전 분신 박동학씨, 사망전 발언 파장

지난 6일 동아리연합회 인정을 요구하며 분신한 대구공업전문대(이사장 김경희, 대구공전) 박동학(92학번 전자계산학과)씨가 8일 오후5시10분경 사망했다.

한편, 박씨의 분신 과정에서 “학생과장이 불붙었다”는 주장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박씨가 분신후 첫번째로 간 대구동산병원에서 박씨의 누나와 의사 그리고 김갑준학생과장이 지켜보는 데서 박씨는 '위험을 위해 신나는 스스로 뿌렸지만 불은 학생과장이 붙었다'고 말해 누나와 학생과장이 그자리에서 실랑이를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영남대병원으로 옮긴 후 아버지 박규순(61, 농업)씨에게도 같은 말을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죽음을 앞두고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내 아들을 죽인 김갑준학생과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아들이 죽음으로 지켰던 동아리연합회 활동의 보장 등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장례를 치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측에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가끔 보직교수들이 영안실을 방문해 '장례비를 최대한 줄 것'이라며 돈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여 가족들에게 항의를 받기도 했다.

현재 박씨의 시신은 영남대학교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다. 대구경북지역총학생연합회 소속 학생 2백여명이 영안실을 지키며 오늘부터 매일 오후7시 영안실 앞에서 추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불순세력 득세” 이유 중형 구형

검찰, 범민련 중앙간부들에

지난해 11월29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오던 조국통일범민족연합(상임의장 강희남, 범민련) 강희남(76)씨등 간부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서울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7년에 자격정지7년을 구형하는 등 대부분 중형을 선고해 국보법 위반자들에게는 나이가 70세를 넘는 고령이라는 인간적인 배려가 전혀 있을 수 없음을 실감하게 했다.

검찰측(담당검사 강익중)은 논고를 통해 “간부들이 대부분 구속된 지금도 범민련 잔여세력들이 존재하여 청년학생들을 현혹시킨다”며 “또다시 이들을 풀어 준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불순세력들이 규합돼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중형이유를 밝혔다.

구형량이 발표되자 아버지일을 맞아 방청을 온 가족들은 울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또한 범민련 간부들에게 젊은 검사가 구형을 하면서 반말을 일삼는 등 피고인에 대한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 강씨는 “아무리 검사라고 해도 민족의 동일을 위해 노력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대하는 현실이 비참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씨와 이천재(66·범민련 상임부의장)씨 2명만 회후진술이 진행되었고 오후 4시 31호 법정에서 이종린(75·상임부의장)씨등 나머지 간부들의 회후진술이 있다.

<검찰 구형량>
이천재 징역7년, 자격정지7년/이종린(75·상임부의장) 징역7년, 자격정지7년/김영옥(62·중앙위원) 징역6년, 자격정지6년/주명순(73·서

울시연합 부의장) 징역6년, 자격정지6년/박석률(49·전 실행위원) 징역5년, 자격정지5년/홍세표(59·서울시연합 부의장) 징역4년, 자격정지4년

대구등 집행유예 석방 한편 대구·부산·전북 등에서 재판을 받은 범민련 간부들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집행유예 석방자 명단>
류근삼(56, 대구 경북 연합 의장) 징역2년, 집유4년/나경일(68, 대구경북연합(대경) 부의장) 징역1년6월, 집유3년/권오봉(71, 서울시연합, 민자통) 징역 2년6월, 집유4년/이태환(73, 대경 상임고문) 징역2년6월, 집유4년/김병길(64, 대경 회원) 징역4년/김동순(34, 대경 사무국장) 징역1년6월 집유3년/한기명(68, 대경 부의장) 징역1년6월 집유3년/서상권(68, 부산연합 의장) 징역1년 집유3년/유혁(74, 부산연합 고문) 징역1년 집유2년/김삼관(65, 민자통 부산경남 의장) 징역8월 집유2년/김형근(38, 전북연합 집행위원장) 징역1년6월 집유3년

LG 해고자 집회 계속

LG그룹 해고노동자 복직실천위원회(위원장 성한기, 해고복지위원회)가 계속해서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9일, LG전선 군포공장 정문앞에서 열린 해고노동자 복직추구 집회에는 장건(LG 노조위원장)씨등 50여명의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이날 집회에서 성한기씨는 “LG그룹이 정도경영을 실천하면서 인도적 차원의 복직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

기만행위”라고 비난하며 “남해안 기름 유출과 유기 용제 중독 등 총체적 부실 기업인 LG그룹은 개인휴대통신 사업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해고복지위원회는 지난 1일 본사앞 집회를 시작으로 오늘은 오전엔 군포공장에 서, 오후엔 여의도 본사앞 집회를 갖는다. 또, 11일에는 한남동 구분무 회장집 앞에서 추구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상희 할머니 석방추구 여성의전화 회원들 시위

9일 한국여성의전화(회장 신혜수) 회원들은 광명경찰

서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이상희 할머니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고 경찰의 직무유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참석자들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신고를 해도 경찰이 능동출동을 하거나, 가해자 격리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며 경찰의 직무유기를 강하게 규탄했다. 또한, 신혜수회장은 “경찰서장과 면담,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경찰서장의 사과를 받아냈다.

한편 지난 2일 딸을 상습폭행하는 동거인을 보다 못해 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이상희 할머니는 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됐다.

행사와동정

- 미군 공여지 실태 공개를 촉구하는 국방부 항의시위
 - 5월10일(금) 낮12시 · 국방부 앞
 - 주최: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744-1211)
- 참여사회연구소 1차 창립 심포지엄 : 한국 시민사회와 참여민주주의
 - 5월11일(토) 오후3시-7시 · 서울 변호사회 서초별관
 - 주최:참여사회연구소(796-9581)
- 한국산업사회학회 정기학술대회 : 대학과 사회
 - 5월11일(토) 오전9시30분 · 이화여대 인문대 교수연구관
 - 주최:한국산업사회학회(720-4725)
- 가족과 성 상담소 개소 1주년 기념 토론회 : 청소년의 성의식과 성문화
 - 5월11일(토) 오후3시-5시 · 종로성당
 - 주최: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646-8858)
- 미군 공여지 실태 공개와 한미행정협정 전면개정을 위한 국민대회
 - 5월11일(토) 오후2시 · 종묘 공원
 - 주최: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744-1211)
- '정보통신 주권 수호와 재벌독점 방지를 위한 1차 범국민 서명운동'
 - 5월11일(토) 오후2시 · 광화문 동화빌딩등 전국 330곳
 - 주최:정보통신 주권 수호와 재벌독점 방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766-4020)
- 서울민주시민연합 춘계 회원의 날
 - 5월12일(일) 오전10-오후5시 · 보라매공원
 - 주최:서울민주시민연합(392-5321)
- 총선평가 토론회 : 개혁세력의 정치진출 및 시민·사회 운동의 정치활동 평가
 - 5월13일(월) 오후7시 · 참여연대 회의실
 - 주최: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796-8364)
- 제4회 시민인권상 수상후보추천 받아
 - 서울지방법변호사회(회장 김성기)는 7월31일까지 인권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에 공이 많은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상하는 시민인권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522-9100)

<근 조>

대구공전 박동학씨의 명복을 빕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매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원진 노조위원장 취업시킬 수 없다 기능사 자격증 따면 무조건 취업은 거짓말

원진레이온이 폐업한지 3년이 다되어가도록 정부가 6백명의 실직자를 정부투자기관에 재취업시키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는 커녕 도시철도공사 면접시험에서 태도를 문제삼아 불합격처리해 비난을 사고 있다.

가죽생계를 꾸리기 위해 일자리를 얻겠다는 작정으로 기능사 자격증을 따 박인도(39)씨의 작은 꿈이 어이없게도 '면접태도 불량'이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만 것이다. 93년 7월 폐업과 함께 정부투자기관 재취업과 산재 종합병원 설립에 노·사·정 합의했다. 정부는 제2기 지하철공사 인력채용을 우선채용하겠다는 발표를 했으나 다시 '섬유업계에 종사했던 근로자들을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지하철에 투입할 경우 업무효율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약속을 반복했다. 그 뒤 94년 12월 "기능사 자격증만 있으면 조건없이 채용하겠다"고 말을 바꾸었다. 그러나 또다시 박씨가 면접에서 떨어지자 "그런 약속

을 한 바 없다"며 발뺌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 박씨를 비롯한 27명의 원진레이온 근로자들은 정부의 말을 칠석같이 믿고 월평균 5만원의 생활보조금에 경기도 연천직업훈련소에 3-6개월간 하루 12시간의 고된 직업훈련을 받았다. 박씨 역시 연천직업훈련소에서 전기용접 기술을 배워 자격증을 따 뒤 95년 6월 12일 도시철도공사에 접수했다.

불합격처리 원인에 대해 박인도씨는 도시철도공사 인사위원회로부터 "면접태도가 안좋다"는 얘기를 들었고, 재차 그 이유를 캐는 과정에서 "일할 자세가 안되어 있다"는 막연한 이유를 알아냈을 뿐이다. 당시 면접을 본 원진노동자로는 유일하게 박씨만이 탈락되었다. 원진레이온비상대책위(현 위원장 배기수) 전 위원장을 지낸 박인도씨는 "아무래도 노조 간부를 지낸 것이 문제가 된 듯하다"고 말했다. 7일 김영삼대통령 앞에서 탄원서를 보낸 그는

"혼자 탈락돼 싸우는데 어려움이 크지만 강력하게 싸워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94년 11명, 95년 20명, 96년 23명 등 4월 현재 원진레이온 노동자출신 중 54명이 도시철도공사에 취업했으나 박씨를 비롯한 2백여명의 고령자들이 지하철공사, 아파트공사 현장에서 날땀팔이 생활을 하고 있다.

"야, 이 미친년아" 욕설, 구타 경원대교수, 협상요구 학부모 폭행

증처럼 사태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경원대(총장 김원섭)에서, 원만한 사태해결을 호소하던 학부모가 교수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학생회측에 따르면 10일 낮 12시경 학부모 권숙자씨 등 4인은 학교 중앙도서관 앞에서 학생처장 이석규교수를 만나 학생들과의 협상에 임할 것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이석규 학생처장은 "학생들의 행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협상할 수 없다"며 "지금도 학생 1백명은 더 고소할 수 있지만 참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권씨가 "경찰에서는 학교측이 경찰 투입을 요청했다고 하는데"라고 하는 순간, 학생처장이 "야, 이 미친년아"라는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전학련 3명 추가구속 군복무자 연행정보

지난 7, 8일 전국학생정치연합(전학련)의 손영우씨등 6명이 경찰에 연행된 이어, 같은 시각 김홍석(명지대 89), 빈순아(경희대 92), 시영주(덕성여대 91)씨등 3명이 더 연행됐음이 확인됐다. 또한 전학련 관계자에 따르면, 군복무중이던 김일영(서울대 89)씨와 박종연(상지대 90)씨가 각각 기무사로 연행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이를 확인중에 있다고 한다. 이로써 현재 구속자는 모두 9명으로 확인되었다.

가슴부위를 수차례 구타하고 팔목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했다는 것이다. 이날 사건은 학교측에서 9일 예정되어 있던 협상을 당일에 가시여 "학생들이 요구하는 공개사과와 총장 및 학생처장의 사퇴요구를 철회하고 본관 짐거를 풀지 않으면 협상하지 않겠다"며 거부하자, 이튿날 학부모 4명이 이에 항의하기 위해 학교측을 찾아갔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조지영(관광경영 94)씨에 따르면, 학생처장은 경원대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수차례 학생들을 폭행했으며, 교내 영상사업단이 비디오로 구다장면등을 촬영했다고 한다. 조씨는 현재 폭행을 당한 학생들의 증언을 청취, 관련 자료를 만들 예정이라고 한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아래 지로로 납부를

지로번호: 7618848

노사개혁위에 우려 반, 기대 반 "노동자입장 근거제시 노력해야"

8일 발표된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중, 노사개혁위원회) 위원들에 대해 각 노동·사회단체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9일 전국연합은 성명서에서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노사관계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며 형식적인 인선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부문노조 대표자회의」는 "정부는 노동운동 탄압을 정당화시켜주는 도구로 전락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노사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김금수(한겨레신문 논설위원)씨는 "노·사가 함께 모인 곳에서 노동쪽의 입장을 100%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사용자 측이 노동자의 기본적 요구에 반하는 주장을 막아내고 설득하는 장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위원들 개개인에 대해 실망이나 기대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자의 입장이 최대한 발휘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저 목소리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입장에 대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사개혁위원회는 노사관계의 기본정책 및 법령과 제도, 관행, 행정체신 등에 관한 사항을 연구·심의하며,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영흥도주민 3명 구속

9일 낮 12시 '영흥도 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투쟁위원회'(투쟁위원회) 대표 문병찬씨와 영흥도 주민 2명이 업무방해와 집시법위반으로 인천 중부경찰서에 구속됐다. 이날 구속은 그간 5차례에 걸친 소환 끝에 문씨등 3명이 자진출두하자마자 이뤄진 것이다. 이에 조강화(인천연합 정책국장)씨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위험이 없는 주민을 구속한 것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주민들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경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10일 인천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호인수)등 5개 인천환경·사회단체는 구속자 석방과 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영흥도 화력발전소의 건설을 막기 위해 인천시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한진측은 영흥도를 선택한 이유로 "수도권과 가깝고 유연탄을 들여오기 위한 지리적 여건이 좋으며, 대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어 대기오염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한진은 지난 91년부

터 전체 전력량의 35%를 생산할 수 있는 12개의 화력발전소 건설지로 영흥도를 지목해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한 뒤, 지난해 11월 착공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인천시에 냈으나 주민과 시의회의 반대로 아직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 인권간행물 ●

- 「통신」 98호-전국연합(747-4364)
· 주요내용:PCS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잡음/서울대법안 제정 반대 움직임/체르노빌 핵참사 10주년 심포지엄/노사개혁 위원회의 향후 등. 60쪽.
- 「평등」 3월호-고용평등추진본부(277-7883)
· 주요내용:불평등 사례고발 접수등 본부소식/여성취업에는 비상구가 없다/채용과 승진에 있어서의 남녀차별/주말드라마에 나타난 왜곡된 여성들의 모습. 20쪽.
- 「중등 우리교육」 5월호-(주)우리교육(730-1521)
· 주요내용:학교현장의 학생인권실태 "학생도 권리의 주체다"/정말 듣기 싫은 선생님 말씀 13가지/성폭행 피해 교사의 호소문 등. 199쪽
- 「함께걸음」 4월호-장애우연구(521-5364)
· 주요내용:베트남의 장애인/특례입학 장애대학생 실태조사 보고서/복지에 대한 철학이 없는 정치권, 공약만 남발/장애아 입양가정에 양육보조금 지급 등. 85쪽
- 「국제앰네스티」 5.6월호-AI 한국지부
· 주요내용:멕시코의 인권상황 '폭력과 면책'고문증식을 위한 유엔의 역할은?/'중국'의 인권/사형이 특별한 억지책인가?/남·북한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관심 등. 27쪽
- 「우리네 아이들」 5월호-지탁연(275-8505)
· 주요내용:보육사업과 프로정신/어린이에게도 인권은 있다/보육사업 활성화 제안서/보육계 풍향 등. 83쪽.
- 「신문로 포럼」 8월호-신문로 포럼(7330969)
· 주요내용:통일할로, 북한동포 돕기로 열거/노동법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남북한 농업발전의 대안 등.53쪽.
- 「사랑과 일터」 5월호-우리일터기획(706-8637)
· 주요내용:사회개혁투쟁, 진단과 이후 방향/노동자와 동성애/노동시간과 중대 재해를 국제비교/장애인 노조의 연대/노조 지역조직들의 체자리 찾기 등. 176쪽
- 「민족예술」 5월호-민예총(743-5872)
· 주요내용:제주 4·3미술제/광주항쟁과 민족예술/항쟁의 이념적 계승의 형상화 등. 92쪽
- 「함께가는여성」 5월호-한국여성민우회(269-5763)
· 주요내용:방송과 미인대회, 방송이 앞장선 신데렐라 만들기/15대 총선평가와 여성운동의 과제/가사노동가치와 물문제의 여론화를 위해 힘쓴 90, 91년 등. 20쪽
- 「여성노동시장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여성민우회
· 주요내용:유연성시대의 한국의 여성노동시장/유연화와 여성노동/신인력정책과 생산직여성/여성노동정책과 사무전문직 여성 등. 114쪽.
- 「성폭력특별법 적용실태와 개정방안」-성폭력상담소
· 주요내용:성폭력특별법 적용실태와 개정방안/94년 4월을 전후한 상담사례비교/특별법에 새롭게 규정된 성폭력 유형들/성폭력피해아동의 정신감정에서 제기되는 정신과적 문제점 등. 95쪽.
- 「고통권 신장을 위한 한·일 국제심포지엄」-녹색고통운동(720-7879)
· 주요내용:현대 일본의 교통문제/한국의 자동차화 과정에 따른 사회적 폐해/교통권 회복을 위한 모색/교통권에 관한 법률 문제/교통과 기본적인 인권 등. 133쪽.

<이달의 주제-노동권>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을 위태롭게 한다. -ILO 제26차(44년) 총회, 필라델피아 선언중에서-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한국합섬 노·사 협상제기

협상결과에 따라 텐트농성등 집회전개

구미 한국합섬(대표 박동식)은 12일부터 김관용구미 시장을 비롯한 구미지역의 기관장 및 노조(위원장 황영호) 대표등과 협상에 들어갔다.

현재 회사측과 노조의 이견으로 타결은 보지 못했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낙관하

는 표정이다. 김익기(26, 대의원)씨는 "회사가 갑자기 협상을 제기한 것은 지난 11일에 구미역 광장과 서울역의 탑골공원 집회의 영향일 것"이라며 "그동안 민주노조를 갖겠다는 신념 하나로 열심히 싸웠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 양동민)가 올초부터 빈민권 관련 구속인사석방요청서명운동을 통하여 양심적인 일본인들이 조직을 결성하기로 합의하는등,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2명 추가 확인
전학련 11명 구속

전국학생정치연합(전학련)과 관련해 박노현(동국대 91)씨와 서정보(성균관대 92)씨가 특전사 사령부에 연행된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앞서 연행된 김일영(서울대 89)씨와 박종연(상지대 90)씨 역시 13일 확인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학련 관계자는 말했다.

이로써 현재 전학련 관련 구속자는 11명으로 늘어났다 <하루소식 9, 11일자 참조>

직장내 성희롱교육
14일, 현대전자 강연

한국성폭력상담소 최영애 소장은 14일 현대전자 사원들을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 방지'에 대한 강의를 한다. 최소장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노력이 여성들의 몫일 수만은 없다"며 "이번 자리는 일선 상담소와 생산현장이 함께 성희롱 예방을 위한 실천의 장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모금, 홍보활동 벌여
일본 범민련구원회

10일 「범민련 관련자를 구원하는 회」(사무국장 고치 도무, 범민련구원회)는 범민련 구속자들의 석방을 위해 국제기구에 호소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과 모금 운동 등을 적극 벌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범민련구원회는 지난 9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국회위원, 노·조·민·주·인권단체 등 각계 대표 1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결성되었다. 이는 범민련 일본지역본부(의

-자료(판결문 발췌)-

서울고법 국보법 동조죄등 무죄판결

지난 9일 서울 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성)는 국보법 규정중 반국가단체 활동 동조죄와 이적표현물 취득죄에 대한 적용범위를 엄격히 해석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문을 발췌해 실는다.

가. 생략

나. 원심판시 제2항의 반국가단체활동 동조의 점

(1) 피고인이 94년 2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4월 하순경까지 5회에 걸쳐 공소의 문순덕, 박진기(가명), 김란희(가명 김성희), 강원영(가명)등과 함께 살수입개방문제를 토론히어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가)생략

(나) 첫째, 살수입개방문제를 비롯한 북한의 주장 내지 활동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에 관하여 공소장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또 그 내용을 찾아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며 (중략) 문순덕의 발언내용에 피고인이 설사 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북한의 반국가적 활동에 동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둘째, (중략) 위 문순덕의 발언내용이 설사 북한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단순히 이를 토론한 것만 가지고는 북한의 반국가적 활동에 피고인이 동조하였다고 할 수 없다.

셋째, 국보법 제7조 제1항의 이른바 표현범죄행위는 반국가활동의 전파 내지 확산의 가능성을 야기함을 그 위험의 본질로 한다. (중략) 이 사건에서 보면 원심의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토론참가자들 중에 동맹(준)의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중략) 이와같이 이미 이적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의 죄를 범하고 있는 그 단계의 조직원들끼리 모여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내용의 토론을 전개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전파할 가능성이 새로이 야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중략)

다. 동조목적의 이적표현물 취득의 점
피고인이 94.11.13. 14:00경 휘경동 소재 경희대학교 운동장에서 '인민과 함께'라는 이적표현물을 북한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1) 생략

(2) 첫째, 국보법 제7조 제5항의 동조목적의 이적표현물 취득죄는 이른바 목적범이므로 행위자에게 표현물의 이적성 및 취득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소위 고의) 이외에 제1항 소정의 이적행위로서의 동조행위를 함에 대한 의욕 내지 인식이 있음을 요한다. (중략) 따라서 피고인이 위 '인민과 함께'라는 표현물을 취득할 당시 피고인에게 북한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이 있었음은 검사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5,7,8,9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표현물을 사용하여 북한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중략)

주/간/인/권/호/름

(96년5월6일부터 5월12일까지)

<5월6일>

정부 '21세기 한국경제의 비전과 발전전략' 발표, 의사1인당 인구수는 현재 9백62명에서 7백82명, 초등학교 교사1인당 수는 28.2명에서 25명으로, 조세부담률은 20.7%에서 24.3%로 증가/한국합섬노조원 45명 업무방해와 폭력등 혐의로 긴급구속/철도청, 10일부터 장애인보호자도 지하철요금 면제키로/대구공업전문대 동아리연합회장 박동하(22)씨 동아리연합회 인정 요구하며 분신, 8일 사망/5일 새벽1시경 경기도 안산시 주택가에서 강순덕(34)씨 30대 남자에게 폭행당하고 주변사람들에게 구조 요청했으나 주민들 알고도 목살, 숨겨/광주시 동구 신용기(46)씨 베트남전쟁 유류증으로 비관 자살

<5월7일>

전국학생정치연합 11명 구속/국무총리 주제로 치안관계 장관회의 열어 이후 발생하는 집단민원인의 불법시위와 학생 및 재야단체운동들의 과격시위에 대해 원천봉쇄등 강력 대처키로/병역법 개정안 통해 공의근무요원의 순직등과 관련 보상수준을 군경수준으로 상향조정키로/경찰청, 어린이와 신체장애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이 찾길을 벗어날 때까지 차량 무조건 정지토록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마련 10일째 입법예고키로/유엔의 옛 유고 전범재판소 첫공개

<5월8일>

독일 북서부 농촌지역 고준위 핵폐기물 반입을 둘러싸고 반핵시위대와 경찰 충돌

<5월9일>

광주시 북구청 5·18 기념행사기간중 공식적으로 조기 개방하기로/캐나다 하원 동성애자 차별금지법 통과

<5월10일>

전두환·노태우씨등 12명 서울지법에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신청/종로구, 노인이나 장애인등의 민원서류를 대신 발급해 줌으로 전달해주는 '공무원 풀 제도' 시행키로

<5월12일>

서울시교육청 올3월말 현재 서울시내 초중학생 가운데 도시락 못먹는 학생 3천3백18명으로 지난해 3천58명에 비해 7.8% 증가/일본 문부성 전후보상과 군대위안부 문제를 다룬 중학교용 교과서의 검정과정에서 전후보상은 끝났다는 견해를 적어넣도록 중용한 사실 밝혀져

<해설>=====

문민정부가 화려한 외투를 벗어버리고 본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후 발생하는 집단민원인 및 학생·재야단체의 불법·과격시위에 대해 강력 대처키로 한다는 내용의 정부발표는 우리를 경악케 했다. 오래전부터 많은 이들이 집회·결사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등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압박당하고 있다고 호소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맞서 한손에는 '노사개혁위원회'등의 당근을 내밀며 한손에는 채찍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선전포고에 이어 터진 전학련사건이나 그 직전의 한국합섬사건 등은 문민정부가 보여준 실체이다.

<이달의 주제-노동권>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빈영을 위태롭게 한다.
-ILO 제26차(44년) 총회, 필라델피아 선언중에서-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매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기무사 비리고발 언론인 연락두절 시사뉴스, 기무사령관 비리 전면 고발

국군기무사 내부비리를 고발한 시사뉴스 발행인 강신환씨와 그의 처남 정덕우씨가 13일 오후부터 연락이 두절돼 기무사로 연행된 것이 아닌가 우려를 사고 있다<하루소식 5월10일자 참조>. 정씨 친척에 따르면 정씨가 13일 오후2시경 강신환씨를 만나러 나간 뒤, 두사람 모두 연락이 끊겼다는 것이다. 이에 가족들은 14일 오전 경찰에 실종신고를 내고, 가슴을 졸이며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조원규대령으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용만 사회부장도 몸을 숨기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시사뉴스는 후속기사를 연재하지 말라는 기무사측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82호(5월30일자) "사령관 부정부패로 기무사가 휘청인다!"는 제목아래 임재문 기무사령관의 비리보도를 비롯해 그간 시사뉴스에 대한 기무사의 압력 등을 전면 게재했다. 시사뉴스는 13일 인쇄를 마쳤고, 15일 가판된다.

이종원차장에 따르면 한겨레신문 5월11일(토)자 2면에 5단으로 시사뉴스 제82호 홍보광고를 실고자 했으나 1판에만 실린 채 2판부터는 서울판에서 전면 삭제되었다고 한다. 이차장은 "한겨레 편집국의 누가 막았는지 다 알고있다. 한겨레마저 침묵을 지키는 커녕 이번 사태를 방패하고 있다"며 언론의 각성을 촉구했다.

한겨레성민우회(공동대표 정강자)는 결혼을 앞둔 미혼남녀들에게 평등한 결혼생활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예비 신랑 신부학교'를 개설했다. 오는 27일부터 6월5일까지 5회(월, 수, 금)로 신당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되며, 시간은 오후7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참가비 3만5천원. 교육내용으로는 △아름다운 연애, 평등한 결혼 △예비부부가 알아야 할 법률 지식 △혼례의 절차와 준비 등이다. 문의: 277-7883~4

한국합섬, 고소·고발취하등 잠정합의 분신노동자 보상타결후 발효

12일 한국합섬 노·사 양측은 10개항의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 합의안은 분신한 이진권, 서상준씨의 가족들과의 보상문제가 타결되는 즉시 발효시킴으로 결정되며, 이후 양자간 합의서 조인식을 마친 뒤 48시간 후에 조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날 교섭에서 회사측은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노조측에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으며, 형사처벌되는 노조원들이 복귀할 경우 이들을 원래의 근무부서로 복직시킬 것을 합의했다. 또한, 분신자 2명에 대한 치료를 일체 회사에서 부담하며, 위로금 지급 문제는 가족대표와 별도 협의하기로 했다. 노조측은 회사측에서 요구한 황영호노조위원장의 퇴진을 받아들인 것임이 96년 임금 및 계수당을 동종업체 최고수준으로 하고, 현재 2인으로 되어 있는 노조전임자를 4인으로 늘리는 것에 합의하는 등 대체로 만족스러운 합의에 이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인규 노조사무장은 "노조측의 요구사항이 많이 받아들여져 노동자들도 대부분 만족스럽게 교섭결과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철호(31·전국노련)씨는 "현재 회사측과 합의는 이뤄진 상황이나, 두 사람의 분신에 대한 정부측 사과와 책임자 처벌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며 한국합섬 문제가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님을 지적했다.

○ 주요 공판 안내 ○

- 5월15일(수)
오민규외6인,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311호 선고 권순미,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425호 선고 민병래,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425호 선고
- 5월16일(목)
김형욱, 반국가행위처벌에관한 특별조치법, 오후2시, 합의4부, 416호 속행
- 5월17일(금)
우회정,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3부, 311호 신진 김형철, 국보법, 오후2시, 합의23부, 311호 신진 박충렬, 국보법, 오후2시, 단독9부, 317호 속행 양규현, 일반교통방해등, 오후2시, 단독4부, 421호 속행 유용기, 국보법, 오전10시, 합의1부, 416호 속행
- 이상 서울지법 형사국 *고예순(범민련), 오전10시, 서울민사지법 562호

계속된 노조의견 외면

현중, 산재문제에 대대적으로 투자키로

현대중공업이 산재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노조간부에 대해 고소·고발한 상태에서 13일 산재예방을 위해 오는 2천년까지 2천1백여억 원을 집중 투자하겠다는 모순된 발표를 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지난 6월에는 조성동(44)씨의 사망이후 중대재해를 우려해 작업장 출입 금지한 김임식 위원장등 노조간부 16명을 울산동부경찰서에 고소·고발했다.

이에 대해 문대성(노조 편 집실장)씨는 "노조의 산재예방 요구에 고소·고발로 맞서더니 노조측과 아무런 대화 없이 언론에 계획을 발표했다"고 비난하며 "이러한 투자계획이 노사의 화합으로 발표됐더라면 더욱 좋지않았나"며 안타까워했다.

5·18 16주기를 앞두고, 미국의 광주학살개입을 규탄하는 집회와 공청회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

'미국범죄 공론화해야'

미국제소 청원운동 전개

5·18 16주기를 앞두고, 미국의 광주학살개입을 규탄하는 집회와 공청회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

문병간 사람들, 병원에서 쫓겨나 경찰·병원직원, 문병인 폭행

지난 11일 저녁 한강성심병원으로 한국합섬 노동자 이진권씨등을 문병갔던 노동자 20여명이 경찰과 병원 직원에 의해 쫓겨나고, 그 과정에서 남일상(56·노총 노사대책국장)씨가 병원직원의 폭행으로 전치 6주의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남씨에 따르면, 이날 병원엔 영등포경찰서장을 비롯한 전경들이 들어와 병원직원들과 함께 문병단을 가로막았으며, 병원내에 문병인들을 위한 텐트설치를 요청하는 남씨등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왼손 약지 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당했다는 것이다.

또한, 남씨는 "엑스레이 검사결과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의사 진단을 받았으나, 병원에서 입원실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수속을 해주지 않아 이틀 뒤에나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병원측은 남씨의 치료비를 부담하기로 했으며, 남씨는 "폭행당사자를 형사고발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NGO 공동대표 방한 김덕룡장관 만나 홍보요청

세계주거회의(Habitat II, 주거회의) 개최를 앞두고 13일, 1박2일 일정으로 세계주거회의 NGO(민간단체) 공동대표 피데스 바가사오(Fides Bagasao)씨가 방한했다.

이번 피데스씨의 방한은 주거회의의 중요성과 민간단체들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14일 피데스씨는 『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의 권태준대표와 최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씨 등과 김덕룡정무제1장관을 만났다. 이날 통역

을 담당했던 민동해씨에 의하면 "피데스씨는 민간단체의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김장관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피데스씨는 현재 필리핀의 '도시민민연합'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빈민지역주민과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아래 지로로 납부를
지로번호: 7618848

<이달의 주제-노동권>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을 위태롭게 한다.
-ILO 제26차(44년) 총회,
필라델피아 선언중에서-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분신조장 의혹 학교측, 되레 유가족 고발 대구공전 사태, 언론도 학교측 입장만 대변

동아리연합회 자치권 인정을 요구하다 8일 숨진 박동하(24·대구공전 전산학과 92)씨의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학교측이 유가족 및 대책위 3명을 폭행·감금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해 문제가 되고 있다.

대구공전 노장한 학장 등 5명의 교수는 14일 대구 달서구 경찰서에 박씨의 부모와 대책위 조광진(36·대경연합 사무국장)씨 등 3명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유가족등 맞고소 대응방침에 「고 박동하 열사친상규명과 학생자치권 확보를 위한 시민학생대책위원회」(대책위)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측은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밝힐 것 △학교측은 유가족 앞에 사죄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등을 촉구했다. 또한 조광진씨는 “당시 나는 그날 현장에도 없었다. 고발자들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할 것”이라고 분개했다. 박씨의 부모 역시 명예훼손 혐의로 이들을 고소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대책위는 언론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짐묵으로 일관하다가 학교측의 입장만 듣고 왜곡되게 보도한 부분을 지적하고, 정확한 조사와 확인작업후 기사를 게재할 것을 언론에 요청했다.

대학연합회 자치권 인정을 요구하다 8일 숨진 박동하(24·대구공전 전산학과 92)씨의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학교측이 유가족 및 대책위 3명을 폭행·감금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날 오후 5시30분경 학생과장이 학장실로 왔으나 미안한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고, 이에 분개한 박씨의 부모측이 먹살을 잡고 항의했다는 것이다. 결국 학생과장은 무릎을 꿇고 “이번 사건의 책임지도를 하고 있는 학생과장으로서 불찰과 부도덕함을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유가족의 요구가 있을시 항시 찾아 뵙고 깊은 사죄를 드리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썼다. 이 사과문 작성과정에서 보직교수들은 학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쓰라고 종용했고, 이에 가족들이 보직교수를 밖으로 내보냈다.

학생과장 사과문 작성 그뒤 가족들은 학생과장의 사과문에 대해 학장이 책임질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를 써줄 것을 요구했으나, 결국 학장은 각서를 거부하고 외부로 전화를 걸어 교직원 50여명이 학장실을 들이닥쳐 학장, 학생과장과 사과문을 가지고 달아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언론을 통해 11일 오후5시 20분부터 3시간동안 학생과장과 함께 학장실에 감금당한 채 학생과 유족대표로부터 협박과 폭행을 당했다는 학교측 입장만이 보도돼 문제가 되고 있다.

타 전문대도 학생자치 위협 그 뒤 14일 병원을 찾은 학장 및 보직교수 30여명은 사과문을 요구하는 가족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러느냐”고 말해 실개를 벌이다가 달아났다. 미처 영안실을 빠져나가지 못한 관리과장에게 유가족이 학교당국의 책임을 묻자 “왜 나한테 이러느냐? 감금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며 말다툼을 벌였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꼭 납부를
지르실지를 분실하신 독자께서도 전국 어느 은행이든지 지로 창구에서 아래의 지로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로번호: 7618848

을 다른 전문대들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실전의 경우 최근 학교측으로부터 교박동하씨의 분향소를 설치할 경우 동아리를 해체시키겠다는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한다.

전학련, 구속·수배자 22명 경찰, 이적단체 혐의 적용

경찰청은 16일 전국학생정치연합(전학련) 관련자 22명을 적발했으며, 그중 손영우(24·동국대졸)씨 등 9명을 구속하고 엄형식(22·외대 불어 4년)씨 등 9명을 수배했다고 밝혔다. 또한, 군복무중인 4명은 국군기무사에서 구속수사중인 것으로 발표했다<하루소식 14일자 참조>

경찰은 전학련이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한 이적단체를 결성하고 민주투쟁을 선동해 왔으며, 관련자들에게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결성 및 가입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경찰의 발표내용과 관련, 전학련의 한 관계자는 “전학련은 정치적으로 이용당했다”며 “폭넓은 사상이 교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개활동을 해오던 우리들 이적단체로 둔갑시켜 처벌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합섬 사태, 끝나지 않았다” 정부책임자 처벌·구속노동자 석방 필요

한국합섬 사태가 파업 35일만에 타결되었으나, 대책위는 정부측 관련자 처벌과 구속자 석방을 촉구했다.

파업타결과 함께 15일 해소된 한국합섬투쟁대책위는 “한국합섬 사태가 회사와의 협상으로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며,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쟁의발생신고를 반려함으로써 한국합섬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경북지방노동위 책임자의 처벌 △노동자에 대한 과잉진압으로 이진권 동지와 서상준 동지를 본신으로 내몰고 분신자를 15분간 감금, 폭행한 경찰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했다. 아울러 한국합섬 사태가 사용자의 노조탄압

과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악화된 만큼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노동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승중씨 노동자 천시 발언 민주당총, 사과 요구 성명

현승중 노사관계개혁위원장의 노동자 비하발언과 관련해 민주당총은 14일 성명을 발표, 현위원장의 전근대적 노동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현위원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교사들의 단결권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교사는 하

경찰 소극 대응이 가정폭력 심화시켜 가정폭력방지법제정특위 긴급공청회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여성의 전화등은 15일 「가정폭력방지법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결성한데 이어 16일 오후2시 종로성당에서 1백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이상희 할머니 석방을 위한 긴급공청회 및 거리행진을 가졌다.

이날 긴급공청회는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처리현실 및 대응방안과 이를 방치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집중 논의되었다. 김혜선(한국여성의 전화 상담국장)씨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살인사건 사례를 분석하며 “법적 처리에 있어 구타당한 여성의 심리적·정신적·신체적 특별상황이 받아들여져야 하며, 사법관계자의 아내구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요청된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에서 그동안의 피해자가 겪은 고통에 대한 정상참작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아내구타가 발생을 예방하는 사회적 통제력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보았다.

나의 성직이기 때문에 나는 교사가 노동자로 전락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대답해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이에 민주당총은 “현위원장에 노동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노동자로 전락하는 것’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표현을 쓸 수 있는가? 이러한 시각이야말로 노사관계를 개혁하는데 있어 1차적인 대상”이라고 지적하고, 현위원장의 사과와 독단적 행태의 중지를 요구했다.

일본, 위안부 문제 회피 필리핀·대만등 항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일본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측이 동경주재 한국특파원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갖는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에 대해 항의하고 나섰다.

○행사와동정○

- 지구적 차원의 부패추방운동과 한국사회의 선택
 - 일시:5월17일(금) 오후1시30분-4시30분
 - 장소:여의도 국회의사당내 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최: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797-8200)
- 가톨릭 청년 백두산 순례단 모집
 - 일시:7월8일(월)-13일(토)
 - 접수기간:5월18일까지
 - 주최:정의구현 전국 사제단 사무국(3672-0251)
- 제3회 기독교 논단 :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 일시:5월22일(수) 오후2시-4시
 - 장소:성가수녀원 강의실(735-7832)
 - 주최: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312-3317)
- 시민운동지원기금 창립 1주년 기념행사
 - 일시:5월17일(금) 오후4시30분-6시30분
 - 장소: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 주최:시민운동지원기금(790-5200)
-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상임의장 박순경)는 28, 29일 양일간 대전 유성 고려파크 호텔에서 각 단체 통일사업 관련 실무자 및 집행책임자를 대상으로 평화·통일민족대회를 위한 통일일꾼 수련회를 갖는다. 회비는 1만원. 문의: 745-5872/ 호텔 042-825-0303

<이달의 주제-노동권>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을 위태롭게 한다.
-ILO 제26차(44년) 총회,
필라델피아 선언중에서-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역사는 인간성 회복을 위한 투쟁과정” 시민연대,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청년캠프 열어

5·18 16주기를 맞는 광주에서는 지난 14일부터 일주일간 18개국 40여 명의 청년들이 모여 '5·18정신계승, 인권과 평화를 위한 제1회 국제청년캠프'를 열고 있다. 국제청년캠프를 주최한 광주시민연대모임 우수성공동대표는 “이번 캠프를 통해 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이 세계에 널리 퍼져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인권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참가자들은 자국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소그룹 토론을 진행해 인권상황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했으며, 17일에는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갖고 보편적 인권에 대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심포지엄에 앞선 강연회에서 이종수(광주대 언론학)교수는 “5·18의 경험을 통해 미국의 정세에 대해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생긴 많은 신생 독립국들의 민중들도 인권침해를 당하는데 있어 내적 요인보다, 외적 요인이 많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 시장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하이데(Holger Heide, 브레멘대학 경제학)교수는 “현재의 역사는 인간을 배려한

역사가 아니었다. 따라서 역사는 인간성회복을 위한 투쟁의 과정이었다”고 전제했다. 그는 “현대 세계시장은 식민주의 산물이며, 선진자본주의 국가 노동자들이 누리는 고임금과 양질의 사회보장제도는 그들의 투쟁에 의한 재취뿐 아니라 지구촌 주변부와 환경 파괴에 따른 자본이 뒷받침된 것이었다”며 “우리가 인권 보호를 주장하는 것은 자본주의 세계시장 체제에 대한 방어으로써 취할 수 있는 필수적 요구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연회를 마친 뒤 한국과 독일, 동티모르, 재일동포 각대표의 인권상황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발언요지 2면 게재).

한국의 인권상황을 발표한 이상영(충북대 법학)교수는 “세계 여러나라에서는 한국이 두 전대통령을 법정에 세운데 대해 많은 지지를 하고 있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거청산은 단순히 과거에만 초점이 맞춰 있을뿐 김영삼정부는 이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교수는 또한 “과거 국보법과 노동법등으로 구속된 양심수에 대한 사면과 복권이 선행되고 미래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때 비로소 진정한 과거 청산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국제청년캠프 참가자들은 5·18추모제에 참석

할 예정이며, 19일에는 청년캠프 참가자 결의문을 채택한다. 【광주=임주현】

미국사회·악법철폐 전국서 5·18국민대회

특별법 제정 이후 처음 맞은 5·18민중항쟁 기념식 및 5월문제 완전해결을 위

한 국민대회가 서울, 광주를 비롯한 전국 16개 지역에서 동시에 열린다.

대회를 주관하는 전국연합은 “두 전직대통령이 구속됐지만, 5·18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믿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라며, “특별법의 제정은 5·18문제의 끝이 아닌 그 출발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연합은 △5.6공 인사의 청산 △국보법·노동악법 등의 철폐 △미국사회 △한미협정 등 불평등 조약 개정 △학살자들에게 수여된 서훈의 취소 등을 촉구했다.

통신서비스 접속이 간편해졌습니다.

인권하루소식 접속방법이 간편해졌습니다. 하이텔 01410에서 OLAND를 입력하고 3. 인권하루소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또한 하이텔 01410. INFORSHOP에 있는 10. 언론/인물/뉴스란에도 17. 인권하루소식이 올라감에 따라 보다 많은 독자와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천리안 01420방 뉴스란과 유니텔 01433방 뉴스란에도 인권하루소식이 올라갈 계획입니다.

새롭게 변경된 메뉴에는 그날 그날의 <인권하루소식>을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검색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인권관련 30여 개의 주제별 검색과 단어 검색을 신설했습니다. 이제 검색하고 싶은 단어나 낱자를 입력하면 <인권하루소식>에 실린 모든 기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문의 715-9185 담당자 : 최은아).

◆인권하루소식[HNEWS]◆운영자:인권운동사랑방

- 1. 오늘의 인권하루소식
- 2. 주제별 검색

- 1. 자유권 일반/판례/행형 2. 국가보안법/양심수/장기수 3. 인권교육/교육/아동 4. 사회권 일반/개발 5. 여성/장애인 6. 노동/외국인노동자/도시빈민/노인 7. 불치병/5.18/주한미군범죄 8. 국제/유엔 9. 별제 10. 주간인 권호름 11. 행사와 동정 12. 주요 공판안내 13. 기타
- 3. 단어 검색/ 4. 인권침해 기사제보/ 5. 구독신청/ 6. 게시판/ 7. 인권운동사랑방 소개

법·의식 개혁, 노사개혁의 전제 민주노총, 노사관계 개혁 정책세미나

민주노총은 17일 오전 10시 송실대 사회봉사관에서 '노동법개정과 노사관계 개혁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김금수 위원(한겨레신문 논설위원)등 노사관계 개혁위 위원과 대학교수, 각 노조연맹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 가운데 세 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경영자 인식전환 필요 '노사관계 개혁방향'이라는 주제의 첫번째 세미나는 의식전환을 강조하는 시각과 법·제도의 개혁을 주장하는 시각이 대조를 이루었다.

배무기(노사개혁위 상임위원, 서울대 경제학과)교수는 “노사관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요청된다”며, “대립에서 협력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교수는 “기존의 노사대립관계는 본래국면이 클로즈업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며 “생산과정에서는 노사협력의 쌍방에게 이득이 되므로, 일관적 생산국면에서는 협력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노사관계가 협력관계로 전환하기 위해선, 경영자들이 권위적·가부장적 노사관을 버리고 인간분위 경영이라는 새로운 인식으로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해고자가 복귀가 전제 '신노사관계 구상'과 노사협력론과 관련, 김형기(경북대 경제학과)교수는 노사협력의 전제로서 노동의 민주화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김교수는 “김대통령의 ‘신노사관계 구상’을 제도화하기 위해선 ‘공정성이 효율성 없고, 노동의 인간화와 민주화 없이 노사협력이 될 수 없으며, 참여없는 창의없다’는 명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며 △악법개혁과 해고 및 구속노동자 복귀 △기업 경쟁력 유지의 명분으로 추진되는 파견근로제나 정리해고 완화조치의 철폐 △기업별노조체제에서 강력한 일(경남대 사회학과)교수는 “그동안 한국 노사관계의 문제는 규범과 인식이라는

추상적 수준에서 논의돼 왔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구체적 법·제도의 수준에서 진행되는 논의”라고 말했다. 그리고, 임교수는 “복수노조의 인정이나 공무원 노동권의 보장 등은 노사관계 개혁의 정상화 과제일 뿐”이라며, “노동자들의 보편적 권리를 부정하는 법과 제도부터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사협력 논의와 관련해 임교수는 “노사타협은 분산화된 기업수준에서 논의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수준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이는 노·사·정 사이의 포괄적 사회협약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한국현실에서 노동부문이나 자본부문 어디도 자기부문의 통일된 입장을 내올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포괄적 사회협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바라봤다.

해고자가 복귀가 전제 '신노사관계 구상'과 노사협력론과 관련, 김형기(경북대 경제학과)교수는 노사협력의 전제로서 노동의 민주화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김교수는 “김대통령의 ‘신노사관계 구상’을 제도화하기 위해선 ‘공정성이 효율성 없고, 노동의 인간화와 민주화 없이 노사협력이 될 수 없으며, 참여없는 창의없다’는 명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며 △악법개혁과 해고 및 구속노동자 복귀 △기업 경쟁력 유지의 명분으로 추진되는 파견근로제나 정리해고 완화조치의 철폐 △기업별노조체제에서 강력한 일(경남대 사회학과)교수는 “그동안 한국 노사관계의 문제는 규범과 인식이라는

□ 재일동포의 인권현실 곽진웅(재일한국민주인권협의회)

92년 외국인등록법 개정으로 영주권을 가지는 재일동포의 지문날인제도가 폐지되었으나 아직도 등록증을 항상 휴대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또한 「출입국관리법」하에서는 일본에서 태어나 영주권을 가진 재일동포라 할지라도 강제퇴거 대상이 될 경우도 있어 재일동포는 불안정한 법적지위에 있다. 현재 민족학교가 있으나 재일동포 자녀들의 약 90%가 일본학교에 다니는 실정이다. 그중에는 적은 예지만 재일동포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에서 재일동포 학부모들의 요구로 민족학교가 과외활동으로써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일본정부는 제도적으로 민족교육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재일동포 자녀들은 말과 역사, 문화를 배울 기회마저 빼앗기고 있다.

□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침략 케서린 로차(동티모르의 자유를 위한 오스트리안 조직)

75년 인도네시아 군대는 동티모르를 침략했다. 처음 70만 명의 인구 중에서 지금까지 약 30만 명이 죽었으며, 무자비하고 불법적인 점령을 당하고 있다. 오늘날 동티모르에는 어떤 인권존중도 존재하지 않으며 임의 체포, 고문, 강간, 불법화, 실종, 살인, 재산탈취, 강제이주, 토착어와 전통의상의 말살이 자행되고 있다.

그러나 전세계는 이런 일들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다. 75년 12월7일 인도네시아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 일어났고 그후 몇 달 동안 인도네시아 군대는 6만명의 동티모르인을 처형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산 속으로 들어갔고, 지금까지 무장투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교착 상태를 깨기 위해 OV10이라는 추수지상 공격전투기로 인도네시아를 지원했으며, 급기야 인성분의 소이단인 내이팍탄을 제공하기도 했다.

□ 독일의 인권 문제 안 슈미트(오토 프리드리히 대학 사회학 학사과정)

금년 2월 몇몇 학자들의 연구가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그 내용은 독일경찰의 외국인 죄수들에 대한 학대 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죄수 학대는 독일 전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심각한 사회문제와 경찰에 대한 끊임없는 압력이 존재하는 지역(특히 대도시)에서 흔한 일이며 외국인들은 경찰들의 좌절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독일내 외국인들의 상황은 복합적인 문제이다. 92년 연방공화국의 기본법은 정치적 피난처를 찾지 못하도록 변화되었다. 정부는 이민자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이민법' 제정을 거부하고 있으며 독일이 이민 국가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또다른 논쟁주제는 외국인들의 귀화문제이다. 정부는 20년동안 이곳에 정착한 사람들이나 아이들을 낳은 사람들에게조차도 '이중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결국 외국인들은 투표권을 갖지 못한다. 현재로서는 조상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독일 시민권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민간단체와 의회 야당이 독일에서 태어난 사람은 독일시민이라는 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달의 주제-노동권>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을 위태롭게 한다.
 -ILO 제26차(44년) 총회, 필리핀에 선언중에서-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어용노조원들 사직강요

마산 한국산본 해고노동자 16일째 농성

마산에 위치한 한국산본(사장 서길영) 노조위원장 윤종현(33)씨등 노조간부 6명이 회사측의 직장폐쇄 위협과 남성노동자들의 강요와 폭행에 의해 조합직을 사퇴한 데 이어, 회사로부터 해고당했다.

이에 윤씨등은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16일째(21일 현재) 마산 민주당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해고된 전임노조위원장 윤종현(33)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단체교섭에 들어간 이후 회사측은 "노조측이 3년간 무쟁의 약속과 단체협약 유보 및 회사일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협정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폐업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노조가 단협요구안을 '감원방침 철회·기존 단협안 인정·주42시간 노동'으로 축소 제시했으나, 지난 4월16일 회사측은 '노조가 협정서를 수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4월30일부로 폐업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 주요 공판 안내 ●

- 5월22일(수) 권순미, 국보법, 오후2시, 합의22부, 425호 속행 강희남외8인,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425호 선고 김형덕, 국보법, 오전10시, 단독3부, 317호 선고
- 5월23일(목) 전재순, 국보법, 오전10시, 합의4부, 416호 선고
- 5월25일(토) 전창일의2인,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3부, 311호 선고
-이상 서울지법 형사국

이 과정에서 전제조합원 2백여명 중 40여명을 차지하는 남성조합원들은 노조 운영에 반발하며, 노조사무실을 부수고 여성조합원 및 간부들을 감금·폭행하면서 이들에게 노조탈퇴 및 사직을 강요·협박했다고 한다. 결국 50여명의 조합원들이 노조를 탈퇴하고, 16명이 사직서를 냈으며, 노조간부들도 직책을 사임함으로써 회사측은 잠정적으로 폐업을 철회하는 것으로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이후 전임노조간부 6명은 남성노동자들로 부터 집단적으로 폭행을 당하며 사직을 강요당했고, 이러한 폭행 등에 못 이겨 출근을 하지 못하자, 회사측은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이들을 15일 전원 해고조치했다. 게다가 회사측은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등으로 고소한데 이어, 심지어 95년 입투 당시의 6여여원의 손해 배상까지 청구한 상황이다.

합원들의 의견이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서 일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현씨등 6명의 해고노동자들은 연일 회사출근투쟁을 벌이며, 노동부에 부당해고철회와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철회 등을 요구하며 농성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산본 사태와 관련, 22일 오후2시에 마산 지방노동사무소 앞에서 금속연맹 서부경남지부 주최로 노동부 항의집회가 열릴 예정이며,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의회는 같은날 오전11시 한국산본사태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아시아인권운동가 서울 방문 각국 인권운동 의견 교환

필리핀, 인도, 버마 등 아시아지역의 인권운동가 9명이 20일 오후 인권운동사랑방을 방문, 인권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 대부분은 5·18행사가기간중 광주시민연대모임 주최로 열린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청년캠프의 참가자들이다.

필리핀의 Roy 목사는 "현재 아시아 전역에서 소수엘리트가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인권의 개념은 민중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유엔과 같이 인권을 중립적 개념에서 바라보는 것은, 인권탄압자의 인권과 탄압받는 민중의 인권을 동일시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인도의 Suhas(남아시아 인권기록센터) 씨는

"인권운동은 장기적 투쟁이며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인권문제는 자국내에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문제이다. 유엔은 보충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며, 유엔에 환상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자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운동에 대해 스리랑카의 Sanjeeva(아시아인권위원회)씨는 "인권관련 사법개혁운동과 인권의 시각에서 빈곤에 관한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시아 인권현장을 올해 노력으로 완성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혔으며, The Seim(버마인권위, 태국 망명중)씨는 정치범·어린이 노동·토지소유권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민간·정부 연대, 지속가능한 개발모색”

제2회 세계주거회의 개막 10일전

제2회 세계주거회의(HABITAT II)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21일 오후2시, '세계주거회의(HABITAT II) 한국민간위원회'(공동대표 하성규, 민간위원회)는 이스탄불에서 개최되는 제2회 세계주거회의의 개막을 앞두고 '세계주거회의의 개최의의와 지방정부 및 민간사회단체의 역할'에 대한 심포지엄을 가졌다. 이날 심포지엄은 공청회와 토론회등 그동안의 민간위원회가 벌여온 활동을 정리하고, 주거회의에 직접 참석함으로써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한 마지막 점검자리이기도 했다.

토론회에 앞서가진 주제발제에는 방성룡순천시장이 나와 현재 순천시에서 '21세기 환경포도도시 순천'을 건설하기 위한 '그린순천21'사업 설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방시장은 "그동안 급속한 경제성장만이 최고의 가치로 평가되었고 현재에도 국가정책에 있어 이 가치가 유효하다"며 "순천지역과 같이 자치단체가 앞장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곳은 없다. 하지만 세계주거회의 이후 민간단체와 자치단체의 연대를 통해 개선타안을 모색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민간단체의 전략에 대해 박종렬(민간위원회 공동상임위원장)씨는 "세계주거회의의 의제를 실천·완성하기 위한 민간단체와 중앙·지방정부등 모든 영역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조홍식(서울대 사회복지, 참여연대 소속)교수는 "이번 세계주거회의의 참가를 통해 인간의 소중함과 존엄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가져

야 한다"며 "무한 경쟁의 현실에서 함께 공존하는 지극은 생각할 수 없다. 그동안 이윤추구가 최고의 목표였던 자본의 논리에 대해 이제 그 이윤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우(서울시경제발전연구원)박사는 "금세기를 마감하는 중요한 회의임에도 국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세계주거회의의 참가이후 그동안 성취에 대한 자부심을 키워야 할 때"라며 "세계주거회의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는 작업등 할 일이 너무도 많다"며 민간위원회 활동의 중요성을 말했다.

제2회 세계주거회의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6월3일 개막되며, 민간위원회에서는 전문가·사회단체 및 일반시민 등을 포함해 1백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세계주거회의의 한국참가단 일동명의 공동선언문을 통해 민간위원회는 △모든 사람은 주거가 기본적 인권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데 노력 △도시환경이 지속가능·평등·자치적으로 변화하도록 하는 활동 △개발주도의 경제정책은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을 소외시켰으므로 여성의 법적 권리 보장하는 노력 △국민생활의 최우선보장을 통해 전 국민의 삶에 대한 합의된 기준선 확립하는 것 △교통량과 교통수요를 감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 등,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기사제보
 전화: 715-9185
 전송: 715-9186

김귀정 열사 5주기 열사 10인 합동추모제

경찰의 폭력적 강경진압에 의해 91년 5월25일 사망한 김귀정(당시 26세·성균관대 88학번) 열사 5주기를 맞아 묘소 참배를 비롯해 문

화제, 추모제등이 해화동성균관대 교정에서 열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4월혁명 때 입은 부상으로 앓아오다 87년 숨진 이정인(41년생, 법학과 60학번)씨, 민청학련 사건으로 강제징집을 당한 백한열(54년생, 신방과 73학번)씨를 비롯해 최근 4월16일 분신산화해간 황혜인(물리학과 95학번)씨등 10명의 열사를 한자리에 모은 합동추모제를 22일 낮1

시 금잔디광장에서 치른다. 문의:760-1381

“민의 저버린 처사” 전국연합 철새당선자 비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이 소야대를 마음대로 바꾼 김영삼대통령과 신한국당측은 종만 들지 않았을 뿐 국민을 상대로 신쿠데타를 자행한 것"이라는 비난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당적을 바꾸거나 소속을 옮긴 철새당선자들에 대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권력에 굴복한 것은 이미 지역주민과 국민의 대표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신서비스 접속이 간편해졌습니다.

- | | |
|--|--|
| 방법 1>
하이텔 01410에서
① OLAND 입력
② 3.인권하루소식 선택 | 방법 2>
하이텔 01410에서
① I.INFOSHOP 선택
② 10.언론/인물/뉴스 선택
③ 17.인권하루소식 선택 |
|--|--|

새롭게 변경된 메뉴에는 그날 그날의 인권하루소식을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검색기능을 강화했다. 인권관련 30여개의 주제별검색과 단어검색을 신설했다. 이제 검색하고 싶은 단어나 날짜를 입력하면 인권하루소식에 실린 모든 기사를 검색할 수 있다. 문의 715-9185 담당자 : 최은아

◆인권하루소식[HNEWS]◆

1. **오늘의 인권하루소식**
2. **주제별 검색**
 1.자유권 일반/판례/형형 2.국가보안법/양심수/장기수 3.인권교육/교육/아동 4.사회권 일반/개발 5.여성/장애인 6.노동/외국인노동자/도시빈민/노인 7. 불처벌/5.18/주한미군범죄 8.국제/유엔 9.법제 10.주간인권호를 11.행사와 동정 12. 주요 공간안내 13.기타
3. **단어 검색**
4. **인권침해 기사제보**
5. **구독신청**
6. **게시판**
7. **인권운동사랑방 소개**

*인권하루소식 통신서비스는 하이텔 ID가 없어도 통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속할 수 있다. 이때 사용신청하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용료를 별도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양식이 따라 사용신청을 하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달의 주제-노동권>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을 위태롭게 한다.
-ILO 제26차(44년) 총회, 필리델피아 선언중에서-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천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재판부가 무죄 인정한 셈”

범민련 간부 대부분 집유 석방

국보법위반으로 구속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의장 강희남, 범민련) 간부 강희남씨등 9명에 대해 재판부가 조건호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국보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과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는 터무니 없이 낮은 형량을 선고해 공안당국에 의해 조작된 사건임을 반증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2일 오전10시, 425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조건호 판사는 “피고들이 국보법의 효력을 문제삼았지만, 국보법은 국가의 존립과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국보법에 대한 헌법상의 효력을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북한이 대남 전략의 기본 목표가 변하지 않고 있는 현상황에서 범민련의 주장이 민족공동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었다고는 하지만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강씨들에게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된 주명순(73, 서울시연합 부의장)씨는 “아직도 냉전시대의 산물인 국보법의 벽이 높다는 것을 실감했다”며 “그러나 지난 8일 검찰이 간부들에게 징역7년에 자격정지7년등을 구형한데 비해 훨씬 적은 형량을 선고한 것은 우리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권오현(민가협 공동의장)씨는 “이전까지만 해도 국보법으로 구속이 되면 최소한 3년형은 작으셨다”며 “이번 범민련 사건에서 강희남씨는 범대로 말하자면, 그는 이적단체의 수괴이다. 하지만 구속된 간부 모두에게 비슷한 형을 선고한 것은 재판부가 이 사건 자체에 대해 무죄임을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범민련사건의 선고는 국보법 사건 발생이 정치상황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난가하는 의혹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안기부가 일명 ‘부여 간첩 김동식사건’을 발표하면서 민족민주운동세력의 대대적 구속사태가 발생했고, 당시 전국연합등 재야 단체는 “노태우 전 대통

령의 부정부패가 크게 드러나 현 정권에 부담이 되고 있고 다가올 4월11일 국회의원 총선거와 5·18의 정국구도가 운동세력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그 당시 구속된 박충렬(36, 전국연합 사무차장)씨등 대부분의 경우 보석과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3천만원으로 해결하자”

대구공전 2차 협상결렬

지난 6일 ‘동아리연합회 자치권 인정’등을 요구하며 사망한 박동학(대구공전 전 산학과 92)씨 유가족과 협상을 진행했던 대구공전(이사장 이경희)측이 22일 2차 협상에서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해 협상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고 박동학열사 전상규 명과 학생자치권 확보를 위한 시민학생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조광진, 대책위) 박용규 선전부장은 “애초 학교측은 사태해결을 바라지 않았다”며 “학생을 죽여놓고 돈 3천만원으로 해결을 하자니 도대체 그들이 교육자들인지 의심스럽다”고 한탄했다.

대책위측은 “학교측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전까지 협상은 있을 수 없다”며 이후 지난 94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대구공전 비리에

한편 이번 사건변론을 맡은 박연철변호사는 “강씨와 박석물씨가 범표상 집행유예와 가석방 기간이어서 실형선고를 예상했지만 다른 간부들에게 관대한 처분이 있을 것으로 알았다”며 항소할 것을 밝혔다.

<선고내용> 이천재(66·상인부의장), 김영계(40·정책위원장), 이종린(75·서울시연합의장) 징역1년/ 박병준(73·갑사), 김영옥(62·중앙위원), 홍세표(59·연합 부의장) 징역1년·집유2년/ 박석물(49·전실행위원장) 징역8월

대해 대대적인 선전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핵발전소 사고 잦아 주민들 “계속 투쟁할 터”

영광핵발전소 추방협의회(공동의장 박계완)는 21일 부실공사 영광핵발전소 3, 4호기의 가동 중단과 5, 6호기 추가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영광핵발전소 3, 4호기는 7차례의 사고를 낸 바 있고, 지난 15일에는 정비원의 실수로 4호기 원자로와 터빈발전기가 11시간 동안 정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주민 김정민씨는 “정부가 한전은 단순히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영광 지역주민들에게 고통을 강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자회사 노동자 고용불안 대책 절실

한국산본 사태 ‘자본철수 위한 사전정지작업’

(주)한국산본의 노조집행부 사임과 해고사태는 ‘민주노조 와해’라는 회사측의 의도하에, 자본철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의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회사측은 폐업에 대한 위기감을 유감없이 드러내며, 여성에 비해 부양에 대한 강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남성노동자를 희생하고, 그들을 통해 노조를 와해시켰을 뿐 아니라 이를 단순한 노·노 갈등의 모습으로 비치게 하는데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자본철수로 고용불안

한국산본은 1백% 일본자본에 의한 외자회사로서, 마산 수출자유공단 내의 약 70개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값싼 국내노동력을 이용하여 위해 들어온 노동집약형 회사이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노동집약형 외자회사들은 좀 더 값싼 노동력을 찾아 동남아 등지로 이전을 추진·실행했으며, 경영측 소라는 명분하에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투자를 감소시키고 노동자를 감원해 왔다. 이러한 외자회사의 철수와 감원은 기존 국내 노동자의 실업을 의미하면서, 수출자유지역내뿐 아니라 국내의 모든 외자회사에서 심각한 고용불안 문제와 노동자들의 생존권보장문제를 첨예화시키고 있다.

한국산본은 중국에 공장을 짓고 2-3년 내로 이전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장원에 있는 제2공장을 매각할 경우, 제2공장의 40여명 노동자들이 마산으로 이동하게 되고, 필연적으로 감원조치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노조측은 예상되는 감원조치와 자본철수에 대비하고

자 14개월의 감원수당을 단체협약 요구안으로 제시했으나, 회사측은 노조가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회사를 폐업하겠다고 위협했던 것으로 전한다. 감원수당은 노동자가 감원조치에 따라 퇴사할 경우, 노사간 미리 정해놓은 기간만큼의 금액을 퇴직금과는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일종의 실적수당이라 할 수 있다.

마산지역에서는 88년 이래 대량 감원사태와 자본철수가 이어지면서 이를 막기위한 민주노조들의 투쟁이 전개되어 왔다. 민주노조들은 단체협약을 통해 감원수당을 명시화하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여왔고, 90년 TC 회사에서의 투쟁이후 3개월분의 감원수당이 관례화되기에 이르렀다. 이미경(마산여성노동자회)씨에 따르면, 이미 일부 사업장에서 15개월의 감원수당을 받는 곳도 있다고 전한다.

금속연맹 서부경남지부 홍지욱(33·쟁의부장)씨는 “외자회사의 고용문제에 대한 법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며, “수출자유지역 전반의 자본철수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위가 구성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노갈등 조장

한편, 남성노동자들이 조합에서 이탈하면서 회사측 입장에 동조하는 모습은 민주노조 와해과정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는 남성노동자들이 여성노동자들에 비해 특혜를 많이 받는다는 점과, 부양에 대한 압박감 속에서 회사측의 폐업협박에 버티다가 어렵다든 점 등이 가져오는 결과로 분석된다. 또한, 남성과 여성노동자의 차별화를 통해 여성과 남성의 대립구

도(노·노 갈등)를 조장하려는 회사측의 의도가 들어맞는 경우라 하겠다.

한국산본의 경우, 95년에는 적극적으로 임투과정에서 참여한 남성조합원들이 임투후 대거 현장관리직으로 승진됐으며, 이러한 회사측의 조치가 올해 단협과정에서 남성노동자들을 조합으로부터 분리시키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3월14일 남성노동자들에게 폭행을 당해 한달간 입원치료를 받았던 김창순(28, 전임노조사무국장)씨는 “남성노동자들은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결국 특권과 피해의식 때문에 돌아서 버렸다”며, “남성들도 자신이 언제든 감원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텐데...”하고 안타까워 했다<하루소식5월 22일자 참조>.

참여연대 ‘중남미’ 포럼

참여연대는 23일 오후7시 20분 용산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과 현지문화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지구촌 좋은 이웃되기 6차 시민포럼을 갖는다. 이번 주제는 중남미 지역이며, 발표자는 안대환(문학박사, 인천시청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위원)씨이다. 또한 발표에 앞서 23분 짜리 중미비디오 상영도 마련되어 있다. 참가비 1천원. 문의:796-8364(김은영간사)

통신서비스 접속이 간편해졌습니다.

- | | |
|---|---|
| 방법 1>
하이텔 01410에서
① OLAND 입력
② 3.인권하루소식 선택 | 방법 2>
하이텔 01410에서
① 1.INFOSHOP 선택
② 10.언론/인물/뉴스 선택
③ 17.인권하루소식 선택 |
|---|---|

새롭게 변경된 메뉴에는 그날 그날의 인권하루소식을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검색기능을 강화했다. 인권관련 30여개의 주제별검색과 단어검색을 신설했다. 이제 검색하고 싶은 단어나 날짜를 입력하면 인권하루소식에 실린 모든 기사를 검색할 수 있다. 문의 715-9185 담당자:최은아

◆인권하루소식[HNEWS]◆

- 오늘의 인권하루소식
- 주제별 검색
 - 1.지유권 일반/핀레/행형 2.국가보안법/양성수/장기수 3.인권교육/교육/이동 4.사회권 일반/개발 5.여성/장애인 6.노동/외국인노동자/도시민민/노인 7.불처벌/5.18/주한미군범죄 8.국채/유엔 9.법제 10.주간인권호를 11.행사와 동경 12.주요 공판내 13.기타
- 단어 검색
- 인권침해 기사재보
- 구독신청
- 계시판
- 인권운동사랑방 소개

*인권하루소식 통신서비스는 하이텔 ID가 없어도 통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속할 수 있다. 이때 사용신청하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용료를 별도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양식이 따라 사용신청을 하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아래 지로로 납부를

지로번호: 7618848

강희남 목사 무기한 단식 돌입 구속 통일인사 무죄석방 요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 본부 상임의장 강희남(75) 목사가 23일부터 성동구치소에서 단식에 들어갔다. 남측본부는 23일 "강희남이, 유엔에 가입한 국가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조국통일운동에 몸바친 통일인사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김영삼정권의 반통일적 작태를 규탄하며, 국가보안법의 철폐와 구속자 전원 무죄석방을 요구하는 단식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단식에 들어간 강희남의 장은 75세의 고령인데다 구

속으로 심신이 쇠약해진 상황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밖에 이천재(66), 이종린(75)씨 등이 지난 22일 재판에서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하루소식 5월23일자 참조>.

바로잡습니다

하루소식 23일자 1면 범민련 관련 기사중, 김영제씨와 이종린씨의 선고내용을 정역1년으로 바로잡습니다.

<5월24일은 휴일판 계로 휴간했습니다>

통신서비스 접속이 간편해졌습니다.

방법 1>

하이텔 01410에서

① OLAND 입력

② 3.인권하루소식 선택

방법 2>

하이텔 01410에서

① 1.INFOSHOP 선택

② 10.인문/인물/뉴스 선택

③ 17.인권하루소식 선택

새롭게 변경된 메뉴에는 그날 그날의 인권하루소식을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검색기능을 강화했다. 인권관련 30여 개의 주제별검색과 단어검색을 신설했다. 이제 검색하고 싶은 단어나 날짜를 입력하면 인권하루소식에 실린 모든 기사를 검색할 수 있다. 문의의 715-9185 담당자 : 최은아

◆인권하루소식[HNEWS]◆

1. 오늘의 인권하루소식

2. 주제별 검색

1.자유권 일반/판례/행형 2.국가보안법/양심수/장기수 3.인권교육/교육/아동 4.사회권 일반/개발 5.여성/장애인 6.노동/외국인노동자/도시빈민/노인 7.불처벌/5.18/주한미군범죄 8.국제/유엔 9.법제 10.주간인권호름 11.행사와 동정 12.주요 공판내내 13.기타

3. 단어 검색

4. 인권침해 기사제보

5. 구독신청

6. 게시판

7. 인권운동사랑방 소개

*인권하루소식 통신서비스는 하이텔 ID가 없어도 통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속할 수 있다. 이때 사용신청하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용료를 별도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양식이 따라 사용신청을 하면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인권간행물 ○

□ 5·18 16주년에 즈음한 정책공청회- 5·18과 미국,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전국연합(747-43645)

· 주요내용: 광주항쟁 16주기에 광주와 미국의 문제를 다시 생각함(이삼성)/ 한미관계의 현주소와 민족자주성회복을 위한 실천적 과제(최규업) 등 48쪽

□ 「살림」 5월호-살림(578-6744)

· 주요내용: 인권의 의미 '세계인권선언을 중심으로'(이창호)/ 21세기, '어린이의 권리' 시대를 위하여(김수경)/인권의 사각지대 '학생인권'(이용관)/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생명에 대한 의문들(고경심) 106쪽

□ 「현장에서 미래를」 5월호-한국노동정책연구소(874-2933)

· 주요내용: 정세조집-「신노사관계 구상」이 던진 문제(채만수)/상반기 투쟁과제를 점검한다(3)-자동차연맹 96상반기 투쟁, 현황과 과제(민경민)·공노대 '96공도투쟁 계획을 점검한다(공노대운영위)·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산재보상보급 적용투쟁 경과와 과제(정순재)/기획-공공부문 노사관계 '우리나라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특징과 쟁점'(공공부문 연구팀)·자본이나 노동이나(9) '한국 사회에서 자본의 교육지배와 교육운동'(조희주) 등 177쪽

□ 「노동과 건강」 3·4월호-노동과 건강연구회(866-9175)

· 주요내용:특집1-4.11 총선과 산재추방운동(조정진)/특집2-산업안전보건관련 96년 단협 쟁점(장지혜)/특별기고 1996년 산재추방운동의 전망 '학계의 입장'(최재욱)/복지에 대한 철학이 없는 정치권, 공약만 남발/장애아 입양하는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급 등. 85쪽

□ 「세상열기」 5월호-청년정보문화센터(516-15423)

· 주요내용:세상열기- '국제-아시아의 분쟁지역을 간다, 필리핀'(국제위원회)/기획특집 2000년을 위한 새로운 지역운동의 실험(이규의)·21세기 한국사회의 새로운 희망 찾기(유우현)·참여연대, 80년대와 90년대의 정점을 위한 연대의 실험(이태호)등 112쪽

□ 「21세기 나라의 길」 5월호-나라장착연구원(584-8664)

· 주요내용:96년 노동운동을 진단한다-박인상 제재 하의 노동, 어떻게 바뀔 것인가(이정석)·현실과약과 실천 속에서 얻어낸 귀중한 운동방향(김태현)·현단계 노동운동의 진단과 한국 전망(이장원) 등 108쪽

□ 「참여사회」 5·6월호- 참여연대(796-8364)

· 주요내용:북한- 쌀지원 '해야 한다'(정일용)/대특집 '한국의 복지 성적표' 문민복지는 낙제점 '말 따로 실천 따로'(정무성)·사회복지운동의 세 가지 흐름(이정운)등 128쪽

□ 「이스탄불로 가는 길」(세계주거회의 안내)-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3673-30313)

· 주요내용:이스탄불로 가는 길-세계주거회의가 이루어지기까지/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 현황 109쪽

□ 「포럼 2001」 5월호-포럼2001(747-8897)

· 주요내용:특집- 광주, 특별법 그 이후 '5·18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투쟁의 성과와 평가'(유한범)·'미국의 5·18 내란학살 공모에 대하여'(황남주)·'96년 5월에 만난 어느 시민군'(김준국) 등 73쪽

□ 「전국연합 통신」 99호-전국연합(747-43645)

· 주요내용:기고-김영삼정권의 신제법 정책(곽노현)·자본의 신경영 전략과 노조의 대응(인수범)기무사 시사뉴스 불법 감시 미행(시사뉴스 편집국)·114 유료화, 한국통신 노조와 범대위 강력 반발(이상필)/커비스토리-5·18과 미국(황인성/유한범/김성희/이삼성) 등 64쪽

인권하루소식

<이달의 주제-노동권>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을 위태롭게 한다.
-ILO 제26차(44년) 총회, 필리델피아 선언중에서-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불안, 우울, 신체증후군에 시달려 5·18 피해자 증후군 연구발표

25일 오후 광주시 금남로 1가 소재 무등컨벤션센터에서는 5·18 16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광주 5·18민중항쟁 피해자 15년후 후유증에 관한 연구발표」 및 「5·18민중항쟁 피해자 치료 및 재활대책에 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장에는 5·18 피해자 및 이 문제에 관심있는 사람들로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이날 행사는 '광주 5·18 민중항쟁 피해자 15주년 회생양 증후군'을 연구해오고 있는 변주나(전북대 의과대학)교수의 연구발표와 정현택(원광대 의과대학)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아울러 치료 및 재활대책과 관련해 80년 피해 시민들을 치료했던 유용상(현재 광주 빛고을 소아과원장)의사의 당시 진료상황 증언과 심인식(5·18부상자회)회장의 5·18피해자 사회부적응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이밖에도 안성래(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장) 시의원은 5·18특별법 후속조치에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 및 재활대책이 담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피해자 50명을 대상으로 피해자들과 비피해자들간의 항쟁 15년후 정신, 신체, 가정 및 사회적 후유증에 관한 사회조사 실험연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변교수는 "1차 조사에서 사회측정도구를 사용해 생활변화사건, 불안과 우울 및 신체증후군을 측정하였고, 2차 조사에서 총상피해자 42명을 중심으로 총상부위, 총상사출구 및 사입구 그리고 탄알 및 파편 보유자(19명)를 중심으로 남파편에 의한 남중독 유무를 가리는 연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19.1%, 머리와 목이 14.7%, 가슴이 10.6%으로, 둔부가 14.9% 등이었으며 보유자들의 자가증상으로 신경통, 불안증, 소화장애, 빈혈, 생식장애 등을 호소하였다. 이 와같은 증상이 남파편에 의한 남중독 현상인가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분석한 결과를 측정하였고, 2차 조사에서 총상피해자 42명을 중심으로 총상부위, 총상사출구 및 사입구 그리고 탄알 및 파편 보유자(19명)를 중심으로 남파편에 의한 남중독 유무를 가리는 연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남중독후유증 호소

한편 변교수는 80년 당시 진단서를 분석해 본 결과 53%이상에서 시위대가 소총을 소지하기 전인 80년 5월21일 오후1시30분 이전에 총사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으며, 총상피해자들의 연령분포는 19세가 6.5%, 10~19세가 8.5%였으며, 여자가 38%로 나타났다. 또한 의상부위는 앞면·머리·척추가 50%이상이었으며, 파편보유 위치는 머리·목·가슴등이 25% 이상으로 나타나 "가해자들이 주장하는 자위권 발동설은 허구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변교수는 이

피해자 재활대책마련 촉구 변주나교수는 94년 3월부터 95년 7월까지 2차에 걸쳐 광주,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5·18피해자 1백31명(부상자 67명, 유가족 34명, 교도소 생존자 30명)과

날 발표에서 "피해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안녕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당국의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 및 재활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유용상 의사는 80년 피해 시민들을 치료할 당시 의료진 역시 시민들과 한마음이었다고 전제한 뒤, 당시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없었다고 아쉬움을 털어놓았다.

또한 심인식회장은 5·18 부상자회 회원 3명의 예를 들며 당시 피해자들이 부상으로 인하여 사회에 부적응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발표해 장내가 숙연해지기도 하였다.

[광주=김명희]

남북불교 공동기도 무산 통일원·안기부 압력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발표될 예정이던 남북공동기도문이 통일원과 정보기관의 압력에 의해 취소됐다. 불교인권위에 따르면, 통일원측에서 기도문을 남독한 경우 이를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통보해 온 데 이어, 안기부와 시경소속 기관원들이 23일부터 사찰 주변에 상주하며 신도들에게 위협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기도문의 낭독을 저지하기 위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구독료! 아래 지로로 납부를

성실한 구독료 납부로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인권하루소식>에 힘을 주십시오.

지로번호: 7618848

일본 우토로마을 26일 대규모집회

인권협 · 참여연대 지지성명, 대표단 파견

7여년 동안 일본 대기업의 토지소유권 주장에 반발해 투쟁을 벌여온 우토로 마을 주민들이 1심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26일 우토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우토로 마을은 지난 41년 일본으로 강제징용돼 집단촌을 형성해 살고 있던 조선인 거주지로 그 당시 강제징용되어 온 조선인들이 50여년을 살아온 삶의 터전이다.

하지만 우토로 마을의 실소유자인 대기업 일본차체가 87년 (유)서일본식산이라는 부동산업체에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했다<하루소식 5월8일자 참조>

현재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판에 관련한 증인조사가 끝났으며 7월 중으로 1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와 관련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등 9개의 인권단체가 모인 한국인권단체협의회(인권협)와 참여연대(공동대표 오재식)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우토로를 지키기 위해 한국의 인권·시민단체 차원의 조사활동에 착수할 것과 일본내 인권단체를 포함해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우토로마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한국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인권협은 이날 집회에 김경남(KNCC 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목사를 직접 파견해 인권협의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24일, 인권법당 길상사 주지 서래승려는 주한 일본대사앞으로 서한을 보내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인에게 강제노동과 인간이하의 삶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토

로마을은 일본에 의해 만들어진 또하나의 아픔"이라며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김병권씨등 4년선고 재판부, "국보법 필요"

지난해 11월 29일 국보법상 간첩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던 진창일(76·범민련 상임부위원장)씨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25일 열렸다.

서울지법 형사 합의 23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이날 재판에서 진씨에게 징역1년6월을, 김병권(75·범민련 중앙위원)씨에게 징역4년, 신정길(39·범민련 사무총장)씨에게 징역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씨는 뚜렷한 간첩혐의를 찾아볼 수 없으나, 김씨는 4번에 걸쳐 일본을 오갔으며, 북한 간첩 박용(범민련 제일조선인본부 사무차장)씨와 수차례에 걸친 전화통화를 통해 간첩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또한 "통일은 민족이 시급히 이루어야할 과제이지만 통일과 함께 자유라는 부분도 중요하다"며 국보법의 존속이유를 강조했다.

한편 이덕우변호사는 "지난 재판에서 강중현(범민련 일본 공동본부 차장)씨의 증인신청이 무효화된 것이 안타깝다"며 항소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것임을 밝혔다.

지난 3일 변호인단측이 검찰에서 북한간첩이라고 주장하는 박용씨의 신분계 확인을 위해 함께 일하는 강중현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강씨는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여권을 발급받지 못해 귀국하지 못했다.

주간/인/권/호/름

(96년5월20일부터 5월26일까지)

<20일>

경찰청 내년부터 교통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재시요구에 불응하면 즉시에 넘긴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 개정안 발표

<21일>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석호철부장판사) 한국여성 육보이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미8군소속 베넷 빌리리(18)이병에게 강간치상죄 적용, 징역 장기3년 단기2년6개월 선고/AI, 아시아·아프리카·중동지역 보고서 통해 '의사들 고문으로 망가진 몸을 치료하기는 커녕 혼란을 없애는 작업중'이라고 발표

<22일>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전국 성인남녀 1천5백41명을 대상으로 국민여론조사 결과 '노동자의 경영참여'에 88.8%가 긍정 대담/서울지법 형사22부(재판장 최정수 부장판사) 범민련 남측본부 강희남(75)씨등 4명에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주명순(70)씨등 4명에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마산 한국산본 노조위원장 윤중현씨등 노조간부 6명, 직장폐쇄 위협과 남성노동자들의 사적서강사·폭행 및 회사측의 해고에 항의 16일째 마산 민주당사에서 농성중

<23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시민문화센터'는 23일부터 평평 미군부대 터찾기 서명운동시작/석탄일 가식방자 6백71명 중 양심수 단 한명도 없어/범민련 남측본부 상임의장 강희남씨 "범민련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통일인사에 실형선고한 데 항의" 단식농성 돌입

<25일>

장기수 이성우(70·95년 형집행정지처분)씨 가족이 있는 일본으로 돌아가 치료받으며 여성보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심판 청구/금속연맹 15개 사업장 유가공제 취업노동자 88명 대상으로 조사결과 35.2%(31명) 노동자가 신경계장애와 근골격계장애로 보이는 증세보임

<26일>

두일분교학부모회 전교조로부터 올해 참고육상 받아/건설교통부 율하반기부터 재개발구역 안의 세입자도 임대주택 특별공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시행키로/전교조 7월 기념대회에서 '전교조 합법화'와 '교원처우와 교육환경 개선' 요구/한총련 소속 대학생 7천여명 "5·18학살자 전원처벌, 미국의 공개사과"등 요구시위/외국인노동자대책위 회원 1백여명 명동성당 앞길에서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벌여

<해설>=====

국가보안법은 언제까지 정권의 방패막이인가? 지난 22, 24일 선고로 지난해 11월 신문지면을 떠돌았던 범민련 관련자 29명에 대한 재판이 일단락되었다. 재판부는 강희남 상임의장등에게 국보법상 이적단체 구성, 가입을 인정하면서 징역1년을 선고했으며 대부분 관련자를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몇 년전까지만해도 생라조차 할 수 없었던 형량이다. 그러나 이 사실은 바로 당시 필수한 상황에 의해 범민련 조직사건이 얼마나 어이없게 조작되었는가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인권하루소식

<이달의 주제-노동권>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을 위태롭게 한다. -ILO 제26차(44년) 총회, 필라델피아 선언중에서-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기무사비리, 법정에서 밝혀질까 기무사, 시사뉴스 상대로 가처분신청

국군기무사가 내부비리를 고발한 주간<시사뉴스>(발행인 강신한)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시사뉴스사도 기무사의 불법적 위협만 해소되면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준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기무사비리가 과연 법정에서 밝혀질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기무사는 지난 16일 주간<시사뉴스>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시켰다. 이에 따라 28일 오후4시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4부(담당판사 윤여현)는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번째 심리를 가졌으며, 6월4일 2차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시사뉴스>는 기무사 관련 기사가 실린 77, 82호를 반포할 수 없게 되며, 이후 발행되는 <시사뉴스>에서 기무사관련 기사를 인쇄 실을 수 없게 된다. 한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강신한 발행인은 이번 주중 검찰에 출두할 예정이

나, 납치기도 등 기무사의 위협에 대한 우려때문에, 적절한 시기를 선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사뉴스사는 "발행인을 붙잡기 위한 기무사의 추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고, 실제 지난 22일에는 이러한 시사뉴스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발행인의 처조카 사위인 최수환(40)씨에 따르면, 22일 낮 최씨의 집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두 남자가 찾아와, 딸 윤영(12)양에게 이것저것 묻고 갔으며, 오후8시경엔 "시경과 기무사 합작"이라고 소속을 밝힌 익명의 남자가 전화를 걸어왔다고 한다. 그 남자는 발행인과 관련해 만나줄 것을 요구했고 이를 최씨가 거부하자 "당신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시사뉴스사는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준다는 발행인의 의지를 미행·감시·추적 등 위협적인 분위기로 가로막는 기무사를

규탄한다"며, 진실확인에 최선을 다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법정에서의 진실규명에도 일정 정도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여 <시사뉴스> 관계자들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 77, 82호에 실린 기무사비리의 제보자들이 대부분 기무사의 전·현직 요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신분적, 신체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올바른 진술을 해 줄 것인가 의문시되고 있다. 또한, 인권보호 측면에서 취재원 보호도 진

실규명에 한계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사뉴스사로서는 앞으로 진행된 민·형사재판의 전망이 불투명하다.

또한, 이번 재판은 상황에 따라 이러한 내부제보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논쟁을 촉발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부제보자의 법적보호를 위한 입법정원은 이미 14대 국회에 제출된 바가 있으나, 14대 국회가 마감하면서 법안이 자동 폐기되었고, 다시 15대 국회에 재청원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지문(서울시 의원)씨는 "제보의 진실여부는 제3의 기관에서 규명하고, 사실일 경우, 제보자를 보호·장려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시대 인권상황판 <인권하루소식>, 인터넷의 바다로 드디어 항해를 시작합니다.

접속주소 <http://www.hnc.net/~rights/>

<인권하루소식>이 오늘부터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인권하루소식>은 지난 93년 9월 7일 창간, 주5일 발행하는 국내최초의 인권전문주간지로서 오늘도 계속되는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인권하루소식>을 통해 해외인권단체들은 물론 해외동포까지 빠르고 정확한 한국의 인권상황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감시활동으로 인권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게 됩니다.

<인터넷 인권하루소식>에는 한글판 인권하루소식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주간으로 영문판 KOREA HUMAN RIGHTS WEEKLY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진보적인 한국의 민간단체와의 연결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인권정보센터를 신설,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인터넷 인권하루소식>은 시험운동을 거쳐 6월1일 본격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주요 공판 안내

- 5월30일(목) 최병호, 업무방해, 오전10시, 단독2부, 321호 선고 정병득외2, 업무방해, 오전10시, 단독8부, 317호 속행
 - 5월31일(금) 권순미,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425호 선고 민병래,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425호 속행 양규현, 일반교통방해등, 오후2시, 단독4부, 421호 속행 허인회, 국보법, 오후2시, 단독9부, 317호 속행
- 이상 서울지법 형사국

'좌경소탕작전' 이번엔 전학투런 국보법 혐의로 2명 연행

지난 3월 사회주의학생연합의 16명이 구속되고, 5월 들어 전국학생정치연합 관련자 13명이 구속된 데 이어, 전국학생투쟁연합(전학투련, 의장 여성오) 관련자들이 경찰에 연행·구속되었다. 이러한 연행과 구속은 지난 5월 초 '좌경학생 소탕방'이라는 정부발표를 전후해 잇달아 진행되고 있으며, 구속자들에게 모두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등의 혐의가 적용되고 있다. 지난 23일 연행된 성균관대 총학생회장 명원창(교육

학과 4년)씨와 27일 밤11시 경 연행된 승의여전 총학생회장 현인숙(서울지역전문대학총학생회협의회 회장)씨의 경우도, 전학투련 결성에 관련된다는 이유로 국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행 당시 함께 있었던 동료들에 따르면, 명원창씨는 학교를 나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승용차로 쫓아온 사복경찰들에게 연행됐으며, 현인숙씨는 교문 앞에서 잠복중인 경찰에 연행됐다. '좌경소탕작전'의 새로운 대상으로 떠오른 전학투련은 올 2월말 서울대, 성대를 비롯한 몇몇 대학 학생회가 모여, 상반기에 있을 총선과 교육개혁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이다.

회의에 참가하는 이정운(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정책연구부장)씨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회의인데도 정부와 언론등이 관심을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며 "특히 정부 보고서에는 단순히 주목문제만 다루고 있어 회의의 전반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민간위원회의 참가자들은 6월3일부터 14일까지 회의 기간동안 여러 개발도상국들과 연대를 통한 공동 방안을 모색하게 되며, 이후 국내에 돌아와 보고대회와 워크숍을 열 계획이다.

여성농민, 생산 주체로 복지비 지출 향상 촉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강유순, 전여농)은 28일 오후 2시 전국농업기술자협회에서 '여성농민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확보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가졌다. 윤금순(전여농 정책위원장)씨는 주제발제를 통해 "농업생산의 질반을 담당하는 여성농민을 농업의 생산주체로 인정하고, 농업발전의 한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책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야별 토론에서 '사회복지예산과 여성농민'에 대해 발표한 이영환(성공회대)교수는 농민의 각종 생활 편의시설에 만족도가 10~20%를 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농민복지 향상은 복지비 지출수준의 향상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보았다. 복지예산 확충방안으로 ①조세개혁을 통한 세수증대 ②국방비등 세출 조정 ③복지제도의 구조적 조정을 통한 가용자원 활용 등을 들었다.

"정부, 관심 필요" 주거회의 참가자들 출국

제2차 세계주거회의(HABITAT II)를 위한 한국 민간위원회(공동대표 하성규, 민간위원회)는 28일 이스탄불 본 회의의 활동 계획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하성규대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적절한 주거"등 세계주거회의의 주제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주거권이 인간이 가지는 권리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의 참가자들은 회의 기간동안 정부대표의 발언에 대해 모니터링을 물론 현재 국내에서 벌어지는 강제철거에 대한 사진전과 자료전시를 통해 국내 주거현실을 알릴 예정이다.

인터뷰: 우도로집회를 다녀온 김경남목사 "그들은 들뜬척 버려졌다"

41년 강제징용 당해 집단거주하던 우도로마을 한인들이 50여년 동안의 삶에 터전을 빼앗길 위험에 처했다. 이에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개최한 26일 집회에 직접 다녀온 김경남(KNCC 인권위원회 사무국장)목사를 만났다.

-현재 우도로마을 주민들의 생활은 어떤가?
=마을은 약 6천여명으로 강제 징용당시 약 1천8백여명이 이주했다. 현재는 80세대 3백80여명이 살고 있으며 징용자 4명을 포함해 5세대까지 함께 살고 있다. 그들은 빈민이 아닌 50여년 동안 삶을 꾸려온 한인이다.

-26일 집회상황을 전해 달라.
=약 6백여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한국인론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일본 방송국·인론에서는 많이 왔다. 이날 집회에서 나와 황백현(국인운동시민연합 전국의장)씨가 참석해 연대사를 전하자 주민들이 반가움을 표시했다.

-우도로마을 사건의 가장 문제점을 무엇이라고 보는가?
=첫째로 전후배상의 문제이다. 일본정부는 전쟁책임의 면하면서 대기업에 땅을 판 것이다. 둘째는 일본사회에서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각을 여지없이 보여준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거권의 문제이다. 재판부의 화해·조정안에서 평당 11만원을 내놓겠다는 것은 일본땅값을 생각할 때 재판에 전후 산골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도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압박은 무엇인가?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압박은 들뜬척 버려졌다는 것이다. 그들은 50여년 동안 일본정부에 세금을 내면서 살아온 일본의 한부분이었다. 하지만 전기와 상수도 시설이 들어온 것은 87년이였다. 이것만 봐도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 있지 않은가.

-이후 우도로마을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서명과 모금운동을 벌이고 방문단을 조직해 지속적인 연대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세계 주거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관심을 모을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벌일 것이다.

-우도로를 방문한 소감을 말해 달라.
=부끄럽고 미안했다. 그동안 한국운동단체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아니 외면한 것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우도로마을에는 초종런계 사람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한국에 이 문제로 상의할 수가 없었고 우리 또한 알아도 도와주지 못했을 것이다. 민족 분단 최대의 비극중의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라도 힘이 되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달의 주제-노동권>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을 위태롭게 한다. -ILO 제26차(44년) 총회, 필라델피아 선언중에서-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자고나면 또 구속, 내일이 두렵다 서울·대구지역 국보법 위반혐의 12명 구속

나사청 회장등 3명 구속
나라사랑청년회 회장 서형준(32·직장인)씨를 비롯한 서미연(30·어린이집보육교사, 전 사무처장), 황윤미(28·학원강사, 조통위 위원)씨 등 3명이 28일 저녁 8시30분경 서울시경 보안과 형사들에 의해 남영동 대공본실로 연행되었다. 연행당시에는 임의동행행식을 취했으나, 이튿날 긴급구속장이 발부되었다.

또한 28일 저녁 10시30분 야현동에 위치한 나라사랑청년회(나사청) 사무실에 시경소속 형사 20여 명이 들이닥쳐 컴퓨터와 내부소식지 <장산꽃매>(주간, 현재 344호 발행)를 전부 회수해 갔다고 한다.

나사청은 88년 결성되었으며 회원은 2백여명으로 주로 직장인들로 이뤄져 있다. 해방노동자통일전선 사건 대구지역등에서는 29일 새벽 비슷한 시각 두 사건으로 9명이 연행되었다. 안기부 대구·경북지부와 대구지방경찰청은 91년 11월 「해방노동자통일전선」을 결성한 혐의와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 「해방노동자통일전선」 실행위원장 김영복(35·노동자), 총무부장 박진석(36·대구지역 택시노조 조합장), 오상용(31·대구구로 지국장, 대구진보청년회 회원)씨와 김영덕(32·노동자, 경남 함안군)씨 등 4명을 긴급구속한다고 발표했다.

트리거나 통신상의 활동은 문제삼는 것은 총선 이후 민중운동진영을 와해하기 위한 탄압의 연속선상에서 파악할 것이다. 97년 대선을 향한 사전정치작업인 것 같다"고 평했다.

이로써 5월 중순들어서만 도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28명이며, 9명이 수배중이다.

**경원대 협상 제자리
학교측, 합의된 의제 거부**
경원대협상이 제자리걸음
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고발을 취하할테니 농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을 풀고 대화하자"는 학교측의 공문에 따라, 29일 오후 2시 열린 경원대협상은 의제 상정 부문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학생들은 "지난 7일 협상에서 합의된 징계철회·총장사퇴 등의 5가지 의제를 갖고 협상할 것"을 주장했으나, 학교측은 "총장사퇴와 이 사태의 발단이 된 4인 교수의 사과는 의제로 삼지 못하겠다"며, 모든 것을 원상복구시키지 않으면 협상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했다.

이날 학교측 요구에 따라 본관점거농성을 해제하고 협상에 나섰던 경원대생들은 협상결렬과 함께 "학교측이 고발을 취하지 않으면 다시 본관농성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고발이 취해질 경우, 제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인권하루소식> 세계인들과 호흡하고 싶습니다

접속주소 <http://www.hnc.net/~rights/>

<인권하루소식>이 오늘부터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인권하루소식>은 지난 93년 9월 7일 창간, 주5일 발행하는 국내최초의 인권전문맥스신문으로 오늘도 계속되는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인권하루소식>을 통해 해외인권단체들은 물론 해외동포까지 빠르고 정확한 한국의 인권상황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감시활동으로 인권증진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할 수 있게 됩니다.

<인터넷 인권하루소식>에는 한글판 인권하루소식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주간으로 영문판 KOREA HUMAN RIGHTS WEEKLY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진보적인 한국의 민간단체와의 연결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인권정보센터를 신설,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인터넷 인권하루소식>은 시험운영을 거쳐 6월1일 본격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가족이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 재일동포 장기수 이성우씨, 행정심판 제기

「천주교 조각간첩진상규명 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승훈신부등, 간첩대책위)는 지난 20일 국보법과 반공법 위반으로 11년동안 수감되었다가 95년 출감한 이성우(71·재일동포)씨에게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진 것에 대해 안우만 법무장관을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작년에 비후성 심근 비대증등의 질병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출감했다. 하지만 출감 이후 계속적으로 가족에게 보내달라는 이씨의 요구에 법무부는 지난 4월3일 '재법의 우려가 있는 수감자는 출국을 할 수 없다'며 출국금지기간을 10월4일까지 연장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오창래(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씨는 “이씨는 5·6공 군사정권때 만들어진 조각간첩”이라며 “사법당국은 이씨가 간첩이라는 몰적 증거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씨는 경남 인양 출신으로 17세때인 43년 2월 강제 징용되어 일본으로 끌려간 후 일본에 거주하게 된 재일동포이다. 또한 76년 조총련에서 전향절차를 밟아 민단에서 활동을 했으며, 84년 한국에 사업차 입국했다가 조총련계로 활동할 당시의 북한방문등이 문제가 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씨는 현재 부산 메리놀병원 옆, 보증금 50만원에 월 10만원의 작은 방을 얻어 혼자 살고 있다.

그는 “행정심판이 어떤 식으로 결정되든지 고등법원에 제소할 예정”이라며 투지를 보였다.

산재은혜 1천4백66건 노총 의료보험 통계분석

한국노총이 지난 13일 '94년 의료보험통계연보'를 분석·발표한 바에 따르면, 의료보험부담금이 환급건수를 통해 드러난 산재은혜건수는 1천4백66건이며, 산재은혜를 적발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실제 은혜건수는 이보다 5배 많은 7천3백3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들이 산재를 은폐하는 주된 이유는, 산재다발업체로 지목될 경우 시설개선 명령을 받아 작업환경 시설개선투자를 해야하는 부담이 있고, 산재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무제해운동의 무리한 추진이 산재은혜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노동자 측면에서 보면, 산재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이후 장해급여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재발시 재요양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따라서 산재은혜를 막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산재발생시 사업주의에 노조나 산재노동자, 제3자 등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국제연대 계기될 것” AI, 웨이씨 석방 캠페인

앰네스티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신부, AI)는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인 웨이 정생(46·중국 인권운동가)씨의 석방을 위한 콘서트를 열고 더불어 중국의 인권상황을 국내에 소개할 예정이다.

6월8일 대구 경북대 대강당에서 열린 콘서트를 준비하는 오완호(AI 사무국장)씨는 “외국에서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사람을 위해 마련한 최초의 콘서트”라며 “ 그동안 한국은 인권문제로 여러나라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 현재 한국의 인권문제가 해결

된 것은 아니지만 이 콘서트를 통해 국제연대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이는 계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웨이 정생씨는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중국의 인권운동가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인권실태를 폭로한 혐의로 14년형을 복역하고 93년 출감했다. 하지만 94년 중국 공안원들에 의해 다시 끌려가 행방이 묘연해진 상태에서 가족들과 친척들이 제기한 실종신고와 탄원을 통해 공안당국에 의해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을 뿐이다. 현재까지도 그의 행방을 알지 못하며 다만, 북경교외의 요양소에 감금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인터뷰: 조각간첩 이성우씨

“내 자식들은 ‘한국이 무섭다’고 한다”

-현재 건강상태는 어떤가?
=심장이 좋지않다. 그래서 손·발이 떨리고, 잘 걷지 못한다. 병원에 일주일에 한번씩 가야하는데 힘들다.
-구속당시 상황을 말해달라.
=전두환정권때 기상기계를 구입할 예산으로 16억달러를 책정했다. 이에 한국기상협회 회장이 일본친구 서봉호씨에게 기상기계의 수입을 제안했고, 서씨와 나는 일본에 세종기상기계(주)라는 회사를 차렸다. 그후, 84년 1월6일 한국 본사사무소를 개소를 위해 2천여 만원 어치의 기상기계를 갖고 입국했다가 그날 공항에서 구속됐다.
-구속이후 어떤 일들이 있었나?
=면회와 변호사 접견이 금지된 채 50여일을 안기부에 감금되었다. 자술서를 쓰면서 수사관이 한 말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내가 혐의를 부인하니, 한 수사관이 일본에서 구정성모단으로 와서 고향 내려갈 때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지 않느냐,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 보통 길보다 갑자기 넓어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전쟁 때는 활주로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일본에 가서 말한 적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죄다'라고 했다.

-재판을 받을 때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방청객들은 전혀 없었고, 검사와 판사는 나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청석에 앉아 있던 안기부 직원에게 물었다. 검사가 사형을 구형하고 판사가 처음으로 나에게 물었을 때 그저 ‘억울합니다’라고만 말했다.
-가족들과의 연락은 되는가?
=연락을 하고 있으며, 지난 15일 병원을 퇴원할 때 차와 아들딸이 한국에 와서 만났다. 하지만 가족들이 김포공항에 도착한후 세관직원이라며 약20분 동안 이것저것을 물었다며, 내 자식들은 한국이 무섭다고 한다.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해 놓은 상태의 현 심정은?
=나는 더이상 거동도 하지 못하는 늙은 노인이다. 이런 사람을 출국금지조처를 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일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어린이 성폭력 78%, 주변사람 범행

서울시 주최 성폭력 세미나, 대책 마련 시급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 주관으로 30일 오후2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어린이 성폭력 예방 및 대책마련을 위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안전한 어린이, 건강한 서울’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지난 1월 25일 『서울여성위원회』의 제안으로 마련된 서울시 주최의 첫번째 토론회다.

최영애 소장은 성폭력 실태보고를 발표하며 “만13세 미만 어린이에게 가해진 성폭력이 전체 성폭력의 30%를 차지하며 그중 70%가 아는 사람에게 의해 일어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상당정험에 의하면 언제, 누가,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따라 피해후유증의 극복이 크게 달라졌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마련되길 희망했다.

인권협 대표단, 경원대 중재 나서

경원대 총장 “학교측 입장만 강변”

경원대 사태의 중재를 위해 한국인권단체협의회 대표단이 30일 오전 경원대학교를 방문했다.

김승훈(천주교 인권위)신부와 이명남(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와 인권위원회)목사, 박수근(민변)변호사 등 3명은 오전11시 반경부터 1시간반 가량 김원섭총장과 면담을 갖고 △고소·고발취하 △재적생들의 조속한 복적 △학생들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일체 묻지 말 것 △고 장현구·진철원 학생에 대한 사과와 추모사업에 협조할 것 등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에 김총장은 “먼저 학생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 면 복적문제와 고발된 학생들에 대한 탄원서의 제출을 검토하겠다”며 “고 장현구·진철원 학생에 대해 현재 학교측이 공식 조문을 갈 수 없지만 때가 되면 분명히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상담소 통계자료에 의하면 95년 한해동안 1천21건의 상담중 어린 성폭력이 전체 성폭력의 30%를 차지했으며 이 중 8-13세 어린이의 피해가 201건으로 65.5%, 0-7세 유아의 성폭력이 34.5%를 차지했다.<관련자료 2면>

이는 신고율이 실제 발생 건수의 2.2%에 지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커다란 사회적 문제이다 특히, 아는 사람에게 의한 성폭력이 전체 어린이 성폭력의 78%나 차지했으며 이중 친족에 의한 성폭력도 30.5%를 차지해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청된다.

이에 대해 소은희(소아정신과 전문의)의사는 “정신적으로 미성숙된 아동에게 가해지는 이러한 성폭력은 육체적·정신적으로 커다란 후유증을 낳는다”며 “특히 가족에 의한 성폭력은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의 손상과 모호한 경계, 역할혼동 등 보다 많은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정책적 대응에 대한 주제발표를 한 이종길변호사는 형법 제305조에 의해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간음하거나 추행을 한 자는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폭력은 그 사실 자체의 입증에 비해 학생들은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이를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박수근변호사는 “김총장이 1시간 이상 학교측 입장을 강변하는 등 중재단에 대해 협상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경원대 문제해결을 위해 주위의 깊은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성폭력이 3백7건인 30.1%로 나타났으며 이중 8-13세 어린이의 피해가 201건으로 65.5%, 0-7세 유아의 성폭력이 34.5%를 차지했다.<관련자료 2면>

이는 신고율이 실제 발생 건수의 2.2%에 지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커다란 사회적 문제이다 특히, 아는 사람에게 의한 성폭력이 전체 어린이 성폭력의 78%나 차지했으며 이중 친족에 의한 성폭력도 30.5%를 차지해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청된다.

이에 대해 소은희(소아정신과 전문의)의사는 “정신적으로 미성숙된 아동에게 가해지는 이러한 성폭력은 육체적·정신적으로 커다란 후유증을 낳는다”며 “특히 가족에 의한 성폭력은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의 손상과 모호한 경계, 역할혼동 등 보다 많은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정책적 대응에 대한 주제발표를 한 이종길변호사는 형법 제305조에 의해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간음하거나 추행을 한 자는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폭력은 그 사실 자체의 입증에 비해 학생들은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이를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번 호사는 증거수집을 위해 의료보호 및 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시립병원 활용과 민간 경비업의 설치 운영 활성화, 이웃감시와 시민순찰운동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상담소측은 성폭력 추방을 위해 우선,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 △어린이, 부모, 교사, 경찰등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프로그램의 정례화 △성폭력 상피화물 조장하는 각종 매체와 음란물을 규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법적 차원에서 △성폭력 특별법에 친족의 범위에서 벗어난 의붓아버지를 포함할 것을 강조했다.

나사청 구속자석방 농성 서울청년단체 30일부터

나라사랑청년회(나사청)는 회장 서형준(32)씨의 회원 2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된 지 하루만인 29일 저녁8시 비상확대회의를 갖고 대책위를 구성키로 결의했다. 회의에는 60여명의 회원이 참석해 그간의 상황보고와 이후 대응에 관해 논의했다. 나사청은 30일부터 1차적으로 10일간 나사청 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인 다. 서울민주청년단체협의회(의장 전상봉)도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나사청비대위와 공동으로 이번 공안탄압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한편 서형준씨등 3명은 30일 국보법 위반 혐의로 용산경찰서 등에 구속·수감되었다.

구독료! 아래 지로로 납부를

성실한 구독료 납부로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인권하루소식>에 힘을 주십시오.

지로번호: 7618848

<자료> 어린이 성폭력의 실태 및 특성

-95년 1년간 성폭력상담소 접수 피해 사례-

1.피해유형

피해유형은 크게 강간과 성추행으로 나뉜다. 전체 성폭력 피해 상담중 어린이 성폭력은 3백7건으로 30.1%를 차지했고, 그중 어린이의 피해가 2백1건으로 65.5%를, 유아가 1백6건으로 34.5%를 차지했다.

또한 일반 피해유형은 강간이 성추행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 어린이의 경우 성추행이 61.2%로 강간의 38.8%보다 좀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

피해자의 95.4%가 여성이고 가해자의 99.4%가 남성이다. 따라서 성폭력은 주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는 남성이 여성에게 행하는 폭력임을 알 수 있다.

3.가해자와의 관계

어린이성폭력의 경우 78%가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했으며, 모르는 사람에 의한 피해는 19.6%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아버지나 친오빠 등 친족에 의한 성폭력이 1백1건이나 차지해 친족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4.주변의 대응방식

부모가 무기력해지고 목인방치하거나 심지어 가해자를 두둔하는 태도에서 역시 친족 성폭력의 경우

13.7%이고 가족의 아는 사람일 경우 0.6%, 모르는 사람일 경우가 5.6%로 나타나 친족 성폭력의 경우 일관되지 못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법적 측면

어린이성폭력 고소율은 상담전수의 19.2%로, 일반 상담의 전체 고소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소가 가능한 요인으로는 피해자 본인의 의지와 증거(증인)확보, 가족내 지원자 확보로 인해 가능하며 고소하지 않는 이유는 증거 불충분과 고소시효를 놓친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6.남자어린이 피해

95년 남성피해는 전체 일 반상담 중 49건으로 4.8%였다. 그리고 남자어린이 피해도 14건으로 지난 92년의 2%에 지나지 않았으나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어린이의 경우 여자 어린이와 비슷한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성인이 된 후 또다른 가해자가 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피해자와 가해자 나이 (아래 표 참조)

구독료는 아래 지로로

761848

교육개혁 1년 변화 전무 전교조, 교육주체 참여 요구

5·31 교육개혁안 발표가 1주년을 맞았지만, 1년이 지난 학교현장의 평가는 긍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4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해숙, 전교조)이 전국교사 1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서도 교사들의 50%가 "교육개혁 추진이후 학교현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 30일 전교조는

△학교운영위와 관련된 민주적 운영의 문제 △종합생활기록부 도입의 문제점 △교육 불평등의 초래 △교육 재정 운용방침 미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학교운영위에 학부모·교사·학생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적절한 교육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다양한 교과과정과 교육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생부는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행사와동정○

□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투쟁 설명회

- 일시:5월31일(금) 오후4시
- 장소:한국통신노조 제1교육관(766-4020~3)
- 주최:공공부문노조 대표자회의(879-0057~8)

□ 학생운동 탄압 저지를 위한 전국학생투쟁연합 투쟁위원회 기자회견

- 일시:5월31일(금) 오후1시
- 장소:연세대학교 도서관앞
- 주최:서울대 총학생회등 18개 총학생회와 서울 전문대 총학생회 협의회(760-1411)

□ 공공부문노동조합 대표자회의

- 일시:6월2일(일) 오후1시
- 장소:보라매 공원
- 주최:공공부문노조 대표자회의(879-0057~8)

□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발족 및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법률상담소 개소식

- 일시:6월3일(월) 오전10시
- 장소:서울지방변호사회관(신축회관 1층)
- 주최:서울지방변호사회(522-9100)

□ "지방언론의 현황과 발전방향" 토론회

- 일시:6월4일(화) 오후2시
- 장소: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
- 주최:바른언론을 위한 시민연합(734-4100)

□ 제17기 언론학교 수강자 모집

- 일시:6월18일(화)-7월27일(토)까지
- 접수기간:6월17일(월)까지
- 회비:일반인 7만원(「말」 정기구독자 6만원)
- 장소:민주언론운동협의회 교육관
- 주최:민주언론운동협의회 언론학교(326-1252)

□ 가톨릭 청년 백두산 순례단 모집

- 일시:7월7일(월)-13일(토)
- 접수기간:5월31일(금)까지
- 주최: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사무국(3672-0251)

□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정신대 할머니들이 모여 생활하는 나눔의 집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자원봉사 내용은 할머니들에 대한 봉사에서부터 정신대운동 홍보등 다양하다. 문의 0347-64-0064.

가해자 피해자	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미상	계
유아	5	10	34	51	6	106 (35.2%)
어린이		9	39	135	18	201 (64.8%)
계	5 (1.6)	19 (6.2)	73 (23.8)	186 (60.6)	24 (7.8)	307 (100.0%)

인권하루소식

96년 6월

(제655호 - 제674호)